

연구보고서 96-30

인쇄쪽수: 309쪽

인쇄부수: 1,000부

韓國人の「 삶의 질」: 現況과 政策課題

尹炳植 鄭宇鎭
李顯松 延河淸
韓成德 朴周憲

韓 國 保 健 社 會 研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과거 30여 년간의 지속적 高度成長을 통하여 貧困의 惡循環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민의 基本慾求(basic needs)에 대한 충족정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 온 開發戰略의 基調는 경제부문에서 量的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그 果實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全部門으로 파급되어 경제와 삶의 질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成長優先政策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量的 가치관」에 바탕을 둔 성장전략은 삶의 질의 상대적 낙후와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의 삶과 직결된 保健, 福祉, 環境, 文化部門과 社會間接資本 등이 경제수준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0년 이후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형 低成長時代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잠재력은 人的 資源의 質과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낙후된 삶의 질은 지속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老齡化와 小家族化에 따른 福祉需要의 증대와 향후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우선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量的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여 「質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지속적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균형있게 두어져야 한다.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질의 현수준 및 부문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개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關心領域 및 관련 社會指標를 선정하고 이에 의한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하였다. 세계 174개국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部門別 및 全部門의 종합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현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의 「삶의 질」 현수준을 福祉先進國이 주종을 이루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수준이 우리의 현수준과 비슷했던 시점에서의 삶의 질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1세기에 예상되는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先進化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尹炳植 研究委員의 責任下에 鄭宇鎭, 李顯松 副研究委員 등 院內 연구진과 朱鶴中 博士(韓國開發研究院 附設 國民經濟敎育研究所 所長), 韓成德 敎授(大邱大), 朴周憲 敎授(同德女大) 등 院外 執筆者的 參與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들 연구진의 연구분야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研究調整 및 總括(尹炳植)

「삶의 질」의 概念과 測定方法(韓成德·朱鶴中)

「삶의 질」과 社會指標(韓成德)

「삶의 질」의 國際比較(鄭宇鎭)

OECD國家와의 比較(李顯松)

快適한 삶을 위한 環境政策(朴周憲)

21世紀 韓國의 選擇: 「삶의 질」의 先進化(延河淸)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들은 연구진행과정에서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해 준 本院의 崔秉浩 副研究委員과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元鍾旭, 鄭京姬 責任研究員에게 感謝하고 있다. 그리고 統計資料 蒐集과 整理를 맡아준 金柔敬 主任研究員과 정진진 연구원, 원고정리와 編輯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崔鍾星 主任研究員에게도 感謝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모든 內容은 研究者들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要 約	15
第 1 章 序 論	23
第 2 章 「삶의 질」의 概念과 測定方法	29
第 1 節 「삶의 질」의 擡頭背景	29
第 2 節 「삶의 질」의 概念	32
第 3 節 「삶의 질」 測定의 方法論	45
第 4 節 「삶의 질」의 測定과 評價代案	56
第 5 節 要約과 結論	66
附 錄	72
第 3 章 「삶의 질」과 社會指標	77
第 1 節 序 論	77
第 2 節 社會指標에 의한 「삶의 질」 指標	79
第 3 節 「삶의 질」 指標體系의 構成	108
附 錄	111
第 4 章 「삶의 질」의 國際比較	139
第 1 節 「삶의 질」에 관한 既存研究의 問題點	140
第 2 節 本 研究에서의 實證分析方法	143
第 3 節 結 論	169
附 錄	177

第 5 章 OECD國家와의 比較	182
第 1 節 「삶의 질」의 構成部門	186
第 2 節 OECD國家와의 靜態的 比較	196
第 3 節 結 論	227
附 錄	229
第 6 章 快適한 삶을 위한 環境政策	232
第 1 節 序 論	232
第 2 節 環境汚染 現況	234
第 3 節 環境汚染 增加의 社會經濟的 要因	245
第 4 節 環境政策 現況 및 計劃	252
第 5 節 環境政策의 方向	260
第 7 章 21世紀 韓國의 選擇: 「삶의 질」의 先進化	272
第 1 節 序 論	272
第 2 節 「삶의 질」의 現位置	274
第 3 節 經濟成長과 「삶의 질」	280
第 4 節 「삶의 질」의 先進化를 위한 政策課題	284
第 5 節 結 論	297
參考文獻	300

表 目 次

〈表 2- 1〉 MEW推計上 加減項目의 要約	46
〈表 2- 2〉 UNRISD의 ‘生活 및 福祉水準’ 指標體系	51
〈表 2- 3〉 OECD의 基本的인 社會的 關心體系(1973)	53
〈表 2- 4〉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55
〈表 2- 5〉 「삶의 질」의 構成要件 및 評價次元	58
〈表 2- 6〉 「삶의 질」 調査에서 提示된 部門構成의 事例	61
〈表 2- 7〉 社會指標의 「삶의 질」 指標化(家族部門에 대한 例示)	63
〈表 3- 1〉 ‘認知된 實體’로서 生活內容	81
〈表 3- 2〉 生活水準의 構成要素와 指標((Bennett의 研究)	83
〈表 3- 3〉 生活水準의 構成要素와 指標(Drewnowski의 研究)	85
〈表 3- 4〉 福祉水準의 構成要素別 指標	86
〈表 3- 5〉 UN의 社會·人口 統計體系	87
〈表 3- 6〉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89
〈表 3- 7〉 Terleckyj의 「삶의 질」의 關心事와 指標(1975)	91
〈表 3- 8〉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92
〈表 3- 9〉 英國의 社會指標體系	94
〈表 3-10〉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PLI)의 構成	96
〈表 3-11〉 日本 ‘生活統計’의 章別 構成	96
〈表 3-1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의 部門構成	97
〈表 3-13〉 ‘物理的 삶의 질’의 部門別 指標	98
〈表 3-14〉 「삶의 질」의 評價分野와 評價項目	99

〈表 3-15〉 「삶의 질」의 構成部門과 關心順位	101
〈表 3-16〉 日本의 國民生活關聯 與論調査	102
〈表 3-17〉 Slottje 등의 國際比較 「삶의 질」 指標	103
〈表 3-18〉 人間開發指數 指標體系의 分野(1995)	106
〈表 3-19〉 IMD의 「삶의 질」 指標(1995)	108
〈表 4- 1〉 保健·醫療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值	145
〈表 4- 2〉 經濟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值	146
〈表 4- 3〉 教育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值	146
〈表 4- 4〉 文化·情報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值	147
〈表 4- 5〉 「삶의 질」 研究와 UNDP의 人間開發指數에서 使用한 變數比較	147
〈表 4- 6〉 韓國과 OECD國家의 保健·醫療部門 「삶의 질」 比較	153
〈表 4- 7〉 主要國의 1人當 GNP	155
〈表 4- 8〉 主要國의 GNP	155
〈表 4- 9〉 韓國과 OECD國家의 經濟部門 「삶의 질」 比較	158
〈表 4-10〉 主要國의 教育部門 變數 比較	160
〈表 4-11〉 韓國과 OECD國家의 教育部門의 「삶의 질」 比較	162
〈表 4-12〉 韓國과 OECD國家의 文化·情報部門 「삶의 질」 比較	164
〈表 4-13〉 「삶의 질」 順位가 1人當 GNP順位보다 높은 主要國家 ..	166
〈表 4-14〉 「삶의 질」 順位가 1人當 GNP順位보다 낮은 主要國家 ..	167
〈表 4-15〉 韓國과 OECD國家 全部門 綜合 「삶의 질」 比較	168
〈表 4-16〉 「삶의 질」의 現位置: 國際順位	171
〈表 4-17〉 「삶의 질」의 現位置: 百分位 點數	172
〈表 4-18〉 國際順位間의 相關係數 比較	173

〈表 4-19〉	分配와 福祉變數의 國際比較	174
〈表 4-20〉	環境과 交通部門의 國際比較	175
〈表 5- 1〉	保健·醫療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188
〈表 5- 2〉	經濟活動參加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190
〈表 5- 3〉	教育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192
〈表 5- 4〉	文化·情報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193
〈表 5- 5〉	衡平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195
〈表 5- 6〉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198
〈表 5- 7〉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198
〈表 5- 8〉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0
〈表 5- 9〉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1
〈表 5-10〉	教育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3
〈表 5-11〉	教育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4
〈表 5-12〉	文化·情報部門의 時系列 比較	207
〈表 5-13〉	所得衡平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207
〈表 5-14〉	男女平等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209
〈表 5-15〉	男女平等部門의 構成 要素에 대한 時系列 比較	210
〈表 5-16〉	우리나라 및 6,000~9,000달러 所得範圍의 OECD 事例들에 대한 部門別 統計置	215
〈表 5-17〉	1992年の 韓國, 그리스, 포르투갈의 比較	216
〈表 5-18〉	韓國의 保健·醫療部門 水準과 類似的한 OECD事例의 比較	218
〈表 5-19〉	韓國의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 水準과 類似的한 OECD 事例의 比較	219

〈表 5-20〉	韓國의 教育의 量 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220
〈表 5-21〉	韓國의 教育의 質 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222
〈表 5-22〉	韓國의 文化·情報部門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223
〈表 5-23〉	韓國의 所得分配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224
〈表 5-24〉	韓國의 男女平等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225
〈表 5-25〉	部門間의 改善의 優先順位 比較	226
〈表 6- 1〉	年度別 大氣汚染物質 排出量	235
〈表 6- 2〉	大氣汚染物質의 弊害	237
〈表 6- 3〉	主要都市 亞黃酸가스 汚染度 推移	238
〈表 6- 4〉	各國의 SO ₂ 基準値 比較	239
〈表 6- 5〉	主要都市의 年度別 먼지汚染度	240
〈表 6- 6〉	其他 主要 大氣汚染物質 汚染度(1994)	241
〈表 6- 7〉	主要都市의 年度別 降雨中酸度	241
〈表 6- 8〉	우리나라 4大 河川 水質 現況	243
〈表 6- 9〉	廢棄物 發生 現況 比較	244
〈表 6-10〉	廢棄物의 處理方法別 現況	245
〈表 6-11〉	人口指標 推移	246
〈表 6-12〉	所得增加와 에너지消費 增加	247
〈表 6-13〉	人口의 大都市 集中率 推移	248

〈表 6-14〉	産業構造 推移	249
〈表 6-15〉	環境部門 豫算의 年度別 變化	250
〈表 6-16〉	OECD國家들의 公共部門 GDP 對比 PAC 支出	252
〈表 6-17〉	公共部門의 環境支出純計 規模(OECD 基準)	252
〈表 6-18〉	1990年代 環境政策方向	253
〈表 6-19〉	亞黃酸가스 低減對策	255
〈表 6-20〉	大氣汚染物質別 自動車 排出가스量(1994)	256
〈表 6-21〉	自動車 排出가스 低減對策	256
〈表 6-22〉	大氣環境基準	258
〈表 6-23〉	廢棄物處理 現況 및 中長期 計劃	259
〈表 6-24〉	主要 世界都市의 大氣 汚染度	260
〈表 6-25〉	主要國의 大氣汚染物質 排出量 比較	261
〈表 6-26〉	外國 主要河川의 水質 現況	262
〈表 6-27〉	環境汚染 防止努力(1992)	263
〈表 6-28〉	環境汚染 程度 評價(1992)	263
〈表 6-29〉	環境投資財源 總括	268
〈表 6-30〉	環境汚染 防止産業의 比重	268
〈表 6-31〉	우리나라 公害防止技術의 等級 評價	269
〈表 7- 1〉	「保社研」과 UNDP의 「삶의 질」 指標 比較	276
〈表 7- 2〉	「삶의 질」의 現位置(國際順位)	277
〈表 7- 3〉	우리나라가 相對的 劣位에 있는 「삶의 질」 部門	278
〈表 7- 4〉	類似的 所得水準에 속하는 國家와의 「삶의 질」 比較(1994)	278
〈表 7- 5〉	分配, 福祉, 環境部門의 國際比較	279

圖 目 次

[圖 4- 1]	1人當 GNP의 國際比較	150
[圖 4- 2]	建康·醫療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154
[圖 4- 3]	經濟活動分野: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156
[圖 4- 4]	經濟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159
[圖 4- 5]	教育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161
[圖 4- 6]	綜合指標로 본 全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169
[圖 4- 7]	우리나라 「삶의 질」의 現住所: 國際順位와 點數	170
[圖 5- 1]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197
[圖 5- 2]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199
[圖 5- 3]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0
[圖 5- 4]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1
[圖 5- 5]	教育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3
[圖 5- 6]	教育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205
[圖 5- 7]	文化·情報部門의 時系列 比較	206
[圖 5- 8]	所得衡平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208
[圖 5- 9]	男女平等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209
[圖 5-10]	OECD國家 對比 韓國의 現位置	211

要 約

I. 研究의 背景

- 과거 30여 년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1995년에는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절대빈곤 계층도 현저히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소득수준의 상승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이 경제수준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量的 경제규모의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의 추구로 成長의 質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그 결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
- 우리 경제는 2000년 이후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성숙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생산성의 개념에서도 산출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국가발전의 정도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경제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질적개선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소의 투입을 필요로 함.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이를 구성하는

부문의 현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II. 研究의 方法

-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을 “個人 및 人口集團이 享有하는 物理的, 非物理的 價値의 總和”라고 정의함.
 - 즉, 객관적·물리적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심리적 생활만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임.
 -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의 현위치를 객관화된 지표를 통한 물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파악하였음.
 - 그 이유는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국제비교할 경우 객관성 및 보편성 유지의 어려움 때문임.
- 삶의 질의 물리적인 평가와 비교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經濟部門, 保健·醫療部門, 文化·情報部門, 教育部門으로 구성하였고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는 衡平部門을 추가하였음.
 - 위와 같은 구성부문으로 「삶의 질」을 파악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영역구분 즉, 사회지표의 구분체계를 참고로 함.
- 구성부문별 개별지표(表 1 참조)들을 主成分分析을 통해 삶의 질의 구성부문을 대표하는 복합지표를 도출하였음.
-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174개국의 부문별 및 전부문에 대한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여 국제비교를 행하였음.
- 또한 OECD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을 파악

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문별 지표의 구성은 다음의 <表 1>과 같음.

<表 1> 本 研究에서 사용한 「삶의 질」의 部門別 指標

구성부문별	사용한 변수
보건·의료부문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년수**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 영아생존율 영아사망률* 5세 미만의 유아사망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의사 1인당 인구비율*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식수보급률*
경제부문	1인당GNP GNP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산재사고 사망률*
교육부문	문자해독률 남녀의 고등교육 취학률(전문대 이상)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전문대 이상) 남녀의 고등학교 취학률* 고등학교 수료이상의 인구비율* 과학자 및 전문 기술인 비율* 초등학교 학생 100명당 교사수**
문화·정보부문	인구 1,000명당 신문구독수** 인구 1,000명당 텔레비전 보유대수** 인구 100명당 전화 보유대수** 인구 100,000명당 출판 도서수**

註: *는 OECD국가와의 삶의 질 비교에서 사용한 변수이며, **는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변수를 의미함. 표시가 없는 것은 삶의 질의 국제비교에서만 사용한 변수임. 174개국의 삶의 질 국제비교에서와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 사용한 일부 변수의 차이는 가용통계자료의 구득성에 따른 문제 때문임.

Ⅲ. 「삶의 질」의 國際比較

1. 部門別 國際比較 結果

- 經濟部門의 경우 1인당 GNP는 세계 174개국중 31위에 해당하며, 3위인 일본의 1인당 GNP의 23% 수준에 해당함.
- 保健·醫療部門의 순위는 59위로 비교적 낙후함.
- 文化·情報部門의 순위는 23위로 1인당 GNP순위 31위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教育部門의 순위는 28위이나 백분위점수로 볼 때 1위인 캐나다의 절반 수준에 해당함.

〈表 2〉 部門別 「삶의 질」의 國際比較

(단위: 순위)

국	가	경 제	교 육	보건·의료	문화·정보
한	국	29	28	59	23
미	국	1	2	20	10
일	본	2	33	3	8
싱가포르		17	88	39	20

註: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5장 참조

〈表 3〉 全部門에 대한 「삶의 질」의 國際順位

(단위: 순위)

국	가	국제순위	백분위 점수
한	국	29	59.96
미	국	1	100.00
스웨덴		5	91.21
일	본	8	87.77

註: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5장 참조

2. 全部門의 國際比較 結果

- 삶의 질의 全部門 綜合指數에 의한 우리의 삶의 질 순위는 174개국 가운데 29위로 평가됨.
 - 참고로 UNDP에서 발표한 1995년도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는 31위임.
- 우리의 삶의 질 백분위 점수는 60점으로 1위인 미국의 60%, 2위인 캐나다의 63%, 8위인 일본의 69% 수준에 해당.
- 우리의 삶의 질 현위치는 일본,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IV. OECD國家와의 比較

1. 「삶의 질」構成部門別 比較 結果

- 우리의 1990년대 삶의 질 수준이 OECD국가들의 과거 어느 시점의 수준에 대응하는가를 비교함.
 - 1인당 GNP는 OECD국가들의 1960년대말의 수준에 근접함.
 - 교육의 量 부문에서 우리의 수준은 1980년대 후반의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교육의 質 부문과 남녀간의 평등 부문은 1960년대의 OECD국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배부문은 OECD국가들의 1980년대말 수준에 근접함.
 - 경제활동참여의 量 부문은 OECD국가들의 1980년대 중반의 수준에 근접함.
 - 문화·정보부문은 OECD국가들의 1970년대 초반 수준, 보건·의료

부문은 1960년대말 수준임.

[圖 1] OECD國家 對比 우리나라 「삶의 질」의 現位置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部門間 優先順位

- OECD국가와의 「삶의 질」 구성부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성부문별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남녀 평등, 교육의 질 > 소득, 보건의료 > 문화·정보,
경제활동참여의 양 > 교육의 양, 소득분배

- 男女平等과 教育의 質 改善에 가장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
- 다음으로 所得의 向上과 保健·醫療 改善이 이루어져야 함.
- 文化·情報, 經濟活動參與, 教育, 所得分配 順으로 改善의 優先順位가 두어져야 함.

V. 政策課題

1. 새로운 國家發展 패러다임

- 지속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의 전반적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일반 균형적 발전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각 경제주체별로 공직윤리(奉仕), 기업윤리(淸富), 근로윤리(勤勉), 소비윤리(儉約)를 정립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함.
- 分配改善, 福祉制度의 成熟化와 함께 보건향상, 환경개선, 문화선진화 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win-win” 전략을 위한 국가장기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2. 「삶의 질」의 先進化를 위한 政策課題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情報인프라의 구축, 국민복지의 증진, 환경개선, 생활안전의 확보 등 정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정부역할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
- 分配의 改善은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복지제도는 경제성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정립
- 보건·의료부문의 개혁 및 발전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의료접근성의 및 편의성 제고,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보장 및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함.
 - 보건의료자원의 적정배분의 관점에서 1차 의료기능과 의료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의료보험은 예방·건강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모색
 - 국민보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생명공학, 의·공학 등 보건과학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
-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환경파괴의 社會的 費用을 内部化하고 환경산업을 高附加價值産業으로 육성
 - 경제정책과 환경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정부, 기업 및 가계에서 인식함으로서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고 사회병리현상을 문화적으로 치유하는 예방적 문화복지를 추구
- 생활주변에 기본적 문화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벽지, 공단 등에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
 -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등 휴식장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 레저산업의 육성이 필요
 - 이러한 문화·예술공간, 생활체육시설, 휴식·관광시설이 국토개발정책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확충되어야 함.

第1章 序論

우리가 추진해 온 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룩한 고도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던 1962년 당시의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87달러에 불과한 세계 最貧國의 하나였다.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 온 개발전략은 경제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絶對貧困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에 힘입어 絶對貧困階層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국민의 基本需要(basic needs)에 대한 충족정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현격히 향상되었고 1995년에는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이룩한 量的 經濟成長을 原動力으로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는 성공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保健, 福祉, 環境, 文化 등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부문의 質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장에 의한 量的 경제규모의 확대에 주력해 온 결과 성장의 質的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 및 수준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의 수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保健·醫療, 사회간접자본, 개인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 고도성장의 社會的費用으로 環境汚染, 交通滯症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富의 偏重, 복지재정, 산업재해, 교통사고 및 대형안전사고 등 사회안전측면의 취약성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삶의 질」과 경제수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성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관련부문간의 均衡發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과 경제부문의 先導的 성장을 통하여 그 果實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으로 과급되어 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발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60년대 초반이후 경제개발의 중점을 量的 成長에 두어왔다. 이러한 경제성장 우선의 발전전략의 추진은 계층간, 都·農간,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불균형의 심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1982년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社會開發에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우선정책의 추진과 뒤늦게 시작된 사회개발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 이후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진국형 低成長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1세기 경제장기구조상위원회, 1996).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적형태에서 기술·자본집약적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산출의 量보다는 質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숙단계에서의 경제성장잠재력은 人的資本의 蓄積과 質的 改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요소의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분배구조의 개선 및 개인존중형 사회가 실현됨에 따른 개개인의 복지수요의 다양화 등이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의 老齡化와 小家族化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활발해 지게 됨으로써 가족 대신 사회가 담당해야 할 노인부양 및 자녀양육 기능도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여건

에서의 예상되는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질」향상에 대한 국민적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기존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된 「量的 價値觀」으로부터 탈피하여 「質의 價値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자원배분의 우선순위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의 축적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추구하고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균형있게 두어져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는 단순히 소득수준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삶의 질」을 ‘個人 및 人口集團이 享有하는 物理的, 非物理的 價値의 總和’라고 정의한다면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量的, 經濟的, 物質的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이와 같이 물리적 가치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가치도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며, 물리적 가치도 量과 함께 質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量的인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주관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상승은 개개인의 욕구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절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만족은 반드시 증대한다고 볼 수 없다. 양적, 경제적, 물리적요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 중요성은遞減하는 반면 주관적 만족의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주관적 생활만족도는 물질적, 경제적풍요와 생활환경의 쾌적함도 중요하지만 이웃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심리적 충족감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所得分配의 형평정도와 不動産을 포함한 實物資産 및 金融資産의 집중정도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간 분배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富의 계층별 집중정도는 소득분배에 비해 보다 편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富와 所得의 偏重은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이며 계층간 갈등의 증폭은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며 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긴요하다는 인식이 19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의 배경일 것이다. 『삶의 질』의 세계화는 복지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의 융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보완적이고 상승적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豫防的이고 生産的인 福祉共同體를 구축하려는 것이다(국민복지기획단,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질』 현수준과 이를 구성하는 부문간의 불균형정도를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의 질』 수준과 구성부문의 위상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해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즉,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난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선택적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삶의 질』은 客觀的 생활여건의 수준뿐만 아니라 主觀的인 생활만족의 정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物理的·客觀的 지표만으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삶의 질』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객관적 척도에 의한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삶의 질의 主觀的 側面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경우, 客觀性 및 普遍性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설사 한 사회 구성원이 향유하는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이 객관적인 지표체계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객관적 지표에 의한 국가간 橫斷面 또는 時系列의 비교를 시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Gini)계수는 0.2837으로 1985년도의 0.3114, 1990년도의 0.2948에 비해 개선되었다(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도하는 것은 척도의 객관성, 타당성 및 보편성 등의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삶의 질의 국제비교를 위해 구성부문별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해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에는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操作的定義의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 또는 관심영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의 관심영역은 經濟部門, 保健·醫療部門, 教育部門, 文化·情報部門으로 구성하였다. 관심영역별 관련사회지표의 선정 기준으로는 세계 174개국에서의 統計求得 가능성과 해당지표의 部門別 代表性이 함께 고려되었다. 선정된 부문별 사회지표에 主成分 分析方法을 사용하여 加重値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부문별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全部門을 망라하는 삶의 질 종합지수도 산출하여 국가간 횡단면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현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국가간 비교에는 부문별 및 전부문 종합지수에 의한 順位와 百分位 점수도 함께 사용되었다. 삶의 질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의 百分位 점수 분포는 群集을 이루고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간의 순위는 매우 근소한 점수의 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삶의 질 점수가 上位의 국가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만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百分位 점수도 함께 고려되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을 복지선진국이 주종을 이루는 OECD회원국의 과거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5년간격으로 縱斷面 時系列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구선진국이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의 삶의 질과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示唆點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OECD회원국들의 통계는 잘 정비되어 있어 可用統計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는 경제부문, 보건·의료부문, 교육부문, 문화·정보부문의 4개 관심영역과 함께 형평부문도 고려되었다.

이 외에도 환경부문은 우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심영역일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 구득의 제약성으로 본 연구에서의 국제비교분석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마련하였다.

本 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體系로 構成되어 있다.

第2章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측정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사회지표를 통한 삶의 질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세계 174개국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별 관련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백분위 점수와 순위를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第5章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현위치를 OECD 회원국의 과거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第6章에서는 「삶의 질」측정에서 감안하지 못한 환경부문의 현위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의 현황을 서술하고 향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第7章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21세기의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사회 발전전략 및 삶의 질 선진화 비전을 제시하였다.

第2章 「삶의 질」의 概念과 測定方法

第1節 「삶의 질」의 擡頭背景

근대적인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우리국민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범국민적인 개발의지의 집약으로 이룬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과정은 국민의 여망과 기대의 상승을 수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에 따르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부조화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초기에 동의어로 볼 수 있었던 經濟成長과 國民福祉 내지 삶의 질은 우리의 위상이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더욱 심한 괴리를 나타내고, 일반국민은 급상승하는 1인당 GNP가 누구를 위한 무엇인가를 반문하기에 이른 지 오래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성장의 과실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의 세계화(대통령 비서실, 1995년 3월 23일)는 국가 발전목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삶의 질은 그 용어 자체가 일반대중이 흔히 사용해 온 것으로서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며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계의 전유물도 아니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염원은 끊임없이 삶을 영위해 온 인류가 추구하여 온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계는 최근에 「삶의 질」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일반에 있어서도 삶의 질

은 모두의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에 관한 이 같은 학계의 연구경향과 사회적 및 정치적인 관심의 대두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으나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화폐가액으로 평가한 國民總生産(GNP)개념이 국민 개개인 및 국민전체의 복지 또는 「삶의 질」을 표시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경제학 및 관련학계의 연구경향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겨진다. 즉, 시장거래를 기본원리로 하여 작성되고 있는 기존의 國民計定體系를 가지는 그 개념상의 결함과 추계상의 문제점²⁾으로 인하여, 생산물의 양적증가보다는 보다 나은 사회적 여건, 증진된 복리 또는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욕구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실증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새로운 계정체계에 대한 필요가 이 방면의 연구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증진적인 항목과 복지저해적 항목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국민총생산개념이 지니는 개념상의 결함과 문제점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본장 제3절 참조) 福祉國民總生産(Welfare Output), 經濟的 福祉測定(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純國民福祉(Net National Welfare, NNW), 純經濟的福祉(Net Economic Welfare, NEW), 環境計定(Green GNP)³⁾ 등이며, 이러한 개념이 지닌 공통점은 기존의 국민

2) 국민총생산이 지닌 개념상의 결함과 추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3) 이들 계정은 학자별로 그 명칭은 상이하나, 기존의 국민총생산과 같이 모두가 시장거래를 가정하여 추계되어 單一價額으로 집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Green GNP는 흔히 '綠色國民總生産'으로 부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국민계정에 환경관련 항목을 부가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계정처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環境計定'으로 칭한다.

총생산과 같이 화폐환산에 의한 集計量이라는 점이다.

둘째, 성장과 발전의 성과 및 내용을 이루는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대두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들이 사회구성원의 삶(생활)을 규정짓는 사회적 여건 또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들과는 정의 함수관계를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반성과 학계의 실증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주요국면을 다루는 상이한 과학의 관심영역이 ‘삶의 질’은 물론 복지중시적인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한 사회적 여건을 관심영역별로 체계화하여 관련변수(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하여 삶의 질을 나타내는 틀로서 이른바 ‘社會指標’를 고안하게 되었다. 사회지표를 통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국민계정체계와는 달리, 측정단위가 상이한 지표에 의하여 또는 개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수로 표시하는 등 비화폐적인 측정치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경향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부문과 부문별 지표를 선정한 후 이들 지표를 계량적으로 종합지수화하여 국가별(UNDP, 1995; Partha & Martin, 1992; Slottije, et al., 1991)로 또는 각국의 대도시별(Sufian, 1993)로 『삶의 질』의 순위를 매기거나, 국내지역간의 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박성복, 1996),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조사⁴⁾ 등이 국제기관과 국내외의 관련학계, 그리고 여론조사조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셋째, 발전전략의 진화과정에 있어서 ‘삶의 질’이 발전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國際聯合이 제시했던 발전목표가 1960년대의 단순한 ‘경제성장’에서 1970년대의 성장을 통한 재분배의 논리에 의한 ‘成長과 衡平의 調和’로, 그리고 1980년대

4)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국민의식조사에 대하여는 제3장 참조

에는 저개발국의 빈곤처방으로서 ‘기본생활요건의 충족’과 1990년대의 양극체제 해체 이후에 추구한 ‘국제경제의 신질서’, 그리고 인간존중의 삶의 질⁵⁾ 등으로 변화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발전전략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다. 즉, 지난 30여 년 간에 걸쳐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1993년 현재의 우리나라의 GNP규모와 교역액은 다같이 세계 12위에 해당한다⁶⁾. 그러나 국민의 전반적인『삶의 질』과 이와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 환경부문의 지표는 경제총량규모에 걸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⁷⁾.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경제성장과 균형·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의 선진화’는 우리의 발전전략상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진화라고 할 것이다.

第2節 「삶의 질」의 概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삶의 질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문헌 가운데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즉, 몇 개의 지표에 의하여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측

5) 1995년 3월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삶의 질 향상이 선·후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 목표임을 표시하고 있다.

6) 199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과 교역액은 각각 3,310億달러와 1,660億달러이다(통계청, 1995).

7) 35개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규모를, 국제평균기대치(동일 수준의 국가에서 기대되는 GDP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율)에 대한 실제치의 비율로 보면 1993년 현재 보건·의료부문은 9.9%, 사회보장·복지부문은 12.9%에 불과하다(延河淸, 1995).

정하는 연구물⁸⁾은 적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정립이 없이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 같은 지표계열을 미리 가정함으로써 삶의 질이 어떤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할 때가 허다하다. 최근에 UN대학 발전경제연구소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보고서(Martha & Amartya, 1993)에서 삶의 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논문이 삶의 질의 개념을 정립하기보다는 복리(well-being)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으면 통계적 실체로서 삶의 질을 측정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절에서는 먼저 삶의 질의 語義인 개념과 기존 연구 문헌에 나타난 개념을 예시한 후,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受容能力 접근방법에 의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다음, 비록 한정적이나마 삶의 질의 개념을 윤곽 짓고자 한다.

1. 「삶의 질」의 語義와 例示的 概念

가. 「삶의 질」의 語義

국어사전(한국어사전편찬회 편, 1986)에 의하면, ‘삶의 질’에서, 목숨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삶’은 명사로서 살아있음, 살아있는 현상, 살아나가는 일 등을 의미하고, ‘質’은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질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타고난 성질, 됃됨이의 바탕, 천성 등을 뜻하고, 둘째로는 ‘低價品이라 質이 안 좋다’는 표현과 같이 어떤 사물의 유용성, 내용의 좋고 나쁨, 가치, 등

8) 예컨대 1인당 GNP, 기대여명, 의사당 인구수, 문맹률 등등의 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물을 의미한다.

급, 속성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끝으로, ‘량보다는 質이 우선이다’라는 문장의 예와 같이, 철학적인 해석으로서 어떤 사물현상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의 유기적인 통일에 기초한 그 사물현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가는 일로서 삶의 질을 우리말 사전이 풀이한 바에 따라 해석한다면, 첫째, 삶의 질에서 ‘질’은 사람 됨됨이의 바탕으로서, 사람의 질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德目⁹⁾을 의미하여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사물의 질을 뜻하는 의미에서 삶의 질을 유추한다면, 삶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지닌 유용성, 내용의 좋고 나쁨, 가치, 등급, 속성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효용으로서 삶의 질이다. 끝으로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삶의 질은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삶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 지닌 어의를 부연한다면, 개인 및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양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넘어서 질적으로 ‘보다 좋은’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질이라는 표현에서 ‘질’은 규범적인 개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삶의 질』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語義적으로 보아 그 함축하는 바를 종합한다면, 삶의 질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하겠다.

나. 『삶의 질』의 概念의 例示

개인 및 인구집단에 대한 삶의 질의 연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생

9) 사람이 갖추어야 할 德目(virtues)을 나타내는 용기, 절제력, 정의감, 관대함, 온유한 기질, 진실성, 우정, 선악의 판단력, 현명함 등을 의미한다 (Martha, 1993; Martha & Amartya, 1993).

기는 문제 또는 과제는, 첫째, 삶의 질의 정의 또는 개념이 무엇인가, 둘째, 삶의 질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셋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일 것이다. 이중 둘째 및 셋째의 과제에 대하여는 국제기관과 관련학계에서 행한 연구물이 적지 않다. 즉, 1인당 GNP, 期待餘命, 醫師當 人口數, 文盲率 등등의 물리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의 수준을 주로 물리적 요건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연구물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물의 대부분은 삶의 질의 정의나 개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이 그 수준을 측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언급하였다 하여도 연구내용과 관련되는 개념만을 원용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서 국제기관의 연구사례에서는, 삶의 질을 流量으로서 生活水準과 貯量으로서 福祉水準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각각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결과로서 단위시간의 욕구에 대한 획득된 충족의 수준’(Drewnowski, 1970)으로, 복지수준(복지상태)은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인구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Drewnowski, 197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삶의 질을 욕구에 대한 충족의 관계로 파악하는 效用論에 따르고 있으며, 생활 및 복지의 구성요소별 지표에 의하여 각각의 수준과 분포를 고려한 삶의 질을 표시한다.

또 하나의 예로서, 삶의 질의 개념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어의와 유사하게 규정짓는 사례도 보인다. 즉, 삶의 질은 다른 상태에 있는 것 보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존재(being better)로서, 개선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 좋거나 나쁜 것(being good or bad)으로서 보여지는 것’(Wingo, 1977)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개념은 공공경제학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차원,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기능에 대한 논의를 효용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삶의 질을 국제비교하여 각국의 순위를 매긴 외국학자의 연구사례

에서는, 용어로서 삶의 질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주관적 또는 규범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Slottje, et al., 1991)라고 하여, 삶의 질이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한 상대적인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사례에서는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 상태’(정규현 외, 1994)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연구사례를 통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본 삶의 질의 개념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질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자체가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정신적 측면, 주관적·객관적 측면, 개인적·규범적 측면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그 개념을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학술용어로 사용되는 기본적 개념은 이론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나 그 개념 자체가 쉽게 규명되지 않거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개념이 전통적 개념의 소득과 현실적 개념의 소득으로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음이 그 단적인 예(주학중, 1979)이다. 특히 경제학적 개념인 복지 또는 효용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의 공통과제(Praag, 1993; Nussbaum & Sen, 1993)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삶의 질은 그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도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 속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복리의 본질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는 센(Sen, A.)의 受容能力¹⁰⁾에 의한 접근방법¹¹⁾(the capability approach)을 고찰함으로써 삶

10) 센은 capability라는 용어를 사람과 재화에 대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화의 고유가치(intrinsic value)를 의미할 때에는 잠재능력으

의 질의 개념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2. 受容能力과 「삶의 질」

가. 傳統的 效用論에 대한 센(Sen, A.)의 批判

효용은 고전적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쾌락·만족·행복으로 보며, 근대적 공리주의의 시각으로는 욕구충족을 의미하고, 근래에는 무엇이든 개인이 극대화하려는 것이나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불문하고 단순히 개인의 복리(well-being)나 편익(advantage)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en, 1987). 먼저, 효용을 쾌락·만족·행복으로 보는 입장에 대하여 센은 학계에서 이 개념이 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존중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며 그 평가에 의하여 기쁨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한다¹²⁾. 따라서 기쁨의 정의는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며 벤담(J. Bentham)의 ‘행복’과 마샬(A. Marshall)과 피구(A. C. Pigou)의 ‘만족’도 같이 광범한 개념이다. 이들 개념은 어떤 동질적인 양으로 계량화될 수 없으며 다른 요인으로 구성된 방향량(vector)과 정신적 상태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영향과 연결 지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행복은 가치있는 것의 성취라고 해석되기도 하나 종교, 정치적 선전, 문화적 압력 등으로 사회적 적응화를 거치면서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객

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1) 센의 이른바 ‘수용능력에 의한 접근방식’(the capability approach)에 관하여는 이미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였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가했음을 밝혀둔다(주학중, 1991).
- 12) 기쁨(pleasure)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유일한 것이며 그러한 정신적 상태 궁극적인 가치라는 쾌락론(hedonistic theory)으로 지칭되는 이 이론은 경험충족요건(experience requirement)과 선택적인 쾌락주의(preference hedonism)로 구분하기도 한다(Thomas, 1987).

관성이 없는 행복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Sen, 1987).

효용을 욕구충족으로 보는 근대적 공리주의, 즉 대부분의 상품이 기대되는 만족도와 같은 비율로 욕구된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만족과 욕구의 관계가 만족과 불만족을 이루어 복지로 나타나며 유사한 측정치와 연결지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하여 센은 만족하지 않는다. 욕구는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욕구는 평가활동이 아니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말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욕구가 평가의 기준으로 부정되면 욕구의 중요성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Sen, 1987). 이에 따라 욕구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욕구충족이 복리나 생활수준의 높음을 반드시 나타낼 수 없다는 반증으로서 혹사되는 노예, 사전에 욕구를 상실한 실업자, 희망없는 극빈자, 양순한 주부 등을 예로 들고 있다(Sen, 1987). 이들의 소박한 욕구와 그 충족은 결코 성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욕구충족은 가치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평가방법으로서도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효용에 대한 해석으로서 선택론은, 선택이 서수적이며 이진법적 관계라는 한계가 있으나 관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제학에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은 평가와는 별개의 행동으로서 욕구의 반영을 나타낼 뿐 개인별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에 의존한다는 제약이 있다(Sen, 1987). 선택이 개인의 복리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으나 선택의 기준은 흔히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개인의 복리는 부차적이거나 파생적이 될 수 있다.

효용이론에 대한 상술한 비판을 통하여 센은 기쁨, 욕구충족, 선택과 같은 효용의 해석은 복리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데 불충분하며 가치의 목표물과 평가방법으로서도 결함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 受容能力과 福利

센은 주관적인 효용을 단순한 재화의 소유 또는 물질적 풍요와 같은 객관적인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가 드러나는 효용이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개인의 생활유형에서 파생되는 필요까지 감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en, 1987). 즉 재화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위하려는 삶이 되거나 될 수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¹³⁾, 삶은 달성되어야 할 다양한 생활요건인 기능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수용능력으로 구성되며 생활수준은 풍요와 재화와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수용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이를 해석하면, 완전경쟁하의 균형상태에서 개개인이 선택구매한 재화로부터 얻는 효용의 총화가 국민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미시경제학에 기초한 전통적인 복지경제학은 재화의 소유만으로 효용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재화가 지니고 있는 고유가치(잠재능력)를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전혀 상이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똑같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수용능력이 상이하다. 전자는 사용함으로써 효용에 이르고 후자는 같은 금액을 지출한 재화이나 같은 효용으로 볼 수 없다. 또 하나의 예로서 1인당 GNP의 증가는 생산증가에 따른 요소소득의 증가를 통한 재화의 구입량의 증가를 의미하여 풍요로움을 더하는 것으로 체계화된 거시경제학은 복지증진적인 재화와 복지저해적인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에 대하여 센이 제시하는 수용능력 접근

13) 화폐척도가 아닌 인간의 삶에 경제의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은, 전자의 경우 생활의 일부로서 다양하게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후자의 경우 각종제도와 정책의 선택 및 총체적인 평가를 위하여는 그 평가에 상응하는 정보적 기반에 대한 불가결하며 중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개인의 수용능력을 다루고 있다(Sen, 1993). 즉, 생활수준에 있어서 기능은 성취를, 수용능력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의미하며 이 능력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을 함축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기회를 부여한다(Sen, 1987). 그에 의하면, 기능은 한 개인의 상태의 일부를 대표하며 그 상태는 특히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행동하거나 되어야 할 다양한 것들이고, 수용능력은 그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의 대안적 조합을 반영하며 그로부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행위와 존재의 결합인 생활이라는 관점에 기초하며, 삶의 질은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역량인 수용능력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Sen, 1985)고 하여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에 관하여 일관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삶을 규정할 때 여러가지 대안을 감안하면 수용능력은 품위있는 기능의 확인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생활수준 또는 삶의 질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기능은 상태의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며 이는 수용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여러 기능의 대안적 복합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대안의 선택적 자유를 반영하고 적절한 기능의 결합이 풍요로운 상태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센의 수용능력 접근방법은 생활수준, 삶의 질 이외에 빈곤문제 등에도 적용시키고 있으나 사실상 대단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강하다(이정우, 1991). 이 접근방법이 지닌 추상성은 그가 예시적으로 적용한 식빵의 예를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있다. 식빵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저장과 수송과 판매에 보다 편리한 특징을 지닌 표준화되고 방부제가 든 생산물을 점차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무의식

중에 만족스러운 상품이라기 보다는 먹이를 먹는 기분으로 식빵을 위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산업화의 불행을 염두에 두고 섰은 식빵을 최소한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닌 기능, 영양섭취와 대화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양섭취를 위한 배려사항은 신진대사율, 신체의 크기, 연령, 성별, 신체활동수준,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접성과 이용가능성, 영양학적 지식과 교육, 기후조건 등이며, 사교와 대화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는 사교계의 일반관행, 가정 및 사회적인 입장, 결혼식과 같은 각종행사의 성격, 초대된 사람의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등등의 사항이 감안되어야 한다(Sen, 1985).

그가 지적한 이러한 여러 요건을 하나하나 배려하여 식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과 정보비용이 따를 것이나 이러한 예가 시사하는 바는 복리에 반영되는 재화의 기능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된 식빵과 같은 재화의 기능이 식빵을 소비하여 식생활을 영위하는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냐를 규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정보화에 따라 식빵에 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식빵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잠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소비하는 향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식빵의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구매력으로 뒷받침된 평가능력과 향유능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방부제가 없는 격조높은 식빵을 개발하여 공급활동이 유발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가 재화의 특성¹⁴⁾을 향유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문화적 소비생활은 소비자 주권의 행사와 아울러 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시책으로 한층 활성화 되는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14) 전통적 수요이론은 재화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하나 특성적 접근은 '재화의 특성'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한다(Lancaster, 1997; Magrabi & Chung 1991).

3. 「삶의 질」의 概念

삶의 질은, 셴이 제시한 예에서와 같이, 음식물의 공급에 의한 재화의 스톡이나 음식물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즐거움 또는 욕구충족으로 표시되는 복지수준보다는 영양수준과 같이 그 사람의 여건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다고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빈부의 차이에 따라 욕구충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복지수준이 삶의 질을 뜻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셴은 현실적인 상태로부터 기회로, 재화(와 복지)로부터 그가 흔히 지칭하는 기능으로 관점이 변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복리증진에 있어서, 재화의 잠재능력과 기능이 소비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그 효용 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삶의 질은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역량인 수용능력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15)를 들어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기능적이며 멋있는 좋은 재화를 선호하며 외면보다 내면에 담긴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수용능력이 배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까지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예가 시사하는 것은 삶의 질이 물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정신적 가치를 삶의 질의 요건으로서 포괄하여 규정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상술한 수용능력 접근방법을 수용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삶의 질의 어의와 예시적인 개념 등을 감안하여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삶의 질에 반영되는 속성적 내용을 먼저 언급한다.

첫째, 삶의 질이 대두된 배경에서 밝혔듯이 경제적 복지의 관점에서

15) 많은 예가 있겠으나, 러스킨(Ruskin, J.)의 문화경제학의 이론체계를 받아들이는 셴의 수용능력 접근방법을 우리나라 대중교통 서비스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상론을 하지 않는다(주학중, 1991).

삶의 질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적인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활요건이 대부분 충족되어 있는 발전된 경제에서 언급되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즉,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이 초래하는 폐해인 혼잡과 공해의 증가 등을 복지저해적인 가치로서 여긴다거나, 여가와 비시장경제활동과 같은 복지증진적인 요인을 고려하거나, 미래의 인구인 후손을 위하여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거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소비자의 수용능력에 걸맞게 재화의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논의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삶의 질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나 사회구성원의 일부인 인구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삶의 질에서 삶은 개개인의 생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생활이라기 보다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한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간의 교호작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교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의 행위는 집단적인 행위의 차원이다. 따라서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복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의 질이 어떻게 설명되고 정의되고 평가되는지에 관계없이 삶의 질은 규범적인 가치를 전제하여 그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은 물리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센의 수용능력 접근방법에서 효용은 복리, 생활수준, 그리고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불충분하며 가치의 목표물과 평가방법으로서도 결함이 크다고 해석하나, 주관적·심리적인 욕구충족의 정도와 시장에서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상품가격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만족도와 무관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욕구충족

도와 재화의 가격을 논외로 삼는 것은 수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치의 측정척도로 사용되는 가격을 효용의 代變數로서 활용하는 신축성은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삶의 질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기능은 상태의 여러 측면을 규정하며 이는 수용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쉐의 접근방법은 대단히 이상적으로 여겨지나 수용능력을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존재의 상태는 기능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대안을 찾음으로써 수용능력을 유추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예로 들어 예시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교육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따라 그 수준, 안정성, 형평성, 쾌적성 등과 같은 평가차원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의 평가차원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끝으로, 삶의 질의 개념이 어떠한 時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삶의 질이 현재의 시점에서 관찰되는 경우 과거의 그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으며, 현재완료의 시관으로 보면 과거의 일정시점으로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관찰될 것이고, 미래의 시관을 적용하면 현재완료의 토대 위에서 전망하는 상황이 된다. 삶의 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관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겠으나,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미래의 삶의 질은 현재완료의 연장선상에서 유추된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통계적 실체로 표시할 수 있는 삶의 질은 현재완료의 시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래의 그것은 보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삶의 질에 반영되는 속성적 내용을 감안하고 또한 그 측정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을 현재완료의 시관으로 정리하면, 삶의 질은 ‘個人 및 人口集團이 享有해 온 物理的, 非物理的 價値의 總和’라고 윤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인구집단은 가족,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은 특정한 집단은 물론 국민전체를 함축적으로 나

타낸다. 물리적 가치는 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비물리적인 가치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표현됨을 뜻한다. 예를 들어 ‘1인당 GNP’와 같은 지표는 전자를, ‘교통시설 만족도’와 같은 지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지표체계의 부문 또는 관심영역으로 설정되는 건강, 안전, 교육, 교통, 주거 등의 삶의 질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第3節 「삶의 질」 測定의 方法論

경제적 물량을 중심으로 한 GNP의 신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어 온 삶의 질의 측정방법은 세 가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는 GNP개념을 수정·보완하여 국민복지를 총량으로서 나타내려는 화폐적·경제적 접근이며, 둘째는 사회 및 인구부문에 있어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미시적 지표를 객관화된 통계로 체계를 세우는 접근¹⁶⁾, 셋째는 국민생활의 관심영역에 관하여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주관적·심리적 측면에서 의식구조조사에 의하여 측정하는 접근 등이 있다. 본절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구분하기 위한 편의상 첫째번의 접근은 ‘거시적 접근’으로 둘째 및 셋째의 접근은 ‘미시적 접근’으로 크게 구분하고자 한다.

1. 巨視的 接近에 의한 「삶의 질」 測定

국민복지의 총량지표로서 국민총생산 개념의 불완전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복지 측정의 거시적 접근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메츠(Sametz, A. W.)의 Welfare GNP(Sametz, 1968), 토빈(J. Tobin)

16) 국제연합이 발전도상국에 권고한 바 있는 인구·사회통계체계(SSDS)와 같은 지표체계를 의미한다(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75).

과 노드하우스(W. D. Nordhaus)의 MEW(Tobin & Nordhaus, 1968) (Measure of Economic Welfare), 일본의 시노하라(Miyohei Shinorhara)의 주도로 시산된 바 있는 NNW(Economic Council of Japan, 1973) (Net National Welfare) 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제도화가 검토되고 있는 Green GNP 또는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ing)을 들 수 있다.

〈表 2-1〉 MEW推計上 加減項目의 要約

항 목 명	가감의 구분
①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소비	(+)
② 민간의 방편적 및 중간투입적 지출	(-)
③ 내구소비재 구입비	(-)
④ 기타 가계부문투자	(-)
⑤ 소비자자본재의 서비스 환산액	(+)
⑥ 여가의 환가	(+)
⑦ 비시장 생산활동의 환산	(+)
⑧ 불쾌(도시화에 수반하는)에 대한 수정	(-)
⑨ 복지기여 정부소비지출	(+)
⑩ 정부자본재 서비스 환산	(+)
⑪ 현실적 경제적 복지(①부터 ⑩까지의 합계=MEW)	...
⑫ 경제적 복지를 위한 순투자	(+, -)
⑬ 유지가능한 경제적 복지(⑪ + ⑫)	...

資料: Tobin, J. and Nordhaus, W. D., "Is Growth Obsolete?", *Economic Growth*, N.B.E.R., New York, 1972.

세부적인 추계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Green GNP를 제외한 앞의 3가지 방법이 지니는 공통점은 GNP개념이 국민생활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비에 이를 조성하는 지출을 가산하는 반면,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토빈과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예시적으로 요약하면 앞의 <表 2-1>과 같다.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항목을 <表 2-1>의

항목번호에 따라 정리하면, ①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소비, ⑤ 소비자 자본재의 서비스 환산액, ⑥ 여가의 환가, ⑦ 비시장 생산활동의 환산, ⑨ 복지기여 정부소비지출, ⑩ 정부자본재 서비스 환산 등 6가지이며,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은 ② 민간의 방편적 및 중간투입적 지출, ③ 내구소비재 구입비, ④ 기타 가계부문투자, ⑧ 도시화로 인하여 수반되는 불쾌에 대한 수정 등 4가지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향유한 물리적 가치를 합산한 단일지표에 의하여 국민생활수준을 GNP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으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¹⁷⁾. 특히 이러한 접근을 저개발국이나 기본적인 경제사회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적용할 경우, 예컨대 ‘여가의 환산’에 있어서 실업자나 불완전고용의 여가를 효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만약 효용으로 본다면 이를 어떻게 화폐환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精度와 일관성을 갖춘 가용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상술한 MEW, NNW 등을 추계한다면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복지 및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¹⁸⁾. 이 같은 추계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하여 선·후진국간, 또는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한다면, 시장거래가 없는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개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GNP로서 비교한 생활수준의 격차보다 훨씬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부터 연구된 상술한 바와 같은 국민복지추계는 기존의 GNP

17) 가감항목 및 추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18) 최근에 도시화로 인한 ‘무질서’ 및 ‘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 및 도로혼잡, 산업재해, 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인한 총비용은 1993년 GNP의 7.28%(약 19조 3천억원)에 이른다.

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전반적인 국민복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추계를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환경계정이다. 환경계정은 자연자원 및 환경을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으로 보고 기존의 국민소득계정의 국내총생산(GDP)에 환경의 악화와 자연자원의 소모로 인한 비용을 반영(Bartelmus, 1994)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¹⁹⁾이다. 국제연합에 의하여 개발된 계정체계로서 최근에 권고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민소득계정의 부속계정²⁰⁾인데 그 체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계정체계를 원용하여 1985~9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산한 결과, 자연자원소모·환경악화·환경비용이전 등 3가지의 합계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1985년의 2.89%에서 1989년의 1.58%로 점감한 이후 1991년과 1992년에는 각각 1.82%와 1.69%를 나타내고 있다(김승우 외, 1994).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연자원의 소모와 환경악화 등을 경제활동의 확장이 가져온 외부불경제로 해석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負의 가치로 환산하는 접근방법은 기존의 GNP를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시정하는 유용성이 인정되고 또한 환경문제를 계량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자연환경소모와 환경악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화학자·의료전문가·水理學者 등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권고된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의 정립이 선결요건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19)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의 소모로 인한 비용을 GDP에서 공제한 環境要因調整國內純生産(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s)으로 부르고 있다(한국은행, 1995).

20) 영어표기인 'satellite accounts', 'subsidiary'를 衛星計定, 補助計定 등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附屬計定으로 표시한다.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점은,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빈약한 근거자료와 추계를 위한 대담한 가정의 도입은 조심스러운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2. 微視的 接近에 의한 「삶의 질」 測定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접근 중에서 둘째와 세번째 접근은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거시적 총량지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이나 의식적 관심영역 하나 하나에 대하여 계통적인 지표체계(주학중, 19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로서 국민생활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자의 화폐적 환상에서 탈피하려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이른 바 사회지표 운동이 1960년대 후반부터 관련학계에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회지표의 작성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의 지표체계(Drewnowski, 197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OECD회원국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영역(OECD, 1976)으로서 각각의 지표체계를 요약하면 <表 2-2>, <表 2-3>, <表 2-4>와 같다. 두 가지 지표체계가 오늘날 국제기관과 각국에서 발간되는 사회지표 및 「삶의 질」 지표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지표체계와 관심영역의 세부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지표와 이러한 지표체계 이후에 국제기관 및 각국에서 고안한 지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第3章에서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나 삶의 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개별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UNRISD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제시된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의 구성요소별 개별지표와 OECD의 지표체계에 제시된 관심분야별 개별지표들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들, 이러한 자원이 사용되는 활동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에 필수적인 여건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복리의 핵심적인 모습이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능력에 있다는 센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복리를 향유할 수 있는 受容能力을 의미하여 복리자유(well-being freedom) (Sen, 1993)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가. UNRISD의 「삶의 질」 指標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지표체계는 사회지표의 개념을 일반적인 복리와 사회적 관심을 포괄적으로 집성한 측정치(Drewnowski & Scott, 1966)로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복리의 종합지수를 시도하고 있다. 복리의 종합지수는 「삶의 질」의 수준을 표시하고 그 수준은 흐름(flow)으로서 생활수준과 貯量(stock)개념의 복지수준을 의미한다. 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영역은 <表 2-2>와 같이 영양·주거·건강·교육·여가·안전·환경 등 이른바 사회부문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수준을 표시하는 영역은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신체상태·교육상태·사회상태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Drewnowski, 1970). 생활 및 복지의 영역별로 많지 않은 지표를 선정²¹⁾하고 지표 하나하나에 대하여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표의 값을 최저치와 최고치로서 한계를 두고 그 範域(range)을 上·中·下의 세 가지 결정적 수준으로 구분²²⁾하

21) 적은 수의 지표에 의하여 간단한 체계를 취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통계자료의 가용성과 국제간의 비교가능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 각 지표치를 지수화한다. 이 지수는 각 지표의 결정적 수준에 따른 분배계수를 가중치로 하여 調整指標指數를 산출하고 加重值로서는 單純算術(Equal Weight System)과 連動值(Sliding Weight System)를 제시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한다.

〈表 2-2〉 UNRISD의 ‘生活 및 福祉水準’ 指標體系

생활수준지표	복지수준지표
영양 열량섭취량 단백질섭취량 당분 이외의 열량 섭취비율	신체상태(육체적 발달수준) 국민건강상태(생물학적 시험에 의한) 건강(질병으로부터 해방) 평균수명
주거 유주택률 거주밀도 주택의 전용	교육상태(정신적 발달수준) 14세 이상 인구중 문맹률 교육수준 인력수요에 대한 교육의 적합성 고용
건강 병원이용 의료이용(병원 외) 예방수단의 정도	사회상태(사회적 통합수준) 통합 국민적 사회적 집단 가족
교육 학교재적률 취학률 교사당 학생수	참가 국민적 사회적 집단 가족
여가 여가시간	
안전 개인과 생활의 안정 및 안전	
환경 통신 여행 스포츠 참여 문화활동 의복 물리적환경	

資料: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RISD: Geneva, 1970.

22)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이 방법은 분배측면은 물론 양적 및 질적으로 표시된 지수를 종합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과감하다는 데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제학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효용측정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고 각 지표치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평점을 설정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치에 가중치를 주어 단일지수화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또한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정설화될 정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진로와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나. OECD의 社會的 關心指標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삶의 질』 지표체계인 ‘사회적 관심사’는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성장의 질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社會指標開發計劃(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이 시작되면서 부터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1972년에 福利(well-being)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Strumpel, 1972)를 거쳐 사회적 목표를 표준화하여 정의하고 가장 필요한 지표의 체계화와 그 평가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OECD, 1973)하여 그 결과를 1973년에 ‘OECD제국의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이란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관심사란 확인되어 정의할 수 있는 열망 또는 복리에 기본적이며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관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후 1976년의 지표체계(OECD, 1976)에 이어 1982년에 제시된 관심분야별 사회지표체계(OECD, 1982)는 <表 2-4>와 같다.

〈表 2-3〉 OECD의 基本的인 社會的 關心體系(1973)

관심분야	기본적·공통적 관심영역
I. 건강	1. 생애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가능성 2. 건강을 해쳤을 경우 개인에 대한 타격
II. 학습에 의한 개인의 능력개발	1. 子女가 자기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 기능 및 가치관의 습득과 사회의 一員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함. 2. 계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과 개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는 性向 3.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발전가능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신축성을 유지 및 발전시켜 희망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4. 학습에 의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개개인이 얻는 만족도 5. 모든 사회계층의 구성원이 福利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문화적 유산의 유지 및 발전
III. 고용 및 근로 생활의 질	1. 취업희망자에 대한 고용기회 2. 근로생활의 질 3. 근로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만족
IV. 시간과 여가	1. 시간사용상 實效있는 선택범위
V.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1.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배력 2. 물질적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수 3.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의 분배와 형평도 4. 민간과 공공부문의 재화·서비스의 질, 선택범위 및 확보용이도 5. 경제적 장해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보호
VI. 물리적 환경	1. 주택상태 2. 유해 및 불쾌한 오염원인에 노출된 인구 3. 환경의 관리 및 보전에 의한 국민의 혜택
VII. 개인안전과 법의 집행	1. 개인이 입은 폭력 및 괴롭힘에 의한 피해 2. 법집행상 공정성과 인도주의적 배려 3.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VIII. 사회적 기회와 참여	1. 사회적 불평등도 2. 지역사회생활, 조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資料: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June 1973.

최초로 제시된 OECD의 사회적 관심사(1973)는 <表 2-3>과 같이 건강·학습에 의한 개인의 능력개발·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시간 및

여가·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물리적 환경·개인의 안전과 법의 집행·사회적 기회와 참여 등에 이르는 8개분야로 분류되고 다시 24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본적 관심사는 하나 이상의 보충적인 관심사를 수반하되 보충적 관심사는 기본적 관심사를 포괄하지는 못하는데(OECD, 1973), 그 이유는 보충적 관심사가 통계적 표현을 취할 수 없어 세분된 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분야에 있어서 '건강을 해쳤을 경우 개인에 대한 타격'과 같은 기본적 관심영역은 통계적 표현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술한 관심사를 드러내면서 통계적으로 표시 가능한 지표체계로서 제시된 것이 <表 2-4>이다. 이 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심사는 건강·교육과 학습·고용과 근로생활의 질·시간과 여가·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물리적 환경·사회적 환경·개인의 안전 등 8개의 관심분야에 15개의 관심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微視的인 觀點에서, 국제기관인 UNRISD와 OECD가 제시한 접근이 구체적인 개별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UNRISD의 시도는 사회개발을 위한 개별부문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려는데 비하여 OECD의 관심영역은 국민의 주관적 의식과 느낌을 준거로 하여 이에 관련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하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같은 접근이 지니는 용도는 삶의 질을 異時點間,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의 객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후자와 같은 접근은 삶의 여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한 지표에 의하여 삶의 질을 표시할 수 있는 일면의 진리를 각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을 계량적으로 규정하는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 즉 객관적 및 주관적인 요건을 종합(synthesis)하는 접근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表 2-4〉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관심분야	영역	지표
I. 건강	수명	기대수명 주산기사망률
	건강한 삶	일시적 장애인 영구적 장애인
II. 교육과 학습	교육시설의 활용	정규교육 성인교육
	학습	문맹률
III.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가용노동력	실업률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실망노동자
	근로생활의 질	평균근로시간 통근시간 유급연가 비전형적인 근로 수입의 분포 치명적 직업병 불유쾌한 근로환경
IV. 시간과 여가	시간활용	주당평균자유시간 자유시간활동
V.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소득	소득분배 저소득 물질적인 박탈
	부	부의 분포
VI. 물리적 환경	주거여건	주거공간 실외공간 접근도 기본적인 편의시설
	서비스의 근접가능성	선정된 서비스(의료, 상점등)의 근접도
	환경적 불유쾌	공기오염에의 노출 소음에의 노출
VII. 사회적 환경	사회적 귀속	자살률
VIII. 개인의 안전	위험에의 노출	돌발적인 치사 치명적이 아닌 심각한 상해
	인지된 위험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

資料: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Part II: Selected Social Indicator Disaggregations), Paris, 1982, pp.17~46.

第4節 「삶의 질」의 測定과 評價代案

앞에서 개관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거시적 및 미시적인 접근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 하나는 각종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국민복지와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국민계정이 권고되어 사회통계의 정비를 촉진하고 있고 나아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삶의 질에 관한 조사를 수행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계정으로서 대표적인 예는 국제연합(UN)이 각국에 권고한 사회·인구통계체계(SSDS)(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75)와 전술한 환경계정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계, 언론계(중앙일보사, 1995), 그리고 중앙정부 등에서 조사했거나(미디어 리서치, 1995) 계속적으로 조사(통계청, 1995)가 되고 있는 「삶의 질」 관련 조사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변수에 국한되었던 예측 및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사회적 변수인 삶의 질의 영역을 포함한 종합모형으로서 경제사회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관심부문(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상의 윤곽을 제공함으로써 부문별 관련지표의 선정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국제기관과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분야별 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에 따라 분류가능하게 하는 ‘틀’을 갖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을 정리한 다음에 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간의 관련에 의하여 나타나는 삶의 질의 관심부문 내지 영역에 대하여 언급한 후, 끝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문별 관련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고안하고자 한다. 이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지표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과제에 부딪치고 사회지표가 전체집합이면 삶의 질 지표는 그 부

분집합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부문별 사회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에 따라 체계화하는 것이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방법론상 하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1. 「삶의 질」測定の 代案

가. 「삶의 질」의 構成要件과 評價次元의 設定

개인 및 집단의 삶을 만족하게 영위하는 필요 및 충분조건은 국민이 갖는 가치관과 의식구조, 국가의 발전단계, 삶을 규정짓는 요건의 현황 등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우리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구성요건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다각적인 연구·분석과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다. 즉, 누구나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삶의 질의 구성요건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정립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특히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선정한 후 관련통계나 조사를 통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거나 지역간 비교를 하는 것은 조심을 하여야 할 일이며, 한나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관심부문별 지표체계 및 국제기관이 권고한 지표가 반드시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삶의 질」의 구성요건은 일반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분석에는 구성요건별 관련지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소간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삶의 질의 개념과 무엇이 삶의 질을 규정지어 주는 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그리고 삶의 질의 측정방법론을 통하여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을 정리하면 <表 2-5>와 같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가 부문구성에 이어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에 따른 관심영역별 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에 따라 접목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선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고려이다. 첫째, 인간의 欲求位階가 기초적 욕구로부터 고차원적 욕구로 이행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상식론을 준거로 할 때 삶의 질을 구성하는 ‘基本的 要件’은 욕구위계상 기초적 욕구인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유한한 생명체인 사람이 삶(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健康’하게 사는 것과 생명과 재산의 ‘安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은 국제기관과 각국에서 편제된 사회지표체계에 반드시 등장하는 부문 내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과 안전’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미국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영역을 대표하며(Terleckyi, 1975),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에서도 ‘건강’과 ‘안전’은 각각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表 2-5〉 「삶의 질」의 構成要件 및 評價次元

구성요건 및 관련구조변화		평 가 차 원
구성요건	기본적 요건	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
	물리적 요건	수준, 안정, 형평, 쾌적
	정신적 요건	수준, 안정·안심, 형평, 자유
「삶의 질」 관련 구조변화	경제사회구조 의식구조	노령화,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 의식구조 변화

둘째, 삶의 질을 결정짓는 ‘物理的 要件’이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인 것들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한 원천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 뿐만 아니라 물리적·제도적인 각종 便益의 質的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심부문 또는 영역별로 삶의 질의 물리적 요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차원은, 지표가 보여주는 水準, 安定, 衡平, 快適 등이다. 평가차원으로서

표시되는 관련지표의 예를 들면, ‘1인당 GNP’,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10분위별 분포’, ‘가구당 주거공간’ 등이며 이들은 각각 삶의 질의 물리적인 요건으로서의 水準, 安定性, 衡平性, 그리고 快適性을 평균적인 數値로서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精神的 要件’이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물리적 요건으로서 정신적 풍요는 삶의 질을 규정짓는 고차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교육, 문화와 여가, 가족, 사회참여 등이 삶의 질을 이루는 정신적 요건과 관련된 관심부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관심부문별로 삶의 질의 정신적 요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차원은, 부문별 지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水準, 安定(安心), 衡平, 自由 등이다. 관련지표의 예를 들면,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일터에 대한 안전의식’,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의식’, ‘혼인에 대한 태도’ 등이다.

끝으로, 경제사회발전은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경제사회구조 및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構造變化’는 개개인은 물론 인구집단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들을 외생적으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호작용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련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구조변화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건은 되지 않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추이와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異時點間의 비교정태적인 관점에서, 구조변화를 경제사회구조와 의식구조의 변화로 구분한다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은 노령화,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意識의 변화 등이다.

나. 『삶의 질』의 關心領域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지표체계상의 관심부문(영역)은 무엇이 삶의 질을 좋게 또는 나쁘게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계

통적으로 대분류할 수 있는 체계구조이다. 사회지표체계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관심부문별 또는 영역별로 관련지표를 담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개별지표는 경제사회적 변수간의 因果를 나타내는 構造 또는 模型에 포함되어야 指標로서 意味를 지닌다. 경제모형을 사회적 변수까지 감안하여 경제사회모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학자간의 공감은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다²³⁾. 그러나 이용가능한 사회통계의 제고와 경제변수와 사회변수를 연결하는 이론의 빈곤은 이 분야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경향에 비추어 학문의 발전에 치명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제기관 및 연구자간에 『삶의 질』을 국제비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통계는 극히 한정적이며 통계가 지니는 정의상의 문제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표로 표시되는 통계의 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언론사와 민간조사기관이 실시한 삶의 질에 관한 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의 관심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表 2-6>과 같이 국내조사 사이에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²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삶의 질적 상태와 결과, 그리고 그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일반인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정책수립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문(영역)으로 대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설문조사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개별지표를 포함시키는 부문구성이 없

23) 발전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및 사회적 변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초기의 연구로서 Adelman과 Morris의 要因分析(factor analysis)과 Harbison 등에 의한 分類分析方法(taxonomic method)의 예를 들 수 있다(Irma & Cynthia, 1976; Frederick, et al., 1970).

24) 이러한 국·내외의 조사에 대하여는 제3장 참조

이 지표의 나열에 의한 조사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表 2-6〉 「삶의 질」 調査에서 提示된 部門構成의 事例

평가분야 (중앙일보)	구성부문 (공보처 위촉조사)	
1. 건강한 생활	1. 현재의 소득수준	13. 사회복지 향상
2. 안전한 생활	2. 현재의 직업	14. 교육의 질 향상
3. 교육·복지	3. 현재의 물가	15. 안전관리 시설
4. 경제생활	4. 깨끗한 수도물 공급	16. 인권보호
5. 편리한 생활	5. 깨끗한 자연환경	17. 법질서 및 사회질서확립
6. 문화생활	6. 자연휴식공간확보	18. 청소년 문제
	7. 쓰레기 처리문제	19. 현재의 건강상태
	8.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	20. 문화·예술생활
	9. 주택난 해소	21. 레저·여가생활
	10. 교통문제 해소	22. 주위사람과의 인간관계
	11. 민생치안 확립	23. 가정의 화목
	12. 의료서비스 제공	

資料: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 삶의 질 입체분석』, 1995.
(주)미디어 리서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보고서』, 1995.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 측정의 거시적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포괄하는 시험적인 경제사회모형을 [附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는 이유는, 획득가능한 可用統計만을 토대로 국제기관이나 선진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된 관심영역의 지표 중에서 몇몇 지표를 拔萃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를 구조적 체계로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인과 민간조사기관 그리고 관련학계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국제기관과 각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심부문(영역)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附錄 참조). 이들 表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기관과 각국별 사회지표의 관심영역 구성은 국제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해당국가가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목적을 뒷받침하는 論據에 따라 작

은 수의 영역구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영역구성에 이르기까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社會指標의 「삶의 질」 指標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구성요건별 평가차원,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사회지표를 ‘삶의 질’ 지표로 예시적으로 재분류한 것이 <表 2-7>이다. 同表는 1995년에 그 개편이 이루어진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의 가족부문에서 제시된 지표중 일부를 삶의 질 지표로 재분류한 것이며, 이렇게 분류한 결과 기존의 사회지표를 삶의 질을 표시하는 지표로 전환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지표를 삶의 질의 지표로 재분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表 2-7>과 같은 분류는 비록 指標名 보다는 지표의 정의에 따랐으나, 개별지표만을 보아서는 평가차원의 분류에 있어서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자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구지출구조’와 같은 지표는 비목별 지출비율로 계수화될 때 앵겔계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물리적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 비율을 시계열로 분석하면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개별지표를 삶의 질의 평가차원에서 해석하는 경우 지표²⁶⁾가 드러내는 내용과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를 들어,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가족부문의 사회지표는, 가족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규범 등 관심영역을 설정한 후 세부관심영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삶의

25) 소득계층별로 계수화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의 물리적 형평성을 나타낸다.

26) 지표는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表 2-7〉 社會指標의 「삶의 질」 指標化(家族部門에 대한 例示)

사회지표체계 「삶의 질」의 구성요건	기본적 요건		물리적 요건				정신적 요건				구조적 변화	
	건 강	안 전	수 준	안 정	형 평	쾌 적	수 준	안 정	형 평	자 유	경제 사회	의식 구조
3. 가족생활												
3-1. 주거 및 주택환경 거주주택의 종류											○	
거주주택의 소유					○							
가구당 주거공간			○			○						
3-2. 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소득분포					○							
가구지출구조			○								○	
3-3. 생활안정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				○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								
중요한 생활관심사*						○						○
노후준비방법				○								
3-4. 문화생활 가족여가활동현황			○				○					
가족외식빈도			○				○					
가족생활용품현황			○				○					

註: 가족부문 사회지표체계에 제시된 개별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
차원에 따라 그리고 시계열지표가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하여 예
시적으로 분류한 것임.

*는 주관적 지표임.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I); 總括編』, 1995.

질을 파악하는 관심영역별 지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인구학·가족
학·사회학 등 학술적인 근거에 따라 이 부문이 갖는 경제적 및 사회적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몇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최근의 관행은 재고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삶의 질」의 評價代案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에 따라 관심영역별 지표를 선정하여 계수화하여도 다루어야 할 삶의 질 지표의 계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표 하나 하나에 대한 분석에 의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지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으로서 각 지표에 일정한加重値를 부여하고 구성요건별로 또는 관심영역별로 가중평균치를 산출할 수는 있으나 가중치 자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가중치는 전문가의 판단이나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선호도를 기초로 결정한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할 경우, 기준설정이나 가중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즉 개별지표에 대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설정에 의하여, 또는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 flow지표 및 stock지표와 같이 속성이 다른 지표계열을 계량적 기법(第4章 참조)에 의하여 가중치를 주어 합성치를 산출할 경우에 이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최저수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정성적인 지표를 정량적으로 계량화하는 통설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은, 센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受容能力集合(Capability set)의 평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기 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개인이 향유해 온 가치를, 사회일반의 상식적인 가치를 준거로 개인이 평가한 만족도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

문에 위의 두 가지 방법중에서 의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의식조사상의 문제로서는, 첫째 개인의 삶의 질을 조사한다고는 하나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에 국한시키는 성향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불합리하고, 둘째 일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조사라 하여도 조사표본, 응답자의 역량²⁷⁾, 조사 당시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삶의 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같은 질문에 대한 상이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기법상의 개선이 따르면 분석적 도구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가중치가 결정되면 개별지표와 가중치로써 『삶의 질』의 구성요건별 및 부문별 종합지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산출된 『삶의 질』의 구성요건별 평가차원에 관한 현실적 수준을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표치로 표시되는 구성요건별 수준, 안정(안심), 형평, 쾌적, 자유 등이 특정한 기준에 비하여 높은지 낮은지, 좋은지 나쁜지가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개개인 모두가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受容할 수 있는 행동평가원칙인 도덕적 목표가 상식적인 가치 시스템을 이루도록 압박하는 도덕적 善惡의 시스템(Scanlon, 1993)을 기준으로 하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하여 국제기관의 권고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수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별지표에 대하여는 공인된 최저치로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건설적인 기준은, 국내의 경우 국민전체의 평균치나 지역평균치를 이용하여 그 기준에 대한 단위지역의 수준을 對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국제비교하는 경우 世界平均値나 國家別 順位에 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7)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第 5 節 要約과 結論

발전초기에 동의어로 볼 수 있었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30여년의 압축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한 괴리를 나타내고, 일반국민은 급변하는 1인당 GNP가 누구를 위한 무엇인가를 반문하기에 이른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고, 특히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의 세계화’는 국가발전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근년에 이르러 삶의 질에 대한 학계의 연구경향과 사회적 및 정치적인 관심의 대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민총생산(GNP)개념이 삶의 질을 표시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경제학 및 관련학계에서 복지국민총생산(Welfare Output), 경제적복지측정(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순국민복지(Net National Welfare, NNW), 순경제적복지(Net Economic Welfare, NEW), 환경계정(Green GNP) 등과 같은 새로운 복지계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둘째, 성장과 발전의 성과 및 내용을 이루는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대두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들이 사회구성원의 삶을 규정짓는 사회적 여건과는 정의 함수관계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성과 학계의 실증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관심영역별로 체계화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하여 삶의 질을 나타내는 틀로서 이른바 ‘사회지표’를 고안하게 되었으며, 사회지표를 종합지수화하여 국가별 삶의 질의 순위를 매기거나 국내지역간의 격차를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조사 등이 국제기관과 국내외의 관련학계, 그리고 여론조사조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셋째, 발전전략상의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성장과 형평의 조

화로, 그리고 기본생활요건의 충족 및 ‘삶의 질’ 등으로 변화되었다. 1993년 현재의 우리나라의 GNP규모와 교역액은 다같이 세계 12위에 해당하나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 환경 부문의 지표는 경제총량규모에 걸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과 균형·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의 선진화’는 우리의 발전전략상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진화라고 할 것이다.

삶의 질의 어의적인 개념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로서 추상적 표현이나 통설로서 용인되는 학술적인 개념은 정립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된 연구에서 제시된 삶의 질의 개념과, 1980년대 중반이후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속에서 기존의 효용론의 비판을 통하여 복리내지 삶의 질의 본질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센(Sen, A.)의 수용능력에 의한 접근방법을 고찰하여 삶의 질의 개념을 찾아 보았다. 삶의 질은, 다양한 행위와 존재의 결합인 생활이라는 관점에 기초하며,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역량인 수용능력으로써 평가되어야 하며, 수용능력은 품위있는 기능의 확인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기능은 상태의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며 이는 수용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여러기능의 대안적 복합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대안의 선택적 자유를 반영하고 적절한 기능의 결합이 풍요로운 상태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삶의 질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사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다고 하여 삶의 질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욕구충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복지수준이 삶의 질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태에서부터 기회로, 재화(와 복지)로부터 센이 지칭하는 기능으로 관점이 변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삶의 질은 재화의 고유가치(잠재능력)와 기능이 소비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그 효용 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삶의 질은 가치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역량인 수용능력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용능력 접근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질에 반영되는 속성적 내용을 감안하고 또한 그 측정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을 현재완료의 시관으로 정리하면, 삶의 질은 ‘個人 및 人口集團이 享有해 온 物理的, 非物理的 價値의 總和’라고 윤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의 측정방법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시적 접근은 상술한 바와 같은 복지국민총생산, GNP, MEW, NNW, 환경계정 등이며, 세부적인 추계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Green GNP를 제외한 앞의 세 가지 방법이 지니는 공통점은 GNP개념이 국민생활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비에 이를 조성하는 지출을 가산하는 반면,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들 접근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향유한 물리적 가치를 합산한 단일지표에 의하여 국민생활수준을 GNP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미시적 접근은 삶을 구성하는 부문이나 의식적 관심영역 하나 하나에 대하여 계통적인 지표체계로써 삶의 질을 측정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의 지표체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관심지표이며, 오늘날 이들 지표체계가 국제기관과 각국에서 발간되는 사회지표 및 삶의 질 지표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UNRISD의 시도는 사회개발을 위한 개별부문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려는데 비하여 OECD의 관심영역은 국민의 주관적 의식과 느낌을 준거로 하여 이에 관련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하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와 같은 접근이 지니는 용도는 삶의 질을 異時點間,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의 객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후자와 같은 접근은 삶의 여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한 지표에 의하여 삶의 질을 표시할 수 있는 일면의 진리를 각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을 계량적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 즉, 객관적 및 주관적인 요건을 종합하는 접근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의 개념과 무엇이 삶의 질을 규정지어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그리고 삶의 질의 측정방법론을 통하여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을 설정하였다. 삶의 질의 구성요건은,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과 같은 基本的 要件, 쾌적한 삶을 위하여 불가결한 物理的 要件,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고차원의 욕구인 精神的 要件등이며, 물리적 요건은 그 水準, 安定, 衡平, 快適 등에 의하여 평가되고 정신적 요건의 평가차원은 水準, 安定(安心), 衡平, 自由 등이다. 한편 경제사회발전은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경제사회구조와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構造變化는 개개인은 물론 인구집단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들을 외생적으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호작용을 통하여 변화시킨다. 이같은 구조변화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건은 되지 않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추이와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구조변화를 경제사회구조와 의식구조의 변화로 구분한다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은 노령화,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意識의 변화 등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삶의 질의 관심부문(영역)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개별지표를 선정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이 경우 개별지표는 경제사회적 변수간의 인과를 나타내는 구조 또는 모형에 포함되어야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개별지표를 포함시키는 부문구성이 없이 지표의 나열에 의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구성요건별 평가차원,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사회지표 중 가족부문의 관심영역별 지표를 ‘삶의 질’지표로

재분류한 결과 사회지표를 삶의 질을 표시하는 지표로 전환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에 따라 관심영역별 지표를 선정하여 합성지수를 산출한다 하여도 다루어야 할 삶의 질 지표의 계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표 하나 하나에 대한 분석에 의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지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으로서 각 지표에 일정한 加重値를 부여하고 구성요건별로 또는 관심영역별로 가중평균치를 산출할 수는 있으나 가중치 자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가중치는 전문가의 판단이나 국민의 식조사를 통한 선호도를 기초로 결정한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할 경우, 기준설정이나 가중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최저한 또는 셴이 주장하는 기본적 수용능력 자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定性的 지표를 定量的으로 계량화하는 통설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은, 셴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受容能力集合의 평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기 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개인이 향유해 온 가치를, 사회일반의 상식적인 가치를 준거로 개인이 평가한 만족도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방법중에서 의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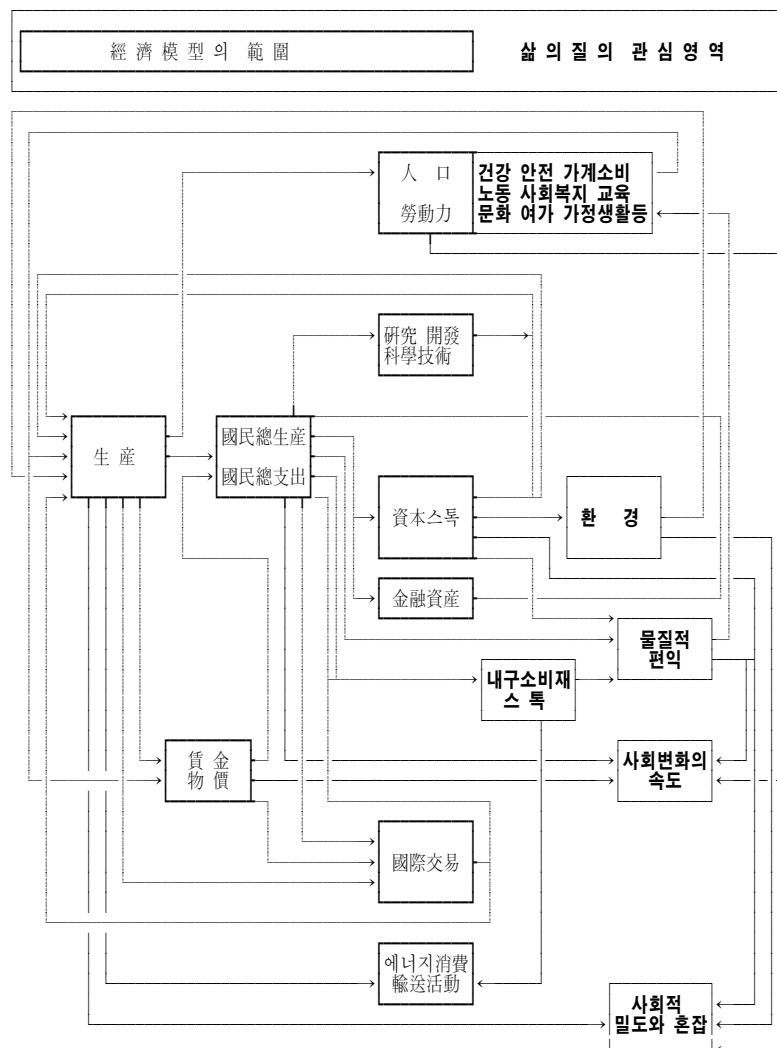
가중치가 결정되면 개별지표와 가중치로써 삶의 질의 구성요건별 및 부문별 종합지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산출된 삶의 질의 구성요건별 평가차원에 관한 현실적 수준을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표치로 표시되는 구성요건별 수준, 안정(안심), 형평, 쾌적, 자유 등이 특정한 기준에 비하여 높은지 낮은지, 좋은지 나쁜지가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하여 국제기관의 권고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수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별지표에 대하여는 공인된 최저치로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건설적인 기준은, 국내의 경우 국민전체의 평균치나 지역평균치를 이용하여 그 기준에 대한 단위지역의 수준을 對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국제비교하는 경우 世界平均値나 國家別 順位에 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질의 향상에 있음을 재확인 하고, 복리의 본질에 대한 이론의 개척과 또한 삶의 질을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관련학계의 최근의 동향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도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은 그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별 평가차원, 그리고 측정방법에 있어서 개인 및 인구집단의 경제사회적인 제 측면이 감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연구되어야 할 계속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附 錄

[附圖 2-1] 經濟模型과 「삶의 질」의 變數關係(例示)



다음은 [附圖 2-1]에 대한 설명임.

1. 模型의 概要

[附圖 2-1]과 같은 경제사회모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관심부문(영역)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概念的으로 表示하기 위한 試圖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次元(dimension)과 內·外生的인 변수를 드러내지 않으며, 경제변수는 모형도의 좌측에 굵은선으로 표시한 상자 속에 한자로 표시하였고, 삶의 질의 관심영역은 우측의 가는 선으로 표시한 상자 속에 한글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點線은 循環關係를, 實線은 終結關係를 표시하도록 구분하였다.

2. 變數에 대한 說明

여기에서 제시한 모형이 시각적으로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변수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는 변수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 인구(및 노동력): 건강, 안전, 가계소비, 노동, 사회복지, 교육, 문화, 여가, 가정생활 등 삶을 질의 가장 중요한 관심영역임.
→ 생산, 사회변화의 속도(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계층간, 지역간), 사회적 밀도 및 혼잡
- 생산: 국민총생산(GNP) 및 국민총지출(GNE)을 포함하여 시장거래가 없는 생산 및 인구생산까지 포함(例; 인구생산, 가정내 가사활동, 자가소비생산 등).
→ 인구(노동력), 화폐환산의 GNP·GNE, 임금·물가, 국제교역, 에너지 소비·수송활동, 사회적 밀도 및 혼잡
- 임금·물가: → GNP·GNE, 사회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줌.
- GNP·GNE: 국민계정으로 표시되는 생산개념임.
→ 비내구소비재(의류, 식품 등) 및 서비스(교통통신, 보건의료, 교육, 오락) 등 물질적인 편익, 자본스톡, 금융자산 스톡, 내구소비재 스톡, 연구·개발·과학기술투자, 수입과 수출 등 국제교역, 사회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줌.

- 자본스톡: 건설물과 생산자내구재의 스톡을 표시함. 건설물은 주거용 건물(주택), 비주거용 건물(사무실, 공장 등), 기타 구조물 및 공작물(철도, 통신, 도로, 항만, 수도시설 등)을, 생산자내구재는 각종기계와 운수설비 등을 포함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러한 스톡으로부터 얻는 서비스(편익)임.
 - 생산, 환경(환경악화, 자원소모), 물질적 편익, 사회적 밀도 및 혼잡을 초래함.
- 금융자산: → GNP·GNE,
- 내구소비재 스톡: 자동차, 냉장고, 가구, 전기제품 등 가계의 내구소비재 스톡으로부터의 서비스(편익)는 물질적인 편익을 줌.
- 환경: 자원소모와 환경악화를 초래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줌.
 - 생산, 사회적 밀도 및 혼잡을 초래함.
- 물질적 편익: GNE와 자본스톡, 그리고 내구소비 스톡으로부터 얻는 물질적 편익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줌. 첫째, 인구(노동력)는 『삶의 질』의 관심영역인 건강, 안전, 가계소비, 노동, 사회복지, 교육, 문화, 여가, 가정생활 등에 영향을 줌. 둘째, 물질적 편익을 향유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밀도 및 혼잡을 초래함.
 - 인구·노동력, 사회변화의 속도, 사회적 밀도 및 혼잡을 초래함.
- 사회변화의 속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질을 개선 또는 악화시키는 변화를 초래함.
- 사회적 밀도 및 혼잡: 과밀에 의한 불쾌적(쓰레기, 교통지체 등), 교통혼잡 등을 초래함.
 - 사회적 밀도 및 혼잡

〈附表 2-1〉 國際機關의 社會指標體系의 部門(領域)構成의 比較

UNRISD 생활수준지표 (1970) ¹⁾	UN 사회·인구통계체계 (1975) ²⁾	OECD 사회적 관심체계 (1982) ³⁾	UNDP 인간개발지수 (1995) ⁴⁾
영양 교육 건강 주거·환경 여가 안전	인구의 규모, 구조, 출생, 사망, 이동 가족형성, 가족, 가구 소득분포, 소비, 자산형성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시간배분, 여가 질서, 공안, 범죄 사회적 계층과 이동 사회보장, 복지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교육, 경제생활의 질 교육과 학습 건강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시간과 여가 개인의 안전	인간개발의 모습, 인간적정의 모습 폭력과 범죄 건강 교육 고용 실업 부, 빈곤, 사회적 투자 자원흐름의 불균형 군사비 및 자원사용의 불균형 도시화 인구통계 자원사용의 대차대조표 에너지 소비 환경과 공해 국민소득계정, 경제적 성취의 추이

資料: 1)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and Development, Geneva, 1970.

2)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Statistics*, New York, 1975.

3)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4)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 Press, 1995.

〈附表 2-2〉 各國의 社會指標體系의 關心領域 構成의 比較

미국(1980) ¹⁾	영국(1990) ²⁾	일본(1995) ³⁾	한국(1995) ⁴⁾
인구 및 가족 건강과 영양 주거와 환경 교통 공안 교육과 훈련 사회참여 문화, 여가, 시간이용 노동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	인구 가구와 가족 교육 고용 수입과 부 지출과 자원 건강과 사회서비스 주거 교통과 환경 여가 사회참여 법집행	주거 소득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 (구조변화)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資料: 1) U. 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1980.

2)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Social Trends*, 1990.

3)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 생활지표』, 1995.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1995.

第3章 「삶의 질」과 社會指標

第1節 序 論

생활필수품에 결핍을 느끼던 시대에는 화폐단위로 표시할 부가가치의 집계량인 GNP 또는 1인당 GNP가 국민생활수준을 드러내는 代變數가 되었으나, 경제사회의 발전과 진화에 따른 국민욕구의 상향이동 및 다양화는 지난날의 단순한 물량위주로부터 오늘날에는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삶, 이른 바 「삶의 질」로 관심이 移行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정지표로 등장하였다.

삶의 질은, 그 개념과 측정방법²⁸⁾에 있어서 발전단계가 상이한 선·후진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通說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채, 학술적으로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代理物 내지 證據로 여겨지는 사회지표가 국제기관의 권고안으로서 그리고 학계는 물론 국가별로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즉, 개인 및 인구집단의 삶의 주요국면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태를 量的·質적으로 표시하는 社會指標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방편적인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표는 부문 내지 관심영역별로 수많은 지표계열로 이루어져 삶의 질을 집약적으로 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에 설정된 부문과 지표수는, 1978년에 성안된 최초의 체계와 1987년의 개선안의 경우 8개 부문에

28) 「삶의 질」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참조

각각 350개와 468개의 지표가 제시되었고, 1995년에 개편된 체계에서는 12개 부문에 553개의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78, 19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삶의 질을 이처럼 수백개의 지표에 의하여 집약시킨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이들 지표를 국제비교하거나 지역간 비교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構成하는 要件(要素)에 따라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의 변모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본장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은 제2장에서 「삶의 질」의 측정방법으로 제시된 미시적 접근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표계열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둘째, 국내·외의 사회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서 앞에서 규정한 삶의 질의 구성요건에 따라 이 구성요건에 속할 관련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 지표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장에 이어 계속되는 분야별 연구, 즉 삶의 질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내용과 연결짓고자 한다.

第2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접근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존의 국민총생산(GNP) 개념을 ‘福祉的’ 또는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화폐척도에 의하여 조정하여 추계하는 巨視的 接近과, 둘째 삶의 질을 사회지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微視的 接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명칭으로 연구되었던 福祉國民總生産(Welfare GNP), 經濟的 福祉測定(MEW), 純國民福祉(NNW), 純經濟的福祉(NEW) 등이고, 이들 접근방법상의 구성항목인 ‘환경침해에 의한 국민복지의 저해’를 강조하여 근년에 국제기관에 의하여 연구되어 권고되고 있는 環境要因調整國內純生産(Environmentally Adjusted NDP) 내지 Green GNP 등이다. 후자의 사회지표에 의한 접근은 삶의 주요국면을 체계화하여 부문 또는 관심영역을 구성하고 영역별 지표에 의하여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회지표

를 이용하여 삶의 질에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앞장에서 제시한 ‘삶의 질’의 구성요건에 따라 관련지표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第2節 社會指標에 의한 「삶의 질」指標

1. 古典的²⁹⁾인 生活水準指標

가. 費目別 消費支出率에 의한 生活水準指標

생활필수품이 보편적으로 결핍되고 국민의 여망과 기대가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생활영위를 위한 기본적 수요로서 식·의·주 등에 대한 욕구를 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지출에 의하여 생활수준이 규정되며, 또한 그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시대의 경제사회발전단계에 상응한 ‘삶의 질’의 수준이 가늠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엔겔係數’와 같은 지표는 국민소득수준이 낮거나 경제사회발전이 진전된 사회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양적으로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엔겔계수와 같은 비목별 소비지출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19세기의 背景은, 1840年代 후반에 서구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노동자의 폭동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收支資料의 수집을 활발하게 한 史實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엔겔(E. Engel)은 1853년에 수집된 153개 벨기에 노동자에 대한 家計支出調査資料를, ① 公的扶助에 의존하는 가족, ② 빈곤하되 부조없이 사는 가족, ③ 안락한 환경에 있는 가족 등 3가지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가족의 지출내용을 음식물·의류

29) ‘고전적’이라는 의미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던 이른바 ‘사회지표운동’ 이전에 나타난 연구물이기 때문에 필자가 편의상 붙인 수식어이다.

·주택·광열·일터의 작업도구·교육 및 신앙·세금·건강·여가·보험과 개인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에 대한 假說的인 法則을 제시하였다(Engel, 1895; Anlage, 1895). 즉,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가족의 경우 음식물비 지출비율은 61.0%로 나타났고, 위의 분류중 빈곤하되 부조 없이 사는 가족과 안락한 환경에 있는 가족의 경우는 이 비율이 각각 55.0%, 50.0%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 음식물비지출비율은 최대 72.9%였고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저하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에 의하여 “빈곤가족일수록 총소비지출에 대한 음식물소비지출의 비율은 크다”는 가설(Engel, 1985; Anlage, 1985)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비율에 의하여 생활수준을 실증적으로 지표화한 최초의 연구라고 하겠다.

그후 미국 매서츄세츠의 노동통계담당자였던 라이트(C. Wright)는 1875년에 프러시아 가족의 지출을 구분하여 엥겔이 제시한 가설을 表로 작성하여 그의 가설을 해석하였다. 부연하면, 첫째, 소득이 클 수록 생존을 위한 지출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며, 둘째, 피복비지출비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비슷하고, 셋째, 주택비·집세의 지출비율과 광열비의 그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슷하고, 넷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잡비지출비율은 커진다는 4가지의 해석을 하였다(Stigler, 1954).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 ‘엥겔의 법칙’으로 지칭되고 있고 해석상의 4가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엥겔의 제1, 2, 3, 4법칙이라고도 한다.

한편 슈바베(H. Schwabe)는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상대적 지출액에 관한 실증적 연구(Schwabe, 1966)를 하였다. 그는 연간 1,000텔러(Thaler)미만을 받는 공무원 4,281명에 대하여 96~999텔러까지 20개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집세자료와, 연간 1,000텔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9,471개 가구에 관한 소득 및 지출자료에 의하여, ‘빈곤한 가구일수록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상대적 지출액은 증가’하는 실증적인 사실(Schwabe, 1966)을 찾아냈다.

나. 生活의 內容을 指標化한 先行研究

생활수준의 향상이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서 강조되고 있으나 동태적인 경제사회에서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사회과학자라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하에 데이비스(Davis, J. S.)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 또한 사회적인 諸力이 작용하는 생활을 잘 서술하기가 쉽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개인 및 인구집단에 의하여 '認知된 實體'가 생활의 내용임을 제시하였다(Davis, 1945).

〈表 3-1〉 '認知된 實體'로서 生活內容

생활의 내용	인지된 실체
1. 복합적인 소비의 결합	• 상품, 상품의 사용 및 소비된 용역 • 대가없이 사용가능한 자유재, 공공재 • 자금용역
2. 근로여건	• 근로시간 • 노동의 다양성 • 안전훈련 • 안락, 편익시설 • 근로강도 • 복지시설 • 인간관계
3. 소유물	• 재화의 물적 스톡 • 보험의 보호와 관련권리 • 개발된 능력 • 생활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 저축과 투자
4. 자유	• 신앙·표현·협동의 자유 • 정부에 대한 참여의 자유 • 배움의 자유 • 모험의 자유 • 재화선택의 자유 • 돈버는 자유
5. 생활환경	•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적 조화와 안전 • 사망·질병·비우호적인 것·실업·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 가정의 해체·불확실성의 완화
6. 균형과 조화	• (1~5에 대한)균형과 조화

資料: Davis, J. S., "Standard and Content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5, No.1, March 1945, pp.1~15.

그가 제안한 생활의 내용은, <表 3-1>과 같이 개인 및 인구집단의 욕구와 관련되고 있는, ① 복합적인 소비의 결합, ② 근로여건, ③ 소유물, ④ 자유, ⑤ 환경, 그리고 ⑥ 앞의 ①~⑤까지의 균형과 조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비스의 제안은 생활을 구성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선례로 평가된다. 表에서 보듯이, 물리적인 생활의 내용으로서 복합적인 소비, 근로여건, 소유물 등을, 정신적인 것으로서 자유를, 그리고 생활환경으로서 건강·사회조직단위·국가에 대한 안전을, 끝으로 생활을 구성하는 5가지의 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생활의 내용별로 ‘인지된 실체’를 분명하게 정의한 지표로 나타내지 않아 지표의 계수화방법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으나 생활을 구성하는 내용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생활수준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계수화를 통하여 생활수준의 국제비교를 시도한 고전적인 실증연구의 일례로서 베네트(Bennett, M. K.)의 연구(Bennett, 1951)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31개국에 대하여 각국의 정치체제와는 관계없이 생활의 구성요소를 6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과 관련 있는 19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생활수준의 구성요소로서 윤곽지은 그룹에 따라 제시한 지표는 <表 3-2>와 같다. <表 3-2>의 모든 지표는 그 값이 증가하면 생활수준이 향상됨을 나타내는 正(+)의 지표이다. 그러나 제시된 ‘1인당 담배소비량’과 같은 지표는 그 값이 클수록 생활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하여 오늘날의 현실에는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한 ‘주택용 1인당 무생물 에너지 사용량’, ‘교통에 이용된 1인당 무생물 에너지 사용량’ 등이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된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베네트는 이 지표치가 가장 높은 국가의 수준을 100.0으로 하여 각 지표치를 지수화한 후 다시 이들 각각을 합산하여 최고수준의 국가를

100.0으로 설정, 31개국에 대하여 상대적인 지수적 순위를 산출하였다.

1934~38년간의 각국자료를 토대로 각 지표에 가중치³⁰⁾를 임의적으로 주어 총지수를 산출한 결과, 생활수준의 격차는 미국을 100.0으로 하였을 때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는 각각 80.6, 75.6, 40.1, 20.8이었고 우리나라는 인도보다 다소 낮은 19.4로서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表 3-2〉 生活水準의 構成要素와 指標(Bennett의 研究)

구 성 요 소	지 표	가중치
A. 음식물과 담배	1) 1인1일 소비된 총열량	(1.0)
	2) 1,000칼로리당 곡물 이외의 식료품으로부터 얻은 열량의 비율	(3.0)
	3) 1인당 담배소비량	(1.0)
B. 건강	4) 유아사망률의 역수	(3.0)
	5) 1,000명당 의사수	(2.0)
C. 주거 및 피복	6) 1,000명당 목재소비량	(1.0)
	7) 1,000명당 시멘트소비량	(1.0)
	8) 주택용 1인당 무생물 에너지 사용량	(3.0)
	9) 면·털·레이온 등 1인당 직물 소비량	(2.0)
D. 교육과 여가	10) 학교재적률	(2.0)
	11) 1인당 편지수	(3.0)
	12) 1,000명당 영화관수	(1.0)
E. 교통 및 통신	13) 1인당 철도화물수송량	(1.0)
	14) 철도, 내륙, 수로교통에 이용된 1인당 무생물 에너지 사용량	(2.0)
	15)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등 1,000명당 자동차수	(2.0)
	16) 1,000명당 전화수	(1.0)
F. 균형지표	17) 1인당 산업에너지 사용량	(2.0)
	18) 1,000명당 동물수	(2.0)
	19) 연간 41도(F) 이상의 일수	(0.5)

資料: Bennett, M. K., "International Disparities in Consumption Level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1.

30)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 설정의 근거는 없고 비판을 받아도 방어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Bennett, 1991).

이 연구는 앞의 데이비스의 연구를 수용하여 오늘날의 사회지표와 유사한 체계를 제시한 연구결과로서 인정되고, 나아가 구성항목별 지표에 가중치를 주어 합성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로 생활수준, 삶의 질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研究先例³¹⁾로 여겨진다.

2. 國際機關의 「삶의 질」 指標와 社會指標

가. UNRISD의 「삶의 질」 指標

드로노우스키(Jan Drewnowski)에 의하여 제시된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사회지표체계는, 삶의 질이 流量으로서 생활수준과 貯量으로서 복지수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 지표를 계수화하고 單一指數로 종합하기 위하여 고안된 체계이다. 이 체계는 앞서 살펴 본 데이비스의 그것보다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또한 개발도상국의 발전문제를 고려하여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을 반영하는 구성요소와 지표의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삶의 질’ 수준을 플로우(flow)개념의 생활수준과 스톡(stock)개념의 복지수준으로 파악하여 삶의 질을 찾는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생활수준지표체계에서 제시된 생활수준의 구성요소별 개별지표는 <表 3-3>과 같다.

생활수준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결과로서 단위시간에 획득된 욕구에 대한 충족의 수준’(Drewnowski, 1970)으로 정의하고, 생활의 영역을 첫째, 영양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음식물, 의복·거처·건강·교육 등

31) 「삶의 질」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국제기관과 학계에서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베네트의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先例라고 여겨진다. 국제기관 및 학계의 연구 중 근년의 것으로는 Slottije, et al.,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1991; U. 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 Press, 1995 등이 있다.

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소비영역, 둘째, 여가와 안전을 위한 생활의 보호영역, 셋째, 사회적 및 물리적인 환경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수준을 규정짓는 구성요소를, 처음에는 영양·주거·건강·교육과 여가·안전·환경 등 6개를 제시하였으나(表 3-2 참조), 후에 <表 3-3>과 같이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영양·의복·주거·건강·교육·여가·안전·사회적 환경·물리적 환경 등 9개로 확대하였다(Drewnowski, 1974).

〈表 3-3〉 生活水準의 構成要素와 指標(Drewnowski의 研究)

구 성 요 소	지 표
1. 영양(식품섭취)	a. 열량섭취량(1일1인당) b. 蛋白質섭취량 c. 澱粉 이외의 열량섭취 비율
2. 의(의류사용)	a. 의류소비 b. 신발소비(연간 1인당) c. 의복의 質
3. 주거(주거의 점유)	a. 주택서비스 b. 점유밀도(거주자당 방수) c. 주거의 전용(가구당 주택수)
4.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a. 의료시설 접근성 b. 예방(전염병·기생충질환에 의하지 않은 사망률) c. 비례사망률(총사망 중 50세 이상자 사망의 비율)
5. 교육(이수한 교육)	a. 취학률 b. 졸업자비율 c. 교사당 학생비율
6. 여가(과로등 보호)	a. 여가시간(연간 근로로부터 자유시간)
7. 안전(보장된 안전)	a. 개인의 안전 b. 생활방도의 안전
8. 사회적 환경(사회적 접촉과 레크레이션)	a. 노사관계 b.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c. 정보와 통신 d. 여가: 문화활동(음악, 영화, 연극, 시각예술, 독서) e. 여가: 여행 f. 여가: 스포츠와 운동
9. 물리적 환경	a. 깨끗함과 조용함 b. 주변이웃의 쾌적도 c. 환경의 아름다움

資料: Drewnowski, J.,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생활수준의 구성요소의 설정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활동의 종류(Drewnowski, 1970)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영양’은 식량생산활동에 의하여 충족되는 필요로서, ‘건강’과 ‘교육’은 각각 보건서비스와

교육제도에 의하여 충족되는 필요로서 생활수준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들 구성요소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는 각 구성요소를 대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양적 기본적 속성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할 것과, 지표수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나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해도 구성요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Drewnowski, 1970). 구성요소별 개별지표는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로 표시하여, 그 수준은 견딜 수 없음·부적절·적절·풍족 등으로 位階化³²⁾하여 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스톡으로서 파악하는 福祉水準 또는 福祉狀態에 대한 정의는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인구집단이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Drewnowski, 1970)이며, 그 상태가 양적으로 표시되어 개인 및 인구집단의 속성의 총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수준은 경제적으로는 富의 개념이자 스톡을 측정하는 수단(Drewnowski, 1974)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로노우스키가 제안한 복지수준(복지상태)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表 3-4>와 같다.

<表 3-4> 福祉水準의 構成要素別 指標

구 성 요 소	지 표
1. 건강상태(육체적 발달수준)	a. 영양상태(생물학적 검사) b. 건강상태(질병으로부터 해방) c. 여명(출생시) d. 신체적 적응(신체적 적응검사)
2. 교육상태(정신적 발달수준)	a. 14세 이상인구의 비문맹률 b. 교육적 성취 c. 인력수요에 대한 교육의 적합도 d. 고용(경제활동인구비율)
3. 사회상태(사회통합과 참여)	a. 통합 b. 참여

資料: Drewnowski, J.,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pp.90~91.

32) 개별지표에 대한 위계화의 기준은 本章의 末尾에 수록한 <附表 3-1-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복지수준을 이루는 요소는 육체적 발달수준으로서 교육상태, 그리고 사회적 통합 및 참여를 나타내는 사회상태 등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적인 지표는,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결핍·불충분·충분·풍요 등 4가지로 그 수준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수준별 측정의 기준³³⁾은 <附表 3-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國際聯合의 社會·人口統計體系(SSDS)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SSDS)(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75)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체계로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지표로 전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인구통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드러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表 3-5> UN의 社會·人口 統計體系

부 문 구 성	
I. 인구의 규모, 구조, 출생, 사망, 이동	VII.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II. 가족형성, 가족, 가구	VIII. 교육
III. 사회경제적증과 이동	IX.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IV. 소득분포, 소비, 자산형성	X. 보건·의료서비스
V. 주거	XI. 질서, 공안, 범죄
VI. 시간배분, 여가	

資料: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Statistics*, New York, 1975. pp.55~125.

지표를 체계적으로 담는 부문의 구성은 <表 3-5>와 같이 인구로부

33) <附表 3-1-2>에 제시된 복지수준지표에 대한 측정기준은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다. <附表 3-1-1>의 생활수준지표의 측정기준 또한 객관적인 논거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제시한 지표는 원용하되 '삶의 질'의 측정방법을 발전시킨 연구물은 보이지 않는다.

터 범죄에 이르기까지 인구통계 및 사회통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별 지표에 대하여 지표의 값을 구하는 통계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통계적 특성별로 집계항목을 제시하여 통계계열의 포괄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체계에 속한 모든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다.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

이 체계는 1973년에 작성된 후 1982년에 새로운 체계가 작성되었고 체계에 포함된 지표는 삶의 질을 표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³⁴⁾의 특징은 개개인의 복지에 기본적·직접적인 중요성이 있고 확인과 정의가 가능한 열망 또는 복리를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삼으며 그 체계는 8개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본적·공통적인 관심영역으로 체계분화하여 24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후자인 1982년의 지표체계(OECD, 1982)는 <表 3-6>과 같으며, OECD회원국에 대한 지표치의 산출을 위한 통계적인 측정가능성을 배려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화하는 객관적인 지표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체계의 관심분야와 하위관심사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은 전자와 같으나 지표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33개를 제시하고 있다.

<表 3-6>에 제시된 객관적 및 주관적인 지표들은 건강과 안전의 수준, 소득과 부의 형평성,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 개개인의 삶의 관심분야와 영역별로 '삶의 질'을 이루는 물리적 및 정신적인 측면을 알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지표 중 '문맹률'은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이를 제외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표시하는 지표계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34) 제2장 제3절에 제시된 <表 2-3> 참조(OECD, 1973)

〈表 3-6〉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관심분야와 영역	지 표
1. 건강 • 수명 • 건강한 삶	• 기대수명, 週産期사망률¹⁾ • 일시적 장애인, 영구적 장애인
2. 교육과 학습 • 교육시설의 활용 • 학습	• 정규교육, 성인교육 • 문맹률
3.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 가용노동력 • 근로생활의 질	• 실업률,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실망노동자 • 평균근로시간, 통근시간, 유급연가, 비전형적인 근로, 수입의 분포, 치명적 직업병, 불유쾌한 근로환경
4. 시간과 여가 • 시간활용	• 주당 평균자유시간, 자유시간활동
5.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 소득 • 富	• 소득분배, 저소득, 물질적인 박탈²⁾ • 부의 분포
6. 물리적 환경 • 주거여건 • 서비스의 근접가능 • 환경적 불유쾌	• 주거공간, 실외공간 접근도, 기본적인 편의시설 • 선정된 서비스(의료, 상점 등)의 근접도 • 공기오염에의 노출, 소음에의 노출
7. 사회적 환경 • 사회적 귀속	• 자살률
8. 개인의 안전 • 위험에의 노출 • 인지된 위협	• 돌발적인 치사, 치명적이 아닌 심각한 상해 •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

註: 1) (체중 1Kg 이상 사산유아수+체중 1Kg 이상인 산전사망아)/(체중 1Kg 이상 사산유아수+체중 1Kg 이상 신생유아) × 100

2) 中位가처분소득 미만 가구비율임.

資料: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pp.17~46.

3. 國內·外の 社會指標

가. 美國

터럭키(Terleckyj, N. E.)에 의하여 1970년대 중반에 연구된 미국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Terleckyi, 1975)는, 삶의 질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통하여 보여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는 측정가능한 사회적 변동의 분석은 사회적 관심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건강과 안전’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미국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영역을 대표하며, 그러한 관심사의 선정은 국가목표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로부터 도출하고 있다(Terleckyi, 1975). 도출된 관심사는 개인적 및 집단적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각 관심은 개인 및 민간의 시장활동 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활동을 그 요건으로 한다.

上述한 내용을 토대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심은 <表 3-7>과 같이 건강과 안전, 교육·훈련·생활수준, 소득, 경제적 형평, 삶의 터전, 예술·과학·자유시간 등 6개로 구성하고, 관심별로 서로 연관된 18개의 사회적 여건을 하위 관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Terleckyi, 1975).

이렇게 구성된 관심영역별 지표는 관심영역에 함축된 주요 목표의 성취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2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 전체 및 지역 수준에서 개인과 정치적 집단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바람직한 변동방향에 관한 고차원의 합의를 전제하고, 둘째, 개개인 또는 지역적 특성과는 분별되는 국가적인 속성을 지니며, 셋째, 지표로써 측정되는 여건들은 대부분 개인·가족·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현수준의 유지 및 보다 나은 개선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Terleckyi, 1975). 삶의 질을 사회적 관심영역별 지표에 의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터럭키의 연구는 사실상 국가발전목표에 초점을 둔 지표체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체계는 무역 및 국방과 같은 국제관계, 고용과 물가안정 등은 포함하지 않은 채, 삶의 질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건에 대한 양적지표에 의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계성이 있다.

〈表 3-7〉 Terleckyj 의 「삶의 질」의 關心事와 指標(1975)

관심사	기본지표
건강과 안전 • 건강 • 공공안전	• 출생시 평균기대수명 • 활동장애를 가진 인구비율 • 연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교육, 훈련, 생활수준 • 기본적 교육 • 고등교육 • 收入能力 • 일반적인 收入水準	• 표준고사를 기준으로 한 성적지수 • 평균수준을 3년 이상 밑도는 학생비율 • 대학졸업자수 • 노동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인구수 • 중위임금
소득 • 소득의 적절성 • 소득의 지속성	• 빈곤인구비율 • 빈곤조건에 가까운 인구비율 • 표준생계비의 30% 이하의 인구비율
경제적 형평 • 일반적인 경제적 형평 • 인종별 경제적 형평 • 성별 경제적 형평	• 소득비율 (제20분위/제90분위) • 흑인가계의 평균소득(백인에 대한 비율) • 여성의 시간당 임금(남성의 임금에 대한 비율)
삶의 터전(사람이 사는곳) • 주택 • 이웃 • 공해억제 • 야외 레크레이션 • 보존	•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율 • 만족할만한 이웃들을 두고 사는 인구비율 • 성가신 공해에 노출된 인구비율 • 정기적인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12세 이상 인구비율 • 생명 및 자연 보존지수
예술, 과학, 자유시간 • 자유재량의 시간 • 과학 • 예술	• 연간 1인당 자유재량시간 • 기초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수 • 활동중인 예술가수

資料: Nester E. Terleckyj,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Estimates of Pos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4~83*,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75. pp.16~17.

〈表 3-8〉의 미국의 사회지표체계(Social Indicators III)(U. N.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1980)는 첫째, 미국사회의 현상

태와 둘째, 다가올 변화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요 추세 및 발전을 서술하는 체계로서, 삶의 질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문구성은 ‘건강’과 ‘영양’ 등 목표영역이 각각 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章인 ‘건강과 영양’으로 관련 목표영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구 및 가족, 주거와 환경,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 문화·여가·시간의 사용 등 관련된 영역을 각각 하나의 목표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附表 3-1-3>과 같이 삶의 관심사에 대한 중요성 및 만족도를 조사한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표체계의 목표영역으로 반영하고 있다.

〈表 3-8〉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부 문	세부 목표영역	부 문	세부 목표영역
1. 인구, 가족	• 공적인 인식 • 인구성장률과 구성 • 가족규모와 구성 • 거주상태 • 혼인상태와 안정성 • 국제비교	7. 사회참여	• 공적인 인식 • 투표율 • 자원봉사 • 멤버십 • 국제비교
2. 건강, 영양	• 공적인 인식 • 건강자원, 이용, 비용 • 삶의 기회 • 예방과 영양 • 국제비교	8. 문화, 여가, 시간이용	• 공적인 인식 • 문화비지출 • 문화적 활동 • 여가활동 • 시간활용 • 국제비교
3. 주거, 환경	• 공적인 인식 • 주거양식과 시설들 • 주택수요의 경향들 • 지역사회 서비스와 편의시설 • 환경의 질 • 국제비교	9. 노동	• 공적인 인식 • 노동자원들 • 취업과 실업 • 노동조건과 질 • 국제비교

〈表 3-8〉 계속

부 문	세부 목표영역	부 문	세부 목표영역
4. 교통	• 공적인 인식 • 미국인의 삶에 있어서의 교통의 역할 • 도시간 교통 • 사회적 비용과 영향 • 교통에너지소비 • 국제비교	10. 사회보장, 복지	• 공적인 인식 • 자원투자 • 보호서비스의 제공 • 국제비교
5. 공안	• 공적인 인식 • 자원투자 • 범죄와 희생자들 • 기타 공적안전 지표 • 국제비교	11. 소득, 생산성	• 공적인 인식 • 소득, 소비, 내구재 • 소득의 비교 • 빈곤층 • 국제비교
6. 교육, 훈련	• 공적인 인식 • 자원투자 • 등록과 교육적 성과 • 수행과 성과		

資料: U.S.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December 1980.

이렇게 설정한 11개의 목표영역에 따라 세부 목표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공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해당 영역의 지표 중 산출가능한 지표에 대하여는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英國

英國(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에서는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Social Trends라는 책을 통하여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 지표체계는 12개의 부문과 58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包括的인 體系이다. <表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지표들이 영국이 갖고 있는 심각한 社會問題인 地域間 葛藤, 離婚, 失業 등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社會報告(social reporting)의 기능을 강조하여 사회현상과 변화경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表 3-9〉 英國의 社會指標體系

부 문	세부 관심영역	부 문	세부 관심영역
1. 인구	인구구조와 변화, 출생과 사망, 이동, 국제비교	7. 건강과 사회서비스	국민의 건강실태, 다이어트, 사회적 습관과 건강, 사고예방,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자원
2. 가구와 가족	가구, 가족, 결혼과 이혼, 가족형성	8. 주거	주택공급, 주택조건, 무주택자들, 주거비용과 지출, 주거인의 제특성
3. 교육	5세 이하 아동의 학교와 유치원 시설, 학교와 학생, 16세 이상 학습과 활동, 추가·상위교육, 성인의 교육기준	9. 교통과 환경	교통, 환경
4. 고용	노동력, 고용의 유형, 이동성과 태도, 노동시간 실업, 고용과 훈련	10. 여가	가용한 여가시간, 사회· 문화활동, 휴일, 자원
5. 수입과 부	가구수입, 조세, 수입의 분배, 하위수입군, 부(富)	11. 사회참여	봉사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정치, 기타참여
6. 지출과 자원	가구지출, 가격, 소비자 신용, 가구저축, 공적 수입과 지출, 국가자원	12. 법집행	법위반, 경찰, 법원의 대응과 형집행, 감옥과 재할교육, 배상과 법적 원조, 자원

資料: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Social Trends*, 1990.

다. 日本

日本은 국민생활의 내용과 변화는 물론 삶의 질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사회통계와 사회지표로서 사회생활통계지표, 신국민생활지표, 소비생활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社會生活統計指標(日本 總務廳統計局, 1995)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연합의 SSDS를 원용하여 1976년부터 작성되고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결친 관련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 부문의 구성과 부문별 관련지표를 예시적으로 수록한 내용은 <附表 3-1-4>와 같다.

사회생활통계지표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전반에 걸친 내용을 부문으로 구성³⁵⁾하여 모든 통계는 지역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통계와 지표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이 체계는 국민전체, 가계, 개인의 생활을 총망라하여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국민생활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新國民生活指標(PLI: People's Life Indicators)는 생활의 상황을 나타내는 체계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체계는 1970년에 국민생활심의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1974년에 사회지표(SI: Social Indicators)로 공표되었고 1976년에 국민생활지표(NSI: New Social Indicators)로 체계개편을 한 후, 급격한 경제사회정세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감안한 체계개편을 하여 1992년부터 공표되고 있다(일본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1995). PLI의 체계구성은 생활지표로서 활동영역 및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2개의 지표군으로 크게 나누어 前者의 活動領域은 住居, 消費, 勞動, 養育, 健康, 餘暇, 教育, 交際 등 8개로 구분한다. 後者の 構造變化指標는 개인의 활동영역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5가지의 구조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Green화이다. 활동영역지표와 구조변화지표를 담은 체계를 정리하면 <表 3-10>과 같으며, 사회생활통계지표와 신국민생활지표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하여 <附表 3-1-5>에 수록하였다.

生活統計(日本 國民生活センター編, 1990)의 내용은 <表 3-11>과 같이 총 13장의 광범위한 내용으로 편제되어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35) 부문은 ㉠ 자연환경 ㉡ 인구·세대 ㉢ 경제기반 ㉣ 재정 ㉤ 학교교육 ㉥ 사회교육·문화·스포츠 ㉦ 노동 ㉧ 가계 ㉨ 거주환경 ㉩ 사회보장 ㉪ 건강·의료 ㉫ 안전 ㉬ 생활시간의 배분 등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깊은 상세한 내용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생활통계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통계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의 성격을 지닌 지표들을 지역간 비교 및 국제비교를 할 수 있게 별도의 章을 설정하고 있다.

〈表 3-10〉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PLI)의 構成

활동영역	구조변화지표(항목)
주거, 소득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	고령화(인구·세대 등, 사회보장, 시설) 국제화(인적교류, 재화와 정보의 이동, 기타 국제화) 집중화(인구집중, 재화와 정보의 집중) 정보·서비스화(전반적 동향, 가정내, 사회일반) Green화(환경적 측면, 자원적 측면)

資料: 日本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新國民生活指標』, 1995.

〈表 3-11〉 日本 ‘生活統計’의 章別 構成

장별	구성내용	장별	구성내용
제 1장	인구 및 세대	제 8장	주택 및 환경
제 2장	취업 및 고용	제 9장	사회보장
제 3장	생활시간 및 여가	제10장	교육 및 문화
제 4장	소득 및 세부담	제11장	지역비교지표
제 5장	소비수준 및 소비내용	제12장	국제비교지표
제 6장	저축 및 부채	제13장	국민생활센터 생활관련통계
제 7장	물가		

資料: 日本 國民生活センター 編, 『生活統計; 暮らしの統計: 1989』, 1990.

라. 韓國의 社會指標

韓國의 社會指標는 1978에 최초로 체계화가 이루어진 이후 1987년에 그 체계를 개선하여 통계청에서 ‘韓國의 사회지표’로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1995년에 새로운 체계를 작성하였다. 3차례에 걸쳐 고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의 부문은 <表 3-1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995년에 개선된 부문별 지표는 <附表 3-2-4>에 수록하였음).

〈表 3-1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의 部門構成

1978년 체계 ¹⁾	1987년 체계 ²⁾	1995년 체계 ³⁾
1. 인구 2. 소득·소비 3. 고용·인력 4. 교육 5. 보건 6. 주택·환경 7. 사회 8. 공안	1. 인구 2. 소득·소비 3. 고용·노사 4. 교육 5. 보건 6. 주택·환경 7. 사회 8. 문화·여가 9. 공안 (여성)	1. 인구 2. 가족 3. 소득과 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9. 환경 10. 복지 11. 문화와 여가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

資料: 1) 經濟企劃院·韓國開發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解說編)』, 1978.

2) 朱學中 外, 『우리나라 社會指標의 體系改善』, 韓國開發研究院, 1987.

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改編研究』, 1995.

4. 國內·外의 「삶의 질」 調査 및 國際比較

가. 「삶의 질」에 관한 國內·外의 調査事例

1) 國內

삶의 질에 관한 조사는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종다양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사사례를 예로서 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현 등의 연구, 중앙일보사의 조사, 공보처 여론과가 민간조사기관에 위촉하여 행한 삶의 질에 관한 의식조사, 특정대상으로서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예를 들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총리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관련여론조사(日本, 內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總理府), 1995) 등이 있다.

정규현 등의 연구(정규현 외, 1994)에서, 삶의 질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고 또 상당부분 개인의 주관적 판단영역에 속하

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성격의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양적 분석을 위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물리적 삶의 질’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지표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³⁶⁾를 통하여 삶의 질을 소득, 환경, 복지 등 세부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表 3-13>과 같은 1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表 3-13> ‘物理的 삶의 질’의 部門別 指標

부 문		지 표
소득	• 소득수준 • 소득의 안정 • 분배의 평등	• 1인당 GNP • 실업률 • 소득분배지수
환경의 질	• 수질 • 대기의 질 • 쓰레기 처리 • 자연휴식공간	• 팔당댐의 BOD 및 COD • 서울의 SO₂ 농도 • 하수처리율 • 산업폐기물 발생량 • 주요도시 1인당 공원면적
복지	• 주택의 질 • 교통의 질 • 공간상태 • 의료수준 • 사회부조	• 주택보급률 • 1인당 주거면적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차량 1대당 도로 면적 • 강력범죄 발생률 • 평균수명 • 사회보장복지비 비율

資料: 정규현·배규한·이달곤·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성장·복지·환경의 조화』, 나남출판, 1994, p.96.

조사결과로 나타난 소득과 환경, 그리고 복지 등 3부분의 상대적 중요도는 1992년에 각각 52.7%, 22.5%, 24.7%의 비율이나 이 비율은 2010년에 각각 34.6%, 34.6%, 30.5%를 보여, 부분의 중요도가 30~35%내외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정규현 외, 1994).

중앙일보사가 전국 74개시의 삶의 질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경쟁

36) 사회저명인사(135명)와 21세기위원회(39명)를 대상으로 1992년(4.25~5.2)에 조사를 하였음(정규현 외, 1994).

력 있는 도시보다는 ‘살맛 나는’ 도시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행한 삶의 질의 평가분야와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지표계열은 <表 3-14>와 같다(중앙일보사, 1995).

〈表 3-14〉 『삶의 질』의 評價分野와 評價項目

평가분야	평 가 항 목(지표)
건강한 생활	인구밀도, 수질오염도, 의료인구수, 공원녹지비율, 약국수, 대기오염도
안전한 생활	화재발생건수, 유해업소수,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경찰관수, 소방장비수
교육·복지	사설학원수, 4년제 대학정원수, 학급당 학생수, 복지시설 수용인원, 사회복지비, 대학진학률
경제생활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시·군통합여부, 25평 아파트 전세가격, 장바구니 물가, 취업률
편리한 생활	주택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자동차주행속도, 시장·백화점수, 행정서비스 수준
문화생활	음악·연극무대 객석수, 영화관 좌석수, 전시공간면적, 공공도서관 장서수, 서점수

資料: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삶의 질』입체분석)』, 1995.

평가분야는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 등 6개이고 평가분야별 항목으로 제시한 지표는 36개이다. 이들 지표의 분포에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감안한 전체적인 생활여건으로서 삶의 질의 순위는 74개시 가운데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의 서귀포가 각각 1위와 2위를, 그리고 서울은 5위를 보이고 있다. 순위를 매기는 방법론상의 타당성 여부³⁷⁾를 떠나 언론매체가 실시한 이러한 조사가 지니는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인식으로

37)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 지표는 正 또는 負의 의미를 지니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예컨대 74개시의 ‘수질오염도’의 평균치가 크면 클수록 삶의 질은 저하되는데 불구하고 그 분포를 Z-Score로 표준화시킬 경우 평균치(0)를 중심으로 +, -의 값을 지니게 되며 실질적으로 -의 값도 수질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공보처 여론과가 민간조사기관인 (주)미디어 리서치에 위촉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욕구, 기대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정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미디어 리서치, 1995)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비례할당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의 주요내용은, 국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개념, 현 생활만족도 수준 및 미래에 대한 기대치, 민생·생활·복지개혁과제의 우선순위, 개혁·세계화·삶의 질간의 상관관계 측정 등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에 대한 개념을 모든 일상생활이 풍요롭고 편안한 것,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종교생활, 자아실현, 풍부한 문화생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의 구성부문은 <表 3-15>와 같이 23개를 제시하고 있다.

구성부문에 대한 만족도 순위는 가정의 화목,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최하위의 순위는 현재의 물가, 교통문제 해소, 청소년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³⁸⁾.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의 분야’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 자녀문제, 안락한 주거생활, 수입증대, 직장에서의 성공, 본인의 노후대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특징은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나 규정이 없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인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외, 1995). 삶의 질을 사회문화, 사회제도 및 계층의식, 직무, 일상생활,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 등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다, ‘사회문화’를 보는 내용은 유교윤리의식, 가족과 가족의식, 교

38)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에 대한 10년후의 기대치도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미디어 리서치, 1995).

육과 학벌의식, 종교와 종교의식 등이다. ‘사회제도 및 계층귀속의식’과 관련된 것은, 정부와 정부활동, 진보와 보수의식,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대한 태도, 비공식적 인간관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근로자 및 재벌의 사회공헌도에 대한 인지, 근로자들의 계층귀속의식, 근로자의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 등이다. ‘직무’에 관한 내용은 직무자율성과 경영합리성, 직무만족과 헌신, 관계적 특성 등을, 그리고 ‘일상생활’은 환경과 주거, 여가생활, 생활만족의 기대요인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삶의 하위영역별 만족도, 그리고 양자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表 3-15〉 『삶의 질』의 構成部門과 關心順位

구 성 부 문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 순위
1. 현재의 소득수준	1) 본인과 가족의 건강
2. 현재의 직업	2) 자녀문제
3. 현재의 물가	3) 안락한 주거생활
4. 깨끗한 수돗물 공급	4) 수입증대
5. 깨끗한 자연환경	5) 직장에서의 성공
6. 자연휴식공간 확보	6) 본인의 노후대책
7. 쓰레기 처리문제	
8.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	
9. 주택난 해소	
10. 교통문제 해소	
11. 민생치안 확립	
12. 의료서비스 제공	
13. 사회복지 향상	
14. 교육의 질 향상	
15. 안전관리 시설	
16. 인권보호	
17.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18. 청소년 문제	
19. 현재의 건강상태	
20. 문화·예술생활	
21. 레저·여가생활	
22. 주위사람과의 인간관계	
23. 가정의 화목	

資料: (주)미디어 리서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보고서』, 1995.

2) 日本

일본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국민생활관련 여론조사’는 현재의 생활 및 향후의 생활에 대한 국민의식, 생활의 질, 풍요한 정도, 국민생활과 관계된 의식과 요망사항에 대한 광범한 조사에 의하여 행정일반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5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日本,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總理府), 1995). 전국의 20세 이상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의 조사항목은 <表 3-16>과 같이 크게 4가지이다. 즉,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의식,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의식, 생활의 질 과 풍요, 정부에 대한 요망 등이며,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 특징이다.

<表 3-16> 日本의 國民生活關聯 與論調査

구 분	조 사 평 가 항 목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의식	작년과 비교한 생활의 향상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생활의 충실감, 일상생활에 걱정 및 불안, 생활정도
향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견해, 앞으로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 마음의 풍요, 물질적 풍요, 장래준비, 매일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 기쁨이 온다, 생애주기(life cycle)
생활의 질, 풍요	자산정도, 저축의 목적, 풍요함의 여부, 풍요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자유시간 및 수입에 대한 생각, 자유시간을 보내는 방법,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불만스러운 것
정부에 대한 요망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資料: 日本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總理府), 『國民生活に關する世論調査』, 平成7年(1995) 5月調査.

나. 「삶의 질」의 國際比較

1) Slottje 등의 研究

Slottje 外 3인은 삶의 질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획득가능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20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26개국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다. 선정된 지표 및 지표가 나타내는 삶의 질의 높낮이의 기준을 정리하면 <表 3-17>과 같다.

<表 3-17> Slottje 등의 國際比較 「삶의 질」 指標

指 標	삶의 질의 評價基準
1) 정치적 권리	1) 최고부터 최저까지(1~7位)
2) 시민자유	2) 上同
3) 평균가구규모	3) 작을수록 좋음.
4) 시민에 대한 군인비율	4) 上同
5) 1인당 에너지소비율	5) 上同
6) 여성노동력비율	6) 上同
7) 미성년노동력비율	7) 上同
8)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면적 비중	8) 上同
9) 1인당 전화대수	9) 높을수록 좋음.
10) 남성기대여명	10) 上同
11) 여성기대여명	11) 上同
12) 신생아 1천명당 유아사망률	12) 낮을수록 좋음.
13) 병상당 인구수	13) 上同
14) 의사당 인구수	14) 上同
15) 1일 1인당 열량소비	15) 높을수록 좋음.
16) 남성문자해독률	16) 上同
17) 여성문자해독률	17) 上同
18) 1,000명당 라디오 수신기 대수	18) 上同
19) 일간지의 수	19) 上同
20)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20) 上同

資料: Slottje, et al.,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1991, pp.24~30.

이들 지표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순위는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각각 1위, 2위, 13위, 15위에 있고 한국이 70위인데 비하여 필리핀과 인도는 각각 47위와 48위로서 한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Slottje, et al., 1991). 후술하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로 본 우리나라의 순위가 1992년 현재 174개국 중 31위인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지표선정의 문제, 통계자료의 문제, 그리고 속성이 다른 지표의 종합지수 산출상의 문제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다. 즉 여가시간, 환경관련투입, 교역량 등 삶의 질을 물리적으로 규정짓는 생산관련 지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군인수가 많으면 자유를 저해하고,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평가는 선·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개별국가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의성이 있다. 특히 ‘시민자유’의 순위는 OECD회원국인 경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41위이고 핀란드는 22위로 나타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통계자료상의 문제이다. 이들의 연구는 그 결과만이 제시되어 있고 지표의 계량화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사용된 통계자료는 1980년대를 전후한 것이며 자료 자체도 타인이 수집한 자료를 그 타당성과 신빙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아무리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직면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속성이 다른 지표를 합성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이다. 이들의 연구를 비판한 내용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년 전에 비하여 자유는 많으나 고기는 적은 구소련인에게 물어보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좋다. 그러나 음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가지를 합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Mihalyi, 1993)?”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삶의 질을 국제비교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2) UNDP의 人間開發指數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人間開發報告書’로서 매년 공표하는 인

간개발접근은 國富에 대한 재조명과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인간개발접근이 취하는 국부의 의미는 한 나라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이 아니다. 즉, 발전의 목적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장수하며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것(UNDP, 1995)임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이러한 여건속에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진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필수적인 3가지 선택은,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지식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고상한 생활수준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에 근접하는 것 등이다. 추가적인 선택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유로부터 창조적·생산적·자존적·인권적 기회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된다.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 및 금전적 부의 추구속에 가리어 너무나 망각되어 왔다는 관점에서 한 나라의 國富를 재조명하면, 한나라의 진정한 국부는 남녀로 구성된 국민이고 인간개발은 상술한 바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선택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개발은 건강·지식·숙련의 증진과 같은 인간의 능력을 형성하는 측면과 획득된 능력이 생산적으로, 여가를 위하여, 또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사안에 활발하게 활용되는 측면을 중시한다. 인간개발은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론 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즉, 經濟成長論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보다는 GNP의 증대를 다루고, 人間資本理論은 인간을 생산과정의 투입요소로 취급하며, 복지접근방법은 인간을 발전과정의 행위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고, 기본생활요건의 충족전략은 많은 부분을 박탈당한 인구집단의 선택을 확대하기보다는 물질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둔다. 이같이 제한적인 발전이론에 비교하면 인간개발은 상품의 생산·분배와 인간능력의 확장·활용을 그 목표로 한다.

〈表 3-18〉 人間開發指數 指標體系의 分野(1995)

개발도상국(지표수)	산업국(지표수)
• 인간개발의 모습(11) • 인간박탈의 모습(9) • 인간개발의 추이(7) • 남북간 격차(5) •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7) • 어린이의 생존과 개발(9) • 건강(7) • 식량안전(7) • 교육불균형(6) • 고용(6) • 부, 빈곤, 사회적 투자(9) • 자원 흐름의 불균형(9) • 군사비 및 자원사용의 불균형(6) • 도시화(7) • 인구통계(7) • 자연자원의 대차대조표(10) • 에너지 소비(8) • 국민소득계정(12) • 경제적 성취의 추이(7)	• 인간개발의 모습(10) • 인간걱정의 모습(7) • 폭력과 범죄(5) • 건강(10) • 교육(9) • 고용(8) • 실업(8) • 부, 빈곤, 사회적 투자(8) • 자원 흐름의 불균형(8) • 군사비 및 자원사용의 불균형(8) • 도시화(7) • 인구통계(6) • 자연자원의 대차대조표(7) • 에너지 소비(8) • 환경과 공해(12) • 국민소득계정(12) • 경제적 성취의 추이(7)
총지표수 : 149	총지표수 : 140

資料: U. 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 Press, 1995, pp.150~154.

인간개발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4가지 원칙은, 첫째, 노동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둘째, 경제적·정치적 참여기회로서 형평성, 셋째, 물질적·인적·환경적 자원이 당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재충전되어야하는 지속가능성,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획득 등이다(UNDP, 1995).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인간개발의 패러다임이 함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자 고안된 합성지수이다. HDI지표체계는 그 체계를 구성

하는 요소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내용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지표는, 장수와 건강한 삶을 드러내는 기대수명, 지식수준을 표시하는 교육적 성취, 격조있는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購買力 等價值 달러 換算 實質 GDP 등을 포함하고 있다. HDI지수가 0~0.5, 0.5~0.8, 0.8이상이면 각각 하위, 중위, 상위의 수준을 나타낸다(이현송, 1995). 개발도상국과 산업화된 국가로 구분하여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간개발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지표수는 <表 3-18>과 같고, 1992년 인간개발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순위는 세계 174개국 중 31위(UNDP, 1995)이다.

3) IMD의 『삶의 질』의 國際比較

1980년 이후 매년 발간되는 ‘세계경쟁력보고서’(IMD, 1995)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은 1995년의 경우 <表 3-19>와 같이 10여개에 불과한 지표에 의하여 그 수준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는 세계각국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산정하는 방법론상, 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의 영역³⁹⁾을 제시하며, 이중 국가경쟁력을 이루어주는 숙련노동력·전체노동인구의 마음자세·삶의 질에 대한 기대추이 등 ‘사람’에 관한 지표로서 ‘삶의 질’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는 24위이나 삶의 질의 순위는 32위이다(IMD, 1995). 삶의 질을 표시하는 외형적인 지표는 사실상 앞에서 살펴 본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도국 및 선진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조사를 통하여 그 순위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될 경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의 구성이나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39) 기본적으로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재정, 하부구조, 경영, 과학과 기술, 사람 등 8개 영역이며 각 영역별 관련지표를 합성하여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表 3-19〉 IMD의 「삶의 질」 指標(1995)

지 표	정 의
• 소득분배 • 도시인구 • 주요 경쟁국에 대한 '삶의 질' 수준 • 자산 획득 • 여가비 지출 • 인간개발지수¹⁾ • 건강관련 중앙정부지출액 • 의사 1인당 인구 • 간호원 1인당 인구 • 원조	• 下位 20% 가구의 가계소득 점유율 •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 • 주요 경쟁국 중에서 대단히 높거나 낮은 '삶의 질' 수준 • 주택의 구매가 대단히 어렵거나 쉬움. • 1인당 여가비 지출액 - 개인적 수송준비 - 레크레이션, 유흥, 교육 - 식당, 개인적 배려, 기타 •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지표의 합성 • GDP 중 건강관련 중앙정부지출비율 • 의사 1인당 주민수 • 간호원 1인당 주민수 • 원조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원천적인 관심사인지의 여부

註: 1)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임.

資料: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1995. pp.732~742.

第3節 「삶의 질」 指標體系의 構成

1. 「삶의 질」 指標의 體系化 過程

앞에서는 삶의 주요국면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 및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지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절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제시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이러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먼저, 최근에 개선연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의 부문별 관심영역에 따라 분류·정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에 수록된 지표들은 국제기관 및 외국

의 지표체계에서 제안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계열이 거의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를 삶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거시적 접근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개의 지표는 관심영역에 맞게 추가하였다.

다음에, 제2장에서 제시한 삶의 질의 구성요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를 재분류하였다. 삶의 질의 구성요건은, 첫째, 그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 둘째, 삶의 질의 물리적인 수준, 안정, 형평, 쾌적, 셋째, 삶의 질의 정신적·심리적인 수준, 안정·안심, 형평, 자유 등이며,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갖는 구조변화의 측면이다. 재분류 과정에서 사회지표로서 제시된 지표계열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지표들⁴⁰⁾은 삭제하였고, 하나의 지표가 삶의 질의 구성요건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경우⁴¹⁾에는 복합지표로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를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의 부문구성에 맞춰 삶의 질 지표체계(案)를 작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2. 「삶의 질」指標體系의 構成(案)

상술한 과정을 거쳐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성(案)하여 本章의 [附錄]에 수록하였다.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직면한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여건속에서 주관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도한 삶의 질의 지표체계가 이러한 모든 속성을 포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삶의 질의 측정 대상으로서 개인은 물론 개개인이 속한 사회조직단위⁴²⁾에 따라 삶의

40) ‘총인구’와 같은 스톡지표는 제외시켰으나 속성이 같은 스톡지표인 ‘노령화지수’는 인구의 노령화를 보는 구조변화지표로 분류하였다.

41) ‘가구당 주거공간’은 삶의 질의 물리적 ‘수준’과 ‘쾌적’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42) 김경동 교수는 사회조직단위를 예시적으로 가족, 조직체, 지역공동체, 국가사회 등으로 예시적인 구분하였다(김경동, 1979).

질을 구성하는 요건별로 삶의 질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개인과 사회조직단위별로 삶의 질 지표체계가 성안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체계가 연구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사회조직단위에 따라 삶의 질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관련통계를 정비하는 데에 여기서 시도적으로 제시한 삶의 질 지표체계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附 錄

附錄 3-1. 諸表

〈附表 3-1-1〉 生活水準의 分類基準(UNRISD)

구성요소와 지표	충족의 정도	건널 수 없음	부적절	적절	풍족
1. 영양(식품섭취)					
a. 열량섭취량(1일1인당)	정상의 60% 미만	정상의 60~100% 미만	정상의 100~133% 미만	정상의 133% 이상	
b. 단백질섭취량	정상의 60% 미만	정상의 60~100% 미만	정상의 100~200% 미만	정상의 200% 이상	
c. 전분 이외의 열량섭취 비율	10% 미만	10~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2. 의(의류사용)					
a. 의류소비	없음.	15m ² 미만	15~50m ²	50m ² 이상	
b. 신발소비(1인 연간)	없음.	3켤레 미만	3~6 켤레	6켤레 이상	
c. 의복의 質	가장 원시적	충지 못함.	만족함.	사치함.	
3. 주거(주거의 점유)					
a. 주택서비스	영구주택 없음.	단순, 질박한 주택	보편적인 주택	쾌적한 주택	
b. 점유밀도 (거주자당 방수)	1/4 미만	1/4~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c. 주거의 전용 (가구당 주택수)	1/2 미만	1/2~1.0 미만	1.0	가구당 1주택 이상	
4. 보건(의료서비스수혜)					
a. 의료시설 접근성	접근방법 없음.	제한적임.	적절함.	모든 의료요구가 충족됨.	
b. 예방(전염병과 기생충 질환에 의하지 않은 사망률)	66% 미만	66~96% 미만	96~99% 미만	99% 이상	
c. 비례사망률(총사망중 50세 이상 사망비율)	0%	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5. 교육(이수한 교육)					
a. 취학률	무취학	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	
b. 졸업자비율	모두 낙제	90% 미만	90~100% 미만	100%	
c. 교사당 학생비율	수업받지 못함.	정상의 100% 미만	정상의 100~200% 미만	정상의 200% 이상	

〈附表 3-1-1〉 계속

충족의 정도 구성요소와 지표	건달수 없음	부적절	적절	풍족
6. 여가(과노동 보호) a. 여가시간(연간 근로로부터 자유시간)	3,640시간 미만	3,640~6,336시간 미만	6,336~6,816시간 미만	6,816시간 이상
7. 안전(보장된 안전) a. 개인의 안전 b. 생활방도의 안전	법, 질서의 붕괴(전쟁, 시민전쟁, 테러) 경제적 혼란	법, 질서의 나쁜 유지(폭도, 갱, 불량배) 고용, 질병보험 없음, 연금계획 없음. 충분한 저축이 없음.	법, 질서의 적절한 유지 최저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실업, 질병, 연금 보험 또는 충분한 저축 있음.	법, 질서가 좋게 유지됨.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험 및 저축이 있음.
8. 사회적 환경(사회적 접촉과 레크레이션) a. 노사관계 b.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c. 정보와 통신 d. 여가: 문화활동(음악, 영화, 연극, 시각예술, 독서) e. 여가: 여행 f. 여가: 스포츠와 운동	폭도, 계속적인 파업과 직장폐쇄 정치적 압제, 사회적 편견 고립상태 결여 이동하지 않음. 참여 없음.	긴장된 노사관계 어려움. 제한됨. 참여의 제약하에 초보적임. 한정된 주변 지역을 가끔 여행 가끔 참여	원만한 노사관계 어렵지 않은 여건 어렵지 않음. 대중참여가 적절히 발달됨.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빈번한 국내여행 한가지를 체계적으로 함.	좋은 노사관계 좋은 여건 충분함. 잘 발달된 활동 열광적 참여 교육문화적 가치있는 국내외의 빈번한 여행 다양한 운동을 함.
9. 물리적 환경 a. 깨끗함과 조용함 b. 주변 이웃의 쾌적도 c. 환경의 아름다움	참기 어려움. 불쾌 추악함.	불만족함. 부적절 약간 미달임.	만족함. 적절 용인 가능함.	좋음. 좋음. 고무적임.

資料: Drewnowski, J.,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附表 3-1-2〉 福祉水準의 分類基準(UNRISD)

(단위: %)

구성요소와 지표 \ 충족의 정도	결핍	불충분	충분	풍요
1. 건강상태(육체적 발달 수준)				
a. 영양상태(생물학적 검사)	?	?	?	?
b. 건강상태(질병으로부터 해방)	0	?	?	100
c. 여명(출생시)	30세	30~60세	60~75세	75세 이상
d. 신체적 적응(신체적 적응검사)	?	?	?	?
2. 교육상태(정신적 발달 수준)				
a. 14세 이상 인구의 비문맹률	0	0~100	100	100
b. 교육적 성취	0	0~100	100~200	200
c. 인력수요에 대한 교육의 적합도	0	?	?~100	100
d. 고용(경제활동인구비율)	67	67~97	97~100	100
3. 사회상태(사회통합과 참여)				
a. 통합	전혀 안됨.	느슨함.	면밀함.	대단히 면밀함.
b. 참여	전혀 없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대단히 중요함.

資料: Drewnowski, J.,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pp.90~91.

〈附表 3-1-3〉 幸福한 「삶의 질」에 대한 評價(美國)

삶의 관심사	대단히 중요함(%)	대단히 만족함(%)	순위
건강	97	54	5
가족 생활	92	62	1
마음의 평안	91	52	6
인간 존중	76	60	3
친우	71	64	2
교육	69	25	8
근로	60	42	7
종교	58	57	4
소득	47	25	8
성 생활	38	52	6

資料: U. 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December 1980.

〈附表 3-1-4〉 日本의 社會生活統計指標(1995)

부 문	수록된 지표의 예
A. 자연환경	면적, 기상
B. 인구, 세대	인구분포, 남여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등
C. 경제기반	현민경제계산, 사업체수, 기업도산, 종사자수 등
D. 재정	재정력,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 조세 등
E. 학교교육	교육시설, 공립학교의 시설, 교원, 학생, 대학 등
F.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 (문화, 스포츠 통계)	사회교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등
G. 노동	노동력 상태, 취업상태, 취업기회 등
H. 가계	비농가세대의 가계수입 및 지출, 세대의 자산, 물가 등
I. 거주환경	주택수, 주택의 질, 주택관계비용, 통신 등
J. 사회보장	사회보장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K. 건강·의료	유병률, 사망률, 평균여명, 사인별 사망자 등
L. 안전	소방시설,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 등
M. 생활시간의 배분	행동별 평균시간, 2차 활동의 종류별 평균시간 등

資料: 日本 總務廳統計局, 『社會生活統計指標』, 1995.

〈附表 3-1-5〉 日本의 社會生活統計 指標와 新國民生活指標의 比較

① 제 목	사회생활통계지표	신국민생활지표(PLI)
② 작성기관	총무청 통계국 통계정보과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국민생활과
③ 연 혁	- 1976년 도도부현자료를 중심으로 시작 - 1981년 대상지역을 시구정촌으로 확대하고 수집항목도 대폭 늘리는 등 체계확충을 시도하여 오늘에 이름.	- 1970년 사회지표 개발에 착수 - 1974년 지표체계 수립 및 공표 - 1979년 1차 개편 - 1986년 2차 개편(NSI) - 1992년 3차 개편(PLI)
④ 작성분야	- 13개 분야로 구성 ① 자연환경 ② 인구·세대 ③ 경제 기반 ④ 재정 ⑤ 학교교육 ⑥ 사회 교육·문화·스포츠 ⑦ 노동 ⑧ 가계 ⑨ 거주환경 ⑩ 사회보장 ⑪ 건강·의료 ⑫ 안전 ⑬ 생활시간의 배분	- 8개의 활동영역 ① 살다 ② 소비하다 ③ 일하다 ④ 양육하다 ⑤ 치료하다 ⑥ 놀다 ⑦ 배우다 ⑧ 교제하다 - 4개의 생활 평가측 ① 안전·안심 ② 공정 ③ 자료 ④ 쾌적 - 5개의 구조변화지표 • 고령화·국제화 • 집중화 • 정보·서비스화 • 그린화
⑤ 특 징	- 통계의 망라성 - 기본적 관심은 인간 - 스톡과 플로우 - 개념, 정의, 분류의 공통성 - 지역통계의 정비	- 개인생활의 활동에 착안하여 활동영역을 선정 - 개별지표 선정 - 중복지표의 선정 -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 의한 주관적 weight 채용 - 가공통계
⑥ 사회통계 조사 및 자료원	- 사회생활 기본조사(노동력통계과) - 도도부현의 데이터 - 기타	- 국민생활 선호도 조사 - 총무청 통계국 등 - 도도부현에 대한 앙케이트 및 보고자료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改編研究』, 1995, p.63에서 재인용

附錄 3-2. 「삶의 질」指標體系(案)

附錄 3-2-1. 「삶의 질」의 基本的 要件

〈附表 3-2-1-1〉 健康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삶의 질 (건강)	건강평가	5년전 대비 삶의 질(건강)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건강) 향상에 대한 기대*
건강상태	생존년수	기대여명 무병 기대여명 국민평균연령
	체격	신장 체중 흉위 체질량지수(B.M.I)
	구강보건	1인 보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개인건강평가	혈압정상 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보건의식행태	음주율 및 과음횟수 흡연율 및 흡연량
사망, 상병	사망수준	연령별 사망률 영아 사망률 1~4세 사망률 50, 65세 이상 사망비율 모성사망률
	사망원인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질병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주요질병 발생건수 치매 유병률 정신질환 유병률
	상병평가	유병률(기간) 활동제한일수 와병일수
영양	영양섭취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식품소비	1인 1일당 식품소비구성비

〈附表 3-2-1-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보건의료이용	예방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이용	입원율
공적부조	생활보호	의료보호수혜율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비율
	장애인복지	장애인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註: * 는 주관적 지표

〈附表 3-2-1-2〉 安全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삶의 질 (안전)	안전평가	5년전 대비 삶의 질(안전)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안전) 향상에 대한 기대*
	개인과 생활의 안전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전쟁의 위협) (식량자급도: 주곡, 기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경험률 야간보행시 안전도*
일터의 안전	산재예방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직업병 유병근로자율
	재해발생	재해발생률(산업재해발생건수)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산재사망률 (재해 천인율,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인구 10만명당)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주요범죄의 질적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附表 3-2-1-2〉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자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주요범죄 초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컴퓨터 범죄자수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교내폭력·협박 피해학생수 (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범죄피해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률과 피해자수 (인구 10만명당)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피해건수와 평균피해액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주요범죄(피해)신고율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이유*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범죄방지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교도능력	주요범죄 재범률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평균사망연령)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액) (교통사고의 사회기관비용:경찰,보험사 등) 교통사고야기 도주 검거율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입체도로 시설수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및 피해액)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부상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법집행의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피의자 보호 및 변호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註: *는 주관적 지표

附錄 3-2-2. 物理的 「삶의 질」

〈附表 3-2-2-1〉 水準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소비	소득, 취업, 임금	GDP 및 GNP 1인당 GDP 및 1인당 GNP (1인당 구매력 등가치 달러: PPP\$) 국민가처분소득 개인가처분소득 가구당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기혼여성취업자 및 연령별 피용자 평균임금)
	소비의 규모와 지출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내수용 소비재 판매액) 1인당 소비지출액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내구소비재 보유율) (국부 중 가계실물자산의 비율) (내구소비재 평균사용년수)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앵겔 계수) (개인지출 사회적 비용: 의례비, 사례비, 관혼상제비, 대서료, 텃, 변호사비 등)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흑자율
교육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원 1인당 학생수 사무직원당 교원수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당 교지·건물·체육장 면적 시설·비품 확보율 특별교실 확보율 도서관 장서·좌석수

〈附表 3-2-2-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비율
보건	영양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1인 1일당 식품소비구성비
	보건의료 이용, 서비스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입원율 1인당 평균의사방문횟수 병상이용률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의료비)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의료기관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1인당 정부지출 보건, 위생비) 가구당 의료비지출률
	보건의료 장비 장비 보유현황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고가장비대수(인구 1,000명당)
주거	주택공급과 수요	주택보급률 주택투자율 연간주택건설호수(인구 1,000명당) 자가보유율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노후정도 도시주택 가격지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전세가격)
	주거비용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주택부대시설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附表 3-2-2-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통	교통수단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가구당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교통비용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 비율 (교통수단별 차량운행비용) (업무 및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피용자의 통근비)
	교통운행의 질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정보와 통신	연구개발활동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 기술수출액
	정 보 화 정 도	통신서비스 이용	PC 보유가구율 가구당 전화보급률 가구당 Fax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수(인구 1,000인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인구 1,000인당) 공공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이용자수 (인구 100인당) PC통신 가입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전산망 확충	의료업무 전산화율 판매관리 전산화율 행정전산망의 정보입력률
		정 보 관 련 지출	GDP 대비 정보·통신투자액 가계정보관련비용 지출률
환경	녹색GDP		녹색GDP(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¹⁾ 1인당 녹색GDP 녹색GDP/GDP
	자연자원의 이용		1인 1일 급수량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환경의 질		수질기준 달성률 음용식수 종류
	환경관리		GDP 대비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1인당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어적 지출액 하수처리율 환경오염 방지노력 재생산업사업체수 및 인력

〈附表 3-2-2-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	복지자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사회보험	의료보장	의료보험 1인당 평균부담액 의료보험 1인당 평균급여비
		공적연금	공적연금 적용률 연금급여 건당 평균급여비
	공적부조	자원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급여액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노인복지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여성복지	요보호여성수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인복지	시설수용장애인 비율 장애인 취업률
문화, 여가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부예산 1인당 정부지출 문화비 문화예술시설공간수
	문화생활용품 보급		도서발행 종류 및 부수 보유장서수, 구입인구, 독서인구 비율 잡지발행부수 및 구독률 음반, 테이프 등 구입 비율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CATV 가입률
	문화활동기회 향유		비디오 시청률 및 시청편수
	관광여행		평균 여행횟수 해외여행 비율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및 체육활동비 지출률 여가및 체육시설 이용현황

〈附表 3-2-2-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공공 안전	범 죄 방 지 및 교도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분포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범죄방지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경찰관 1인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교도능력	주요범죄 재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자동차 교통사고의 인적,물적 피해) (자동차 교통사고의 사회기관비용) 교통사고야기 도주 검거율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입체도로 시설수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피해액)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피의자 보호 및 변호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정부와 사회참여	사회참여	후원금·기부금 제공자 비율
		행정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재정	GDP 대비 기능별예산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예산 국민 1인당 기능별예산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註: *는 주관적 지표

- 1) 생활하수, 산업폐수, 대기오염물질, 분진처리, 생활폐기물, 자동차배출대기
오염물질 등

〈附表 3-2-2-2〉 安定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 족 생 활 의 안정	소득의 안정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작년에 비한 소득의 향상감)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 노후준비방법
	소비의 안정	소비자 물가지수 및 물가 상승률 구매력 지수 수입물가지수 공공요금지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노동	취업, 실업	장기근속 비율 상시취업률 졸업생의 취업률 실업률
	직업안정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전직자 비율 구인배율 취업알선 비율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사업체 비율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고용안정기금수혜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실업급여수혜자 비율
	인력개발	직업훈련자수 재훈련수료자 지수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임금과 직장의 안정	기본급 비율 평균정년퇴직연령
	노사관계의 안정	노사분규건수, 손실일수 및 비율
주거의 안정	주택공급과 수요	도시주택 가격지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전세가격)
	주거이동	최초 주택마련시기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 횟수 현 주택거주년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 및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피해액)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사고당)

註: *는 주관적 지표

〈附表 3-2-2-3〉 衡平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구성비)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도시인구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수도권 인구(구성비)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
소득분배	지역간 소득격차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지역내 총생산(GRP) 1인당 GRP(도시별 1인당 소득)
	분배상태	소득10분위별 분포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 분배율) (중위 가처분소득 미만 가구비율) 가구소득분포
	분배구조	노동소득 분배율
	지역간 조세부담	조세부담률(도시별 1인당 재산세)
노동	고용	여성관리직 종사자 비율 고령자 재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 비율
	임금차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임금계층별 임금수준 산업별 평균임금격차 교육수준별 평균임금격차 직종별 평균임금격차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격차 성별 평균임금격차
	성차별대우	성별 근속연수 격차 성별 근로시간 격차 성별 이직률비
교육	교육기회의 제약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교육자원의 활용	여교원 비율 사무직원당 교원수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주거	주거격차	자가보유율 주택의 점유형태 과밀거주가구수

〈附表 3-2-2-3〉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	복지자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민간모금액 및 사용처
	사회보험	공적연금 적용률
	공적부조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최저생계비 의료보호수혜율 임대주택공급호수
	사회복지 자원배분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장애인 복지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등록률(활동장애를 가진 인구비율)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
공직자분포	행정공무원 분포	공무원의 부처별 분포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附表 3-2-2-4〉 快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비	소비지출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엔겔 계수
	유감스러운 지출	개인지출 사회적 비용(의례비, 사례비, 관혼상제비, 대서료, 팁, 변호사비 등)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일수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근로조건 만족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	물적자원의 적절성	학생당 교지·건물·체육장 면적 시설·비품 확보율 특별교실 확보율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비율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교육의 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의료시설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주거	주택	주택의 노후정도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원하는 주택의 형태, 방수, 규모*
	주거공간	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 가구당 사용건평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당 대지면적 방당 가구원수 과밀거주가구수

〈附表 3-2-2-4〉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	주택부대시설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입식부엌 시설률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취사용 연료 목욕탕 시설률 수세식변소 시설률 에어콘소유 가구율 주차장 확보율
	주위환경	편의시설 근접도 현거주지 선택 이유* (주변이웃의 쾌적도) (주위환경의 쾌적도) (만족 할만한 이웃을 두고 사는 인구비율) 현거주지역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분담률
	교통편의	도로연장(차량 1대당 도로면적) 도로포장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2시간 이상을 통근으로 소비하는 피용자 비율 주된 통근·통학수단 버스·지하철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수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시내버스 혼잡률 지하철 혼잡률
	교통운행의 질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정보,통신	통신서비스 이용	가구당 전화보급률 가구당 Fax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수(인구 1,000인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인구 1,000인당)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전산망 확충	행정전산망의 정보입력률

〈附表 3-2-2-4〉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환경	녹색GDP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¹⁾ 1인당 녹색GDP
	환경오염물질 배출	1인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쓰레기 처리의 사회적 비용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인당 폐수배출량 농업생산량 대비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대비 농약투입량
	자연자원의 이용	1인 1일 급수량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환경의 질	대기의 질 (대도시 연간 오존주의, 경보 발표일수) 수질 주요연안의 수질오염도 토양오염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주요도시의 스모그 발생률 수질기준 달성률 음용식수 종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성가신 공해에 노출된 인구 비율)
	자연자원 보존량 (생물다양성)	1인당 녹지면적(공원녹지비율) 1인당 공원면적
	환경관리노력	하수처리율
	환경관리노력	하수처리율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문화예술시설공간수 공공도서관현황 및 이용률
	문화활동기회 향유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관광여행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활용방법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1인당 체육시설면적

〈附表 3-2-2-4〉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와 여가	시간배분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취업자의 여가시간) (15세 이상 학생의 여가시간) (퇴직자의 여가시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복지	사회복지 자원	사회복지 수용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보호시설수(미혼모, 가출여성) 시설수용장애인 비율
안전	화재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정부서비스	행정서비스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註: * 는 주관적 지표임.

- 1) 생활하수, 산업폐수, 대기오염물질, 분진처리, 생활폐기물, 자동차배출대기
오염물질 등

附錄 3-2-3 精神的 「삶의 질」

〈附表 3-2-3-1〉 水準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국민의 학력구성비
	교육기회의 확대	취학률 진학률 대학생수(인구 1만명당)
	교육의 효과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성형성의 효과(덕)*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선택 만족도*
교통	교통운행의 질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정보화	연구개발활동	특허수(대내, 대외)
	정보화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환경	환경관리노력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문화, 여가	문화자원 이용	도서관 이용률 보유장서수 도서구입인구 독서인구 비율 구독신문 종류 및 빈도
	가족여가	가족 여가활동
공공안전의식	준법수준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註: *는 주관적 지표

〈附表 3-2-3-2〉 安定·安心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	가족의 해체	조이혼율 이혼사유
노동	근로의 계속	희망정년시기*
	성차별대우	성별 이직률비
환경	환경의 질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교육	교육의 효과	비행발생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안전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경험률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주요범죄(피해)신고율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교통사고야기 도주 검거율
정치	정치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요망사항

註: * 는 주관적 지표

〈附表 3-2-3-3〉 衡平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분배	분배상태 조세부담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의식*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교육기회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법집행의 공정	법집행의 공정성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註: *는 주관적 지표

〈附表 3-2-3-4〉 自由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노동	직업선택	전직자 비율 직업선택요인*
	노동권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체결 기업체 비율
	경영참가	종업원 지주제도 참여업체율
정보화	통신서비스 이용	PC통신 가입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환경	환경관리노력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문화예술시설공간수 전시장 입장률 공연시설 입장률
	문화생활용품 보급	잡지발행부수 및 구독률 음반, 테이프 등 구입 비율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구독신문 종류 및 빈도 신문의 관심분야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TV 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TV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이유*
	문화활동기회 향유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비디오 시청률 및 시청편수
여가활용	관광여행	평균 여행횟수 해외여행 비율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활용방법 취미 및 교양학원별 수강자수
	시간배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附表 3-2-3-4〉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의식	문화의식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정치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요망사항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교육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후원금·기부금 제공자 비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집회 참여도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註: * 는 주관적 지표

附錄 3-2-4. 「삶의 질」 關聯 構造變化指標

『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선연구』에 제시된 부문별 지표중, 세계화, 정보화, 노령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의식구조변화 등 구조변화 또는 경향 및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계열을 선정하였다.

〈附表 3-2-4〉 「삶의 질」 關聯 構造變化指標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인구	인구의 구성과 분포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국민평균연령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구성비)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도시인구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수도권 인구(구성비)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 도시인구성장의 요인
	출생과 사망	자녀수와 성선회	이상자녀수* 자녀수에 대한 의식*
		기대여명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제이동	지역별 출입국 현황 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가족	가족의 구성과 형성	가구구성	총가구수 평균가구원수 가구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크기와 형태	평균동거가족원수 평균출생아수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핵수별 분포

〈附表 3-2-4〉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	가족의 구성과 형성	혼인과 자녀출산	평균 초혼연령 조혼인율 조계혼율 첫자녀 출산연령 기대 자녀수*
	가족생활	생활안정	중요한 생활관심사*
	가족문제	노인의 가족생활	노인가구 비율 노인의 가족내 역할
		청소년 및 취약가구	미성년가구 비율 편부모 및 부모가 없는 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가계의 중요성	남아선호도* 대잇기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선호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여성의 역할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지역소득	지역내 총생산	지역별 생산구조
소득과 투자	대외투자	투자수준	대외투자율
노동	고용·인력 개발	취업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중 피용자율 취업자 구성비 대기업 근로자 비율 고령취업자 구성비 기혼여성취업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수 및 비율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자 비율 재택근로자비율 파견근로자비율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실업	실업자 구성비
	근로조건	근로조건	직업선택요인*

〈附表 3-2-4〉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의 학력구성비 자녀교육의 목적*
정보, 통신	정보화 기반	연구개발활동	기술수출액
	정보관련 인력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방송서비스 인력 비중
	정보화 정도	PC 보유 및 이용	PC 보유가구율 PC 이용시간의 구성비 PC공중전산망 가입자수(1,000명당) 컴맹비율
		통신서비스 이용	가구당 Fax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수(1,000명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1,000명당) 공공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이용자수 (100명당) PC통신 가입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전산망 확충	의료업무 전산화율 판매관리 전산화율 금융전산망 크기 행정전산망의 정보입력률 과학·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액
	정보관련 지출	정보관련 지출	가계정보관련비용 지출률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화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환경	녹색GDP	녹색GDP	1인당 녹색GDP 녹색GDP/GDP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1인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인당 폐수배출량 농업생산량 대비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대비 농약투입량
		자연자원의 이용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附表 3-2-4〉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환경	환경영향	환경의 질	대기의 질 수질 주요연안의 수질오염도 토양오염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주요도시의 스모그 발생률 수질기준 달성률 음용식수 종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성가신 공해에 노출된 인구비율
		자연자원 보존량 (생물다양성)	1인당 녹지면적 1인당 공원면적
복지	복지증진	복지자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보험	공적연금	공적연금 적용률
문화, 여가	여가활용	관광여행	평균여행횟수 해외여행비율
		시간배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문화의식	문화의식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보고된 범죄자	여성범죄자의 비율 컴퓨터 범죄자수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교내폭력·협박 피해학생수 (학생 1만명당)
정치 참여	정치참여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註: *는 주관적 지표

第 4 章 「삶의 질」의 國際比較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5년에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돌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 G7에 진입하기 위한 國家發展戰略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量的 成長뿐 아니라 質的인 側面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소득수준 외에도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여러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삶의 질은 윤택해질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전체적인 삶의 질 수준 뿐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수준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에 중점을 두는 選擇的 政策方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수준과 어느정도 괴리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간 비교연구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 나라의 삶의 질을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하는 연구가 근 30여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로는 삶의 질이 갖는 定性的 特性을 定量化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關心變數에 관한 자료를 모든 나라에서 얻을 수 없다는, 즉 資料求得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限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에 관한 明示的 分析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지 選言的 主張만이 사회에 囂行하여 정책수립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

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향유하는 삶의 질을 保健·醫療部門, 經濟部門, 教育部門, 文化·情報部門 4개부문으로 나눠 部門別 綜合指標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政策的 優先順位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全部門을 망라한 綜合指標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삶의 질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1인당 GNP수준 및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삶의 질 수준을 단순히 순위로만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삶의 질 수준을 相對概念인 순위와 類似絕對概念인 點數(score)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비록 삶의 질 국제순위에 있어서는 외견상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점수에 있어서는 낮을 수가 있다는, 즉 분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본 연구는 第1節에서 삶의 질에 관한 既存研究의 問題點을 간략히 살펴보고, 第2節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을 세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變數 및 加重值 選定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第3節과 第4節에서는 삶의 질의 部門別 및 綜合分析을 통해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第5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研究의 限界性을 논의할 것이다.

第 1 節 「삶의 질」에 관한 既存研究의 問題點

국가 단위의 삶의 질 연구는, 삶의 주체인 개개인이 경험하는 다채로운 삶의 국면을 總合하여 主觀的인, 規範的인 그리고 客觀的인 측면을 限定的이면서도 明示的인 指標體系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1인당 GNP(또는 GDP)와 같은

단일변수를 지표로 채택하여 국제간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예로 Kravis et al., 1978, Morawetz, 1977; Ram, 1980). 그러나, 1인당 GNP를 이용하여 한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소득수준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추측하는 것과 같은愚을 초래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1인당 GNP는 각국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고유한 요소를 포착하지 못하며, 동일한 국가에서조차 측정방법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여러가지 지표(index number)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화폐로 표시된 1인당 GNP를 비교통화인 U.S. 달러로 변환시킬 때는 환율로 인한 便倚(bias)現象이 발생하며, 이는 購買力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소득분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사회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같이 단일 변수로 구성된 지표가 갖는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한한 갯수의 변수로 한정하여 이에 加重値를 주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계측하려는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物理的 삶의 質 指標’로서 嬰兒死亡率, 平均壽命, 15세이상 인구의 文字解讀率 등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즉 算術平均을 구하여 하나의 지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Morris, 1979; SS Ram, 1980). 이러한 방법은 對外開發會議와 유엔開發計劃(제3장 pp.104~106 참조)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물리적 삶의 질’ 지표가 개인이 누리는 幸福, 效用 및 選擇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Sen, 1985, 1987; Slottje, 1989). 이는 첫째로 동 지표는 서너개의, 다시 말해서 너무 소수의 변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비록 자료구득의 제약성은 있지만 개인의 효용을 구성하는 객관적 변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여 多變數分析方法을 통해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Dalton, 1920; Slottje, 1989).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되는 삶의 질의 결정변수를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주관적 속

성을 포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소위 攪亂項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 순위를 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의 절대 수준을 비교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물리적 삶의 질’ 지표의 두번째 단점은, 삶의 기반인 社會環境의 變數의 不均等度を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Theil, 1979; Ram, 1980, 1982). 개인이 어떠한 社會環境에서 살고 있는가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삶의 질과 不可分の 관계가 있다. 예로 經濟的 富의 偏重度나 勞動市場에서 性別間 差別이 심한 국가에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열악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셋째로, ‘물리적 삶의 질’ 지표는 관심변수에 동일한 加重値를 주는 단점이 있다. 각 가중치는 研究者 恣意에 의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변수가 모든 국민 또는 개인에게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가정하여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결국은 국민 또는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⁴³⁾.

끝으로 이제까지의 삶의 질 연구는 단지 綜合指標를 구성하여 이를 기초로 國際順位를 매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수준에 관련한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국제순위비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인당 GNP의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대만을 제외한 174개국에서 31위이지만 이것이 곧 최상위 국가에 비해 31%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분포에 따라 90%, 50%, 10% 수준일수도 있다. 실제로 1위인 룩셈부르크를 100점으로 했을 때 약 21점의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순위 중심의 삶의 질 연구는, 삶의 질이 모든 부문에 걸쳐 順位와 點數面에서 고른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고르지 않다면, 부문별 수준간의 격차는

43) 관심변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과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가간 異質性이 크면 클수록 심각해 진다.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⁴⁴⁾. 다시 말해서, 부문별 수준을 비교하고 미흡한 부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人的·物的資源을 투입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의 분포분석은 世界開發(world development)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어떤 국가 또는 어느 지역이 보건·의료부문의 삶의 질이 다른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하다면, 또는 동 부문의 국가간 편중도가 지나치게 극심하다면, 國際機構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해당국가 또는 해당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삶의 질 연구가 갖는 상기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삶의 질의 국제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第2節 本 研究에서의 實證分析方法

본절에서는 먼저 삶의 질 구성부문을 결정하고, 각 부문에서 사용할 變數 및 加重值 選定方法을 논의하기로 한다.

1. 「삶의 질」構成部門의 決定

삶의 질을 單一變數的 方法으로 분석할 것인가 또는 여러개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측정할 것인가하는 것은 연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單一變數的 方法이나 綜合的 分析이 일반수준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반하여, 삶의 질과 관련있는 부문을 몇개로 나누고 이에 기초하여 부문별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정책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44) 기존의 삶의 질 연구가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단지 國際順位 次元에서만 파악하고 點數의 程度와 分布에 대해서 그다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느 부문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保健·醫療部門, 經濟部門, 教育部門, 文化·情報部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결정된다고 하고, 部門別 分析을 행하고자 한다⁴⁵⁾. 한편, 全部門에 걸친 분석은 부문별 분석 이후에 이어질 것이다.

2. 部門別 變數選定

부문별 삶의 질 수준을 각국간에 비교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綜合指標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부문별 代表性이 뛰어나고 또한 가능한한 여러나라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문별 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각 변수의 크기는 삶의 질과 正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⁴⁶⁾.

가. 保健·醫療部門

먼저 保健·醫療部門에서는 출생시 남성의 期待壽命年數(LEXPM), 출생시 여성의 期待壽命年數(LEXPf), 嬰兒生存率(INFANT), 총인구에 대한 65세이상 人口比率(PCT65) 4개의 변수를 채택하였다. INFANT 변수는 嬰兒死亡率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1000명의 出生兒중 사망하지 않은 嬰兒의 수로 정의한다.

45)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所得分配, 福祉, 環境, 住宅, 交通, 社會間接資本, 治安, 政治的 自由 등 여러 부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로서, 우리나라같이 環境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특히 環境 또는 大氣汚染 部門을 삶의 질 분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합 174개국에 대해 大氣 및 水質汚染 등의 통계치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46) 變數가 流失(missing)된 경우는 推定 및 準尺法(levelage method)을 사용하여 流失值를 대치하였다.

〈表 4-1〉 保健·醫療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値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EXPМ	40.80	75.90	62.32	9.65
LEXPФ	42.90	81.60	66.91	10.99
INFANT	838.00	995.00	949.45	41.56
PCT65	1.60	17.40	6.21	4.20

나. 經濟部門

經濟部門에는 1人當 國民總生産(RGNP)⁴⁷⁾, 國民總生産(GNP), 男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M),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 男性 對比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M)을 고려하였다. 이 가운데 RGNP 변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代變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변수로 단위는 달러(US)이다. GNP변수는 개인이 속해있는 나라의 경제규모도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하였다⁴⁸⁾. 단위는 백만 달러(US)이다. 한편 男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M) 및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변수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所得創出과 自我實現의 主要源泉이라는 면에서 다루어 졌다. 또한 경제활동의 性別間 不均等度를 나타내는 男性 對比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M)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변수는 女性 經濟活動의 寄與와 女性地位의 上昇과 正의 關係를 갖는다고 가정되었다⁴⁹⁾.

47) 1994년 자료로부터 購買力 平價(purchasing power parity)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이후 자료를 얻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48) 1인당 GNP는 국가의 GNP규모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1인당 GNP가 평균적 소득수준의 개념이라면, GNP와 같은 경제규모변수는 國防의 또는 經濟的 安全性(security)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相關分析에 의하면, 1인당 GNP와 GNP의 상관계수는 0.46에 불과하였다.

49) 性別間 職業分化(job segregation)가 극심한 사회를 다룰 때, 女性 經濟活動參加率의 高低를 단순히 女性地位의 尺度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일 職業·從事上의 地位別 女性就業者 百分率 등에 관한 국제 통계치를 추가할 수 있다면 연구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表 4-2〉 經濟部 變數의 記述統計値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RGNP	80	39,850	5,191.76	8,217.54
GNP	30	6,737,367	147,861.51	646,978.59
ACTM	31.60	93.30	67.88	14.86
ACTF	4.60	91.90	34.84	18.39
ACTFM	0.07	1.01	0.56	0.22

다. 教育部門

教育部門에는 다음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먼저 국민교육의 貯量變數라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文字解讀率(LITER)을 포함하였다. 둘째로, 專門大學 教育水準 이상의 就學率을 性別로 구분하여, 이를 해당 국가의 高等教育 活性化 水準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ENROLM, ENROLF). 셋째로 高等教育 就學率을 남성수준에 대한 여성수준으로 변환하여(ENROLFM), 教育部門에서의 性別間 不均等度를 고려하였다. 끝으로 教育機關의 質的 水準을 시사하는 변수로 初等學校 學生 100명당 教師數(TRPPL)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表 4-3〉 教育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値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ITER	12.40	99.70	75.66	24.22
ENROLM	0.40	88.80	15.09	13.73
ENROLF	0.10	109.10	13.70	16.09
ENROLFM	0.11	3.62	0.75	0.46
TRPPL	1.11	10.00	4.14	1.86

라. 文化·情報部門

여러 부문 가운데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可用變數가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主觀이 게재될 여지가 많은 부문이 바로 文化·情報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부문에서는 인구 1,000명당 新聞購讀數(Circulation

of daily newspaper; NEWSP), 인구 1,000명당 텔레비전 보유대수 (TVRCVR), 인구 100명당 전화 보유대수(PHONE), 인구 100,000명당 出版된 圖書數(BOOK)를 대표변수로 채택하였다⁵⁰⁾.

〈表 4-4〉 文化·情報部門 變數의 記述統計值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EWSP	0.10	819.00	110.34	145.37
TVRCVR	0.40	815.00	157.79	174.76
PHONE	0.10	68.20	14.55	17.99
BOOK	0.10	606.20	31.91	61.28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서 고려한 변수체계와 비교하면 다음의 <表 4-5>와 같다.

〈表 4-5〉 「삶의 질」 研究와 UNDP의 人間開發指數에서 使用한 變數比較

부 문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보건·의료		남성의 기대수명 여성의 기대수명 영아생존율 65세이상 인구비율	전체기대수명
경제	1인당 소득	1인당 GNP	1인당 국민소득
	경제규모	GNP규모	
	경제활동참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교육		문자해독률 남성의 고등교육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	문자해독률 초중고등 평균취학률
문화·정보		신문구독률, TV보급률, 전화보급률, 출판도서 보급률	

50) 文化部門의 抽象性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그 자체를 비교한다기 보다는 문화·정보의 전달매체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셈이다. 이는 부분적·간접적 개념을 채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統計分析方法: 加重値 選定の 問題

부문별 변수를 선정한 이후 이를 지표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각 변수에 어떠한加重値를 주느냐하는 문제임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각 변수에 동일한加重치를 주거나 연구자의恣意대로加重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통계분석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것은 ‘물리적 삶의 질’ 지표체계의 중요한 한계이기도 하였다.

加重치선정의恣意性を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자료의 특성으로부터加重치를 구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가지로 행해져 왔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두 방법이代變數方法과主成分分析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代變數方法은 어떤 변수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이를依存變數로 나머지 변수에 대해回歸하여 얻은推定値를加重値로 사용하는 방법이다(Griliches, 1971; Slottje, et al., 1991).

만일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가 한개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경우를回歸하여國際順位를 구하고 이를算術平均하여綜合順位로 구분한다(Slottje, et al., 1991). 이 방법은 비교적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代變數로 한 변수만을 선택하여(예, 1인당 GNP) 삶의 질 수준을 도출할 경우 그 국가간順位는 초기 변수의 순위와說明力(또는 R-square)만큼의相關關係를 가질 것이므로 이 방법을 굳이 사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여러 변수를代變數로 사용하여 각각의 순위를 구하여 이를 평균하면 결국 또다시 ‘同一加重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加重치를 보다 자료에 의존하여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主成分分析方法이라 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정보의 손실없이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 또는 소수개의 총합적 지표로 대표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

회지표를 총합한 지역간 또는 국가간의 삶의 질 비교 (Slottje, et al., 1991; Massoumi and Nickelsburg, 1988), 몇개의 시험성적을 요약한 총합적 성적, 여러가지의 증상으로부터의 총합적인 질병 중증도, 각종의 재무지표에 의거한 기업 평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처리 방법이다(Dillon and Goldstein, 1984).

주성분 분석방법을 삶의 질 모형에 적용할 때에는 제1주성분을 삶의 질의 지표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여러개 주성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제1주성분만을 채택할 경우 그 주성분의 기여율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귀중한 정보를 잃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여러개의 주성분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지표를 구성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예, 서로 독립관계에 있는 주성분의 통합)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다⁵¹⁾.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도입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제1주성분점수를 구함으로써 삶의 질의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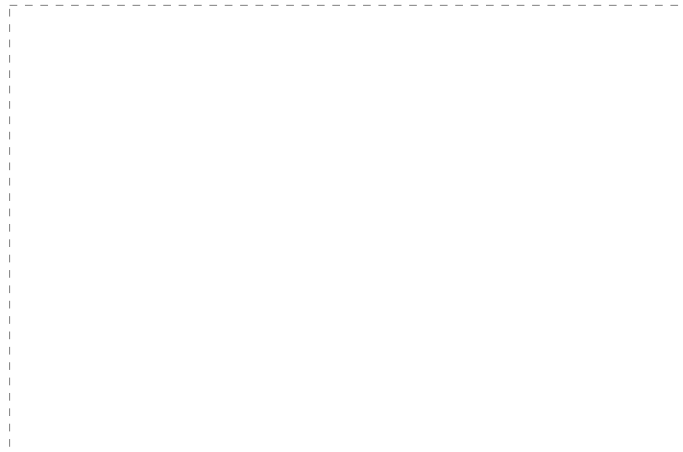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미 도합 18개의 관심변수를 삶의 질 향상과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변수들은 서로 單位, 分布 및 相關이 다르므로, 단순히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표를 만든다면 변수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綜合指標가 관심변수들을 “잘 대표한다”는 의미를, 綜合指標가 관심변수들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표준화된 관심변수와 상관관계를 최대로 하는 새로운 변수 즉, 제1주성분을 구하기 위해 최대화문제를 풀어 표준화된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제1주성분 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삶의 질을 대표하는 綜合指標로 정의하였다.

51) Slottje 등(1991)은 각 주성분의 변이설명도를 가중치로 두고 다섯개의 주성분의 합계를 구하여 단일 지표를 구하였다. 그러나, 正방향의 변수변이를 설명하는 제1주성분에 이 주성분과 垂直(orthogonal)방향인 주성분의 가중치를 합하는 것의 실증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部門別 「삶의 질」의 國家間 分布分析

부문별 삶의 질이 국가간 어떠한 분포를 이루며, 우리나라는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의 삶의 질이 최상위인 국가의 수준과 최하위 국가의 수준을 백분위하여 점수화하고 국제순위수준과 비교하였다.

〔圖 4-1〕 1人當 GNP의 國際比較



삶의 질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예로서, 1인당 GNP 최상위 국가의 수준을 100점으로 하고, 최하위 국가수준을 0점으로 하여 백분위점수를 구하고 이를 국제순위와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1인당 GNP는 소수의 상위 국가에 크게 偏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점을 향해 불룩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GNP의 수준을 단순히 국제순위로만 비교한다면 분포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대만을 제외한 174개국에서 31위이지만 1위인 룩셈부르크에 비해서는 약 21% 수준에 불과하였다. 삶의 질의 부문별 수준을

비교할 때는 순위와 점수의 분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삶의 질」의 部門別 國際比較

본절은 부문별 삶의 질을 국제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174개국의 부문별 삶의 질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각 부문의 제1주성분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둘째로 각 부문의 결과를 UNDP의 HDI 국가순위 및 1994년 기준 1인당 GNP의 국가순위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셋째로, OECD국가의 자료를 따로 발췌하여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조만간 있을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넷째로, 각 부문의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국제순위를 表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각 부문에서 구한 백분위 삶의 질 점수를 순위와 비교하고, 그 분포 및 편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문별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가. 保健·醫療部門

보건·의료부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년수(LEXPМ),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LEXPФ), 영아생존률(INFANT), 65세 이상 인구비율(PCT65)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제1주성분은 특성치 3.4564로 표본의 전체변이중 86.4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각변수의 가중치(또는 주성분 적재치)는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년수(LEXPМ),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LEXPФ), 영아생존률(INFANT), 65세 이상 인구비율(PCT65)이 각각 0.5210, 0.5293, 0.5198, 0.4223으로 비교적 균등한 양상을 보였으나,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년수(LEXPМ),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

(LEXPf), 영아생존률(INFANT) 변수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비율(PCT65)변수의 가중치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기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문의 삶의 질은 174개국 가운데 59위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동부문의 삶의 질 수준은 所得水準 및 人間開發順位 (1인당 GNP순위 및 HDI순위) 31위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부문 삶의 질의 상위 5위권에는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스 등 유럽권에 속하는 국가와 일본이 위치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국가들로는 아프가니스탄, 시에라 레온, 말리, 말라위, 기니아 비사우 등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24위로 국제순위 93위인 터키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OECD순위 23위인 뉴질랜드와는 점수에 있어서 약 16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삶의 질 수준을 점수로 보면, 1위인 스웨덴을 100점으로 하였을 때 약 71점으로, 3위인 일본 수준의 약 74%, 10위인 벨기에의 약 75%, 26위인 뉴질랜드의 81%에 해당하는 데 이는 아시아권의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낮은 수준이다(表 4-6 참조). 또한, 64위인 중국에 비해서는 순위차이는 있으나 점수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분석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문 삶의 질이 1인당 GNP나 HDI 순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이유는 본 부문의 지표를 결정하는 각 변수의 크기가 모두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년수(LEXPM)는 59위,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LEXPf)는 42위, 영아생존률(INFANT)은 58위, 65세 이상 인구비율(PCT65)은 62위에 불과하다.

〈表 4-6〉 韓國과 OECD國家의 保健·醫療部門 「삶의 질」 比較

국가명	OECD순위	국제순위	100분위 점수
스웨덴	1	1	100.00
스위스	2	2	96.37
일 본	3	3	96.20
노르웨이	4	4	96.16
그리스	5	5	96.09
이탈리아	6	6	95.67
스페인	7	7	95.41
영 국	8	8	94.58
프랑스	9	9	94.48
벨기에	10	10	94.20
오스트리아	11	11	93.54
덴마크	12	12	93.38
독 일	13	13	92.86
네덜란드	14	14	92.54
핀란드	15	15	91.67
아이슬란드	16	16	91.52
캐나다	17	17	91.15
룩셈부르크	18	18	90.89
호 주	19	19	89.85
미 국	20	20	89.63
포르투갈	21	21	89.22
아일랜드	22	24	87.53
뉴질랜드	23	26	87.27
한 국	24	59	71.01
터어키	25	93	57.21

註: 현재 OECD가입국은 29개국이나 1995년 이후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圖 4-2〕 保健·醫療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보건·의료부문에서 삶의 질의 국가간 偏重度는 1인당 GNP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 부문 삶의 질 점수는 1인당 GNP에 비교할 때, 국제순위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원점을 향해 오목한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분포로 인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우리나라 삶의 질이 59위임에도 불구하고 1위인 스웨덴 수준의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經濟部門

經濟部門에서는 1人當 GNP分野, GNP分野, 經濟活動參加分野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듯 경제부문을 구분한 이유는 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함에 있어 동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1人當 GNP分野

1인당 GNP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94년 기준으로 8,508달러로 대만을 제외하고 31위에 해당한다. 동 분야 1, 2, 3위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으로 각각 39,850달러, 38,231달러, 37,048달러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로는 싱가포르, 홍콩이 각각 23,435달러, 21,838달러로 세계 10위, 15위로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1위인 룩셈부르크의 약 21%, 3위인 일본의 약 23%, 그리고 10위인 싱가포르의 약 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表 4-7〉 主要國의 1人當 GNP

(단위: US달러)

국가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스페인	한국
1인당 GNP	39,850	38,231	37,048	25,808	23,435	21,838	12,335	8,508
순위	1	2	3	6	10	15	28	31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2) GNP分野

우리나라의 GNP규모는 1994년에 약 3664억 8400만달러로 세계 13위에 위치한다. 동 분야 1위부터 3위는 미국, 일본, 독일이며 각각 약 6조 7373억 6700만달러, 4조 3211억 3600만달러, 2조 754억 5200만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생산한 GNP규모는 미국의 약 5%, 일본, 독일, 중국의 약 8%, 18%, 58%정도라고 할 수 있다.

〈表 4-8〉 主要國의 GNP

(단위: 십억달러)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한국
GNP	6,737	4,321	2,075	630	570	536	525	366
순위	1	2	3	7	8	9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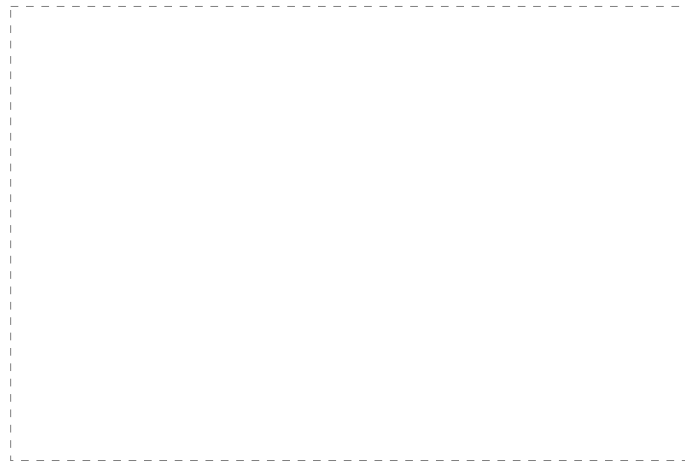
資料: World Bank, *Annual Report*, 1996

3) 經濟活動參加 分野

經濟活動參加 分野에서는 사용된 男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M),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 男性 對比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ACTFM)변수의 제1주성분을 구하였다. 각 가중치는 각각 0.4489, 0.6721, 0.5888로, 한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수로 밝혀졌다. 특성치 2.1789의 제1주성분은 표본의 전체변이중 72.63%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 분야에 있어서 세계 56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同 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및 인간개발순위 31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 분야는 브룬디, 캄보디아, 덴마크가 각각 1위에서 3위를,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가 각각 27위, 30위, 33위, 50위를 차지하고 있다.

[圖 4-3] 經濟活動參加 分野: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동 분야를 점수면에서 보면, 1위인 브룬디를 100점으로 했을 때, 3위인 덴마크는 약 87점, 27위인 일본은 약 67점, 우리나라는 약 56점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OECD국가인 네덜란드

(62위), 그리스(64위), 스페인(70위), 아일랜드(80위), 터어키(95위), 룩셈부르크(102위), 벨지움(114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분야 수준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동 부문의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를 비교하면,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ACTM, ACTF), 그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ACTFM)이 대체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세계 71위, 53위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 71위에 불과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의 偏重度는 1인당 GNP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經濟部門: 1人當 GNP, GNP規模, 經濟活動參加 分野의 總合

경제부문의 삶의 질은 앞에서 살펴본 1인당 GNP분야, GNP분야, 경제활동참가분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1인당 GNP수준, GNP수준, 경제활동참가분야 점수의 표준화된 값을 주성분분석의 대표변수로 사용되었다. 경제부문에서 1인당 GNP, GNP규모, 경제활동참가분야 점수의 가중치는 각각 0.6464, 0.5960, 0.4764로서 동 부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인당 GNP변수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분석결과, 특성치 1.6457의 제1주성분은 표본의 전체변이중 54.86%를 설명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삶의 질은 세계 29위로 밝혀졌다. 동 부문의 1위부터 5위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이며, 1인당 GNP에서 1위로 알려진 룩셈부르크는 동 부문에서 8위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국가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16위, 홍콩이 19위로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스페인에 이은 21위로 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터키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 삶의 질 수준을 점수면에서 보면, 1위인 미국을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약 23점에 해당한다. 일본은 약 90점을 받아 미국

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였으며, 독일은 약 55점으로 3위이기는 하지만 일본과의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表 4-9〉 韓國과 OECD國家의 經濟部門 「삶의 질」 比較

국가명	OECD순위	국제순위	100분위 점수
미 국	1	1	100.00
일 본	2	2	89.86
독 일	3	3	55.03
프랑스	4	4	47.81
스위스	5	5	46.85
덴마크	6	6	43.43
노르웨이	7	7	42.01
룩셈부르크	8	8	42.00
영 국	9	9	41.92
스웨덴	10	10	39.78
캐나다	11	11	39.09
이탈리아	12	12	37.03
오스트리아	13	13	36.87
아이슬랜드	14	14	35.49
핀란드	15	15	34.44
호 주	16	17	33.31
네덜란드	17	18	33.30
벨기에	18	20	28.89
뉴질랜드	19	21	28.32
스페인	20	24	26.39
한 국	21	29	23.19
포르투갈	22	31	22.55
아일랜드	23	33	21.57
그리스	24	40	19.12
터 키	25	79	1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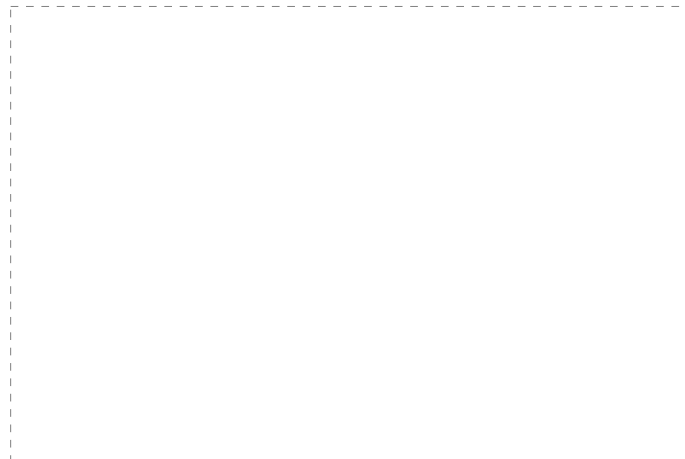
註: 현재 OECD가입국은 29개국이나 1995년 이후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순위는 비록 29위지만, 점수면에서는 일본 수준의 약 26%에 불과한 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수준격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격차의 주된 요인은,

비록 우리나라가 1인당 GNP에서 세계 31위, 경제규모(GNP)에서 세계 13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각각 23%와 8%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제순위에 따른 경제부문의 삶의 질 점수는 그 분포가 크게 편중되어 있어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순위증가에 따라 삶의 질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패턴은 1인당 GNP의 편중도와 유사한 것이다. 즉, 소수의 몇개국이 경제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경제부문 삶의 질의 불균등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圖 4-4〕 經濟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다. 教育部門

教育部門의 분석결과, 제1주성분은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LITER), 남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M),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F),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ENROLFM), 초등학교 100명당 교사수(TRPPL)에 대한 각변수의 가중치, 0.4068, 0.4692,

0.5066, 0.3989, 0.4457의 선형결합으로 얻어졌다. 가중치의 크기를 비교하면 교육부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는 여성과 남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F, ENROLM)로 보인다. 또한, 특성치는 3.2854로 제1주성분이 표본의 전체변이중 65.71%를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의 삶의 질은 우리나라가 세계 28위로, 1, 2, 3위는 캐나다, 미국, 핀란드이며 4위는 중동의 산유국인 카타르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국제순위는 33위인 일본, 56위인 홍콩보다 높으며,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일본, 그리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터키보다 높은 20위에 해당한다.

〈表 4-10〉 主要國의 教育部門 變數 比較

(단위: %, 명)

국가명	문자해독률	남성고등 교육취학률	여성고등 교육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
미국	99.0	68.4	83.9	1.23	7.14
일본	99.0	36.6	26.1	0.71	5.00
독일	99.0	41.1	29.7	0.72	5.88
영국	99.0	36.9	37.9	1.03	5.00
한국	97.4	57.2	34.6	0.61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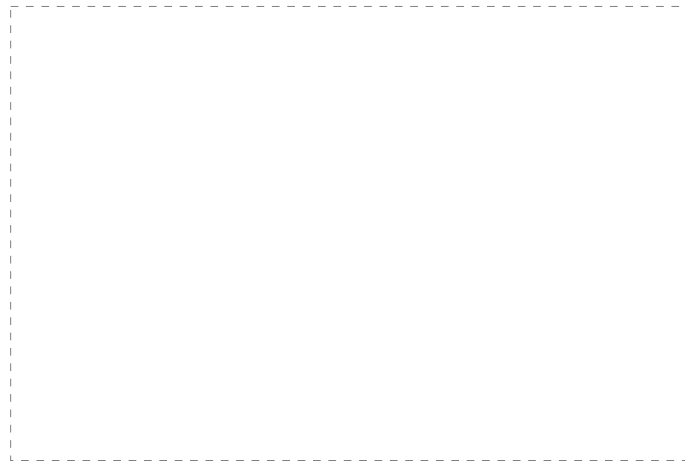
資料: UNESCO, 『UNESCO연감』, 1995.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문의 삶의 질은 보건·의료부문 및 경제활동부문과는 달리 1인당 GNP수준이나 UNDP의 인간개발순위인 31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순위를 떠나 점수면에서는 53점으로 1위인 캐나다의 절반정도, 그리고 1인당 GNP순위 33위인 아르헨티나의 약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많은 국가가 50점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영국과 유사한 점수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LITER),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ENROLFM) 및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TRPPL)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나, 남

성의 고등교육 취학률(ENROLM),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F)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48점의 일본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문의 변수별 순위는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예로, 우리나라는 남성 및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M, ENROLF)이 각각 3위와 20위로 높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 부문 남성 대비 여성비율(ENROLFM)이 세계 99위에 불과하고, 또한 교육의 질적수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초등학교 학생 100명당 교사수(TRPPL)는 세계 100위에 이르고 있어 질적구조가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교육부문에 있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순위에 비해 점수면에서 매우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

〔圖 4-5〕 教育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間의 關係



교육부문의 삶의 질 수준을 순위와 점수관계에서 보면, 점수는 순위 증가에 따라 급격한 감소를 보인후 점차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원점을 향해 블록한 양상으로 앞에서의 경제활동부문에 비

해 편중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최상위권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은 최하위권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문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면에서 열악한 국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세계발전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表 4-11〉 韓國과 OECD國家의 敎育部門의 「삶의 질」 比較

국 가 명	OECD순위	국제순위	백분위 점수
캐나다	1	1	100.00
미 국	2	2	87.65
핀란드	3	3	77.23
노르웨이	4	5	68.13
뉴질랜드	5	6	67.11
스웨덴	6	7	66.13
덴마크	7	8	64.08
프랑스	8	9	62.30
이탈리아	9	10	62.00
호 주	10	11	61.40
오스트리아	11	12	61.07
벨기에	12	13	59.89
네덜란드	13	17	57.03
아이슬랜드	14	19	56.48
스페인	15	20	56.22
영 국	16	22	54.33
포르투갈	17	25	52.83
아일랜드	18	26	52.68
독 일	19	27	52.59
한 국	20	28	52.51
일 본	21	33	47.54
그리스	22	35	46.71
스위스	23	36	46.11
룩셈부르크	24	67	32.87
터어키	25	82	27.68

註: 현재 OECD가입국은 29개국이나 1995년 이후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라. 文化·情報部門

文化·情報部門에서는 인구 1,000명당 신문구독수(NEWSP), 인구 1,000명당 텔레비전 보유대수 (TVRCVR), 인구 100명당 전화 보유대수 (PHONE), 인구 100,000명당 출판된 도서수(BOOK) 등 변수가 각각 가중치, 0.5011, 0.4940, 0.5377, 0.4645로 제1주성분을 구성하였는데, 변수의 기여도는 인구 100명당 전화 보유대수 (PHONE)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1주성분은 표본의 전체변이중 75.58%를 설명하였고 특성치는 3.023이었다.

주성분점수를 비교할 때, 문화·정보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세계 23위에 해당한다. 아일랜드, 홍콩,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최상위권을, 그리고 차드 등 아프리카국가들이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프랑스 다음으로 19위에 해당하며,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

문화·정보부문에서 국제순위 23위인 우리나라는 1인당 GNP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1위인 아일랜드를 100점으로 하였을 때 약 40점에 불과하여 점수면에서 낮으며, 같은 아시아권의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열악하여 각국의 약 53%, 67%, 87%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화·정보부문을 구성하는 변수 가운데 국제순위 10위인 인구 1000명당 신문구독수(NEWSP)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부문순위인 23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각기 49위, 29위,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변수간 분포의 차이가 부문순위 23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동 부문의 삶의 질 점수수준은 앞에서 분석한 여러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심하게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인당 GNP의 편중도에 필적할 만한 정도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문제로 국제순위

가 23위인 우리나라가 약 40점 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文化·情報部門에 있어서 순위가 높다는 것이 그 만큼 질적 수준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表 4-12〉 韓國과 OECD國家의 文化·情報部門 「삶의 질」 比較

국 가 명	OECD순위	국제순위	100분위 점수
아이슬란드	1	1	100.00
핀 란 드	2	3	72.67
스 웨 덴	3	4	69.94
덴마크	4	5	68.58
스 위 스	5	6	66.14
노르웨이	6	7	64.19
일 본	7	8	59.62
영 국	8	9	57.09
미 국	9	10	55.60
카 나 다	10	12	54.91
벨 기 에	11	13	52.35
독 일	12	14	51.00
네덜란드	13	15	50.04
뉴질랜드	14	16	49.79
룩셈부르크	15	17	49.67
오스트리아	16	18	49.41
호 주	17	19	46.40
프 랑 스	18	21	45.08
한 국	19	23	39.73
스 페 인	20	25	37.63
이탈리아	21	29	35.44
아일랜드	22	31	33.70
그리스	23	35	31.25
포르투갈	24	24	23.48
터 키	25	25	14.53

註: 현재 OECD가입국은 29개국이나 95년 이후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6. 綜合指標를 利用한 全部門 「삶의 질」의 國際比較

앞에서는 각국의 삶의 질을 부문별로 비교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보건·의료부문, 경제부문, 교육부문, 문화·정보부문에서 고려한 변수를 모두 포함한 전부문 종합지표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절에서 제1주성분을 구성하는 가중치를 정리하면, 보건·의료부문의 4개변수 즉,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 년수(LEXPM),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년수(LEXPf), 영아생존율(INFANT), 65세이상 인구비율(PCT65)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0.2734, 0.2810, 0.2700, 0.2724, 경제부문의 5개변수 1인당 국민총생산(RGNP), 국민총생산(GNP),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ACTM),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ACTF),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ACTFM) 변수에는 각각 0.2570, 0.1277, 0.1512, 0.1521, 0.0941, 교육부문 5개변수 즉, 15세 이상인구의 문자해독률(LITER), 남성의 전문대학 이상 취학률(ENROLM), 여성의 전문대학 이상의 취학률(ENROLF),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ENROLFM), 초등학교 학생 100명당 교사수(TRPPL)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0.2438, 0.2541, 0.2651, 0.1973, 0.2473를, 문화·정보부문 4개변수 즉, 인구 1,000명당 신문구독수(NEWSP), 인구 1,000명당 TV 보유대수(TVRCVR), 인구 100명당 전화보유대수(PHONE), 인구 100,000명당 출판 도서수(BOOK)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0.2560, 0.2728, 0.2901, 0.2088이었다. 제1주성분의 특성치는 9.6594로 전체변이 가운데 약 54%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서 고려한 18개의 변수가운데 전 부문 삶의 질 종합지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0개 변수로는 전화보급률(PHONE), 여성 및 남성의 평균수명(LEXPM, LEXPf) TV보급률(TVRCVR), 65세 이상 인구비율(PCT65), 영아생존율(INFANT),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ENROLF), 신문구독률(NEWSP), 1인당 GNP(RGNP), 남성의 고등교육취학률(ENROLM)이다. 보건·의료부문과 문화·정보부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변수가 전부문 삶의 질 지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삶의 질의 전부문 종합순위는 174개국 가운데 29위로 평가되었다. 한편, 미국,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랜드, 스웨덴은 각각 1위에서 5위를 차지하여 삶의 질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에는 일본(8위)과 홍콩(18위)이 상위 25개국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 OECD국가의 대부분이 상위국에 속해있으나, 포르투갈은 28위로 우리나라의 순위의 바로 앞에, 터어키는 80위로 우리나라 순위에 훨씬 못미치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삶의 질 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약 60점으로 1위인 미국에 비해서는 약 60%, 2위인 캐나다의 약 63%, 그리고 8위인 일본의 약 69%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태국의 약 1.4배, 필리핀의 약 1.6배, 그리고 중국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본, 홍콩을 제외하면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表 4-13〉 「삶의 질」 順位가 1人當 GNP順位 보다 높은 主要 國家

국 가 명	「삶의 질」 순위(A)	1인당 GNP순위(B)	순위격차(B-A)
캐 나 다	2	17	15
핀 랜 드	3	18	15
아이슬랜드	4	14	10
뉴질랜드	14	25	11
그 리 스	25	38	13
불가리아	26	97	71
베네주엘라	57	65	8

삶의 질 순위와 1인당 GNP 순위를 비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삶의 질 순위를 1인당 GNP 순위에서 減하여 그 부호와 크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만일 부호가 正이면, 순위면에서 삶의 질 수준이 1인당 GNP수준보다 높은 것을, 負이면 그 逆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절

대치는 그 격차의 크기를 표현한다. 상위 20위 국가 가운데 삶의 질 순위가 1인당 GNP 순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이다. 또한 상위권국중 삶의 질 순위가 1인당 GNP 순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일본, 벨기에를 들 수 있다. 아시아의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 중동 국가 가운데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이 1인당 GNP순위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表 4-14〉 「삶의 질」 順位가 1인당 GNP順位보다 낮은 主要 國家

국 가 명	「삶의 질」 순위(A)	1인당 GNP순위(B)	순위격차(B-A)
일 본	8	3	-5
스 위 스	9	2	-7
독 일	13	7	-6
벨 기 에	17	12	-5
룩셈부르크	22	1	-21
싱 가 폴	34	10	-24
아랍에미리트	38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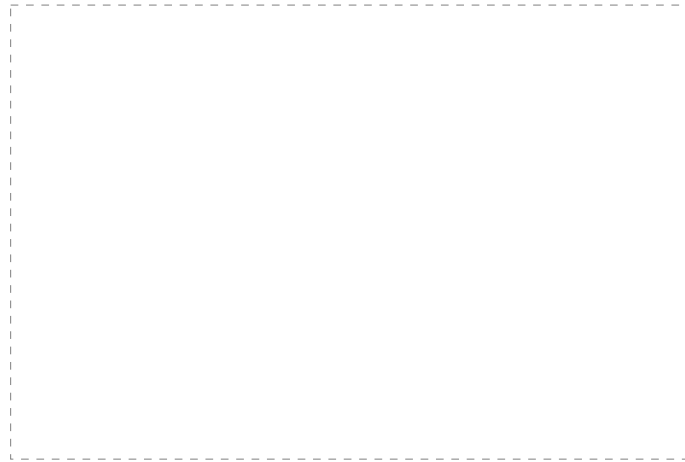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가 국제순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면, 매우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상위 20여개국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20위를 벗어남에 따라 삶의 질 점수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은 원점을 바라보며 약간 볼록한 곡선형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삶의 질의 편중도는 1인당 GNP의 편중도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상 편중도의 차이는 1인당 GNP의 절대수준이 반드시 삶의 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4-15〉 韓國과 OECD國家 全部門의 綜合 「삶의 질」 比較

국 가 명	OECD순위	세 계순위	점수
미 국	1	1	100.00
캐 나 다	2	2	95.40
핀 란 드	3	3	91.66
아이슬랜드	4	4	91.35
스 웨 덴	5	5	91.21
노르웨이	6	6	89.20
덴마크	7	7	89.01
일 본	8	8	87.77
스 위 스	9	9	81.62
영 국	10	10	79.72
프 랑 스	11	11	79.43
오스트리아	12	12	79.03
독 일	13	13	78.35
뉴질랜드	14	14	77.02
호 주	15	15	75.71
네덜란드	16	16	75.30
벨 기 에	17	17	74.82
이탈리아	18	19	73.88
스 페 인	19	20	69.09
룩셈부르크	20	22	67.16
아일랜드	21	23	63.03
그리스	22	24	62.42
포르투갈	23	28	60.95
한 국	24	29	60.34
터 어 키	25	80	35.30

註: 현재 OECD가입국은 29개국이나 95년 이후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圖 4-6] 綜合指標로 본 全部門 「삶의 질」: 順位와 點數간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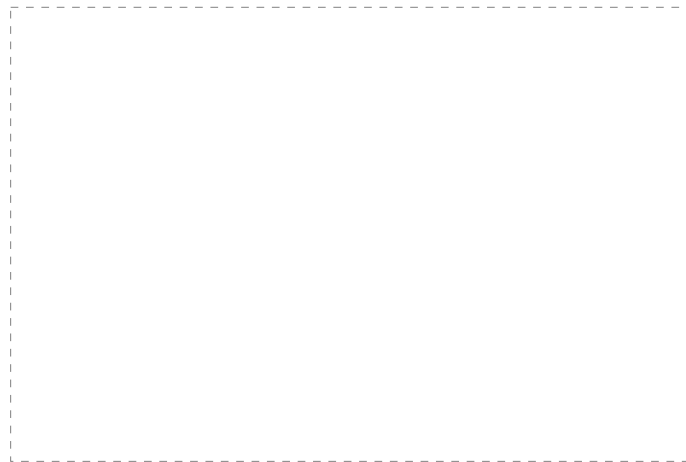
第3節 結 論

최근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제부터는 量과 質이 조화되는 同時 均衡적 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量과 質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우리나라 삶의 질의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입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분을 保健·醫療部門, 經濟部門, 敎育部門, 文化·情報部門 등 4개로 나누고, 대만을 제외한 174개국의 자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변수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主成分 分析方法을 사용하여 部門別 指標를 통해 국가간 비교분석을 행하고, 나아가 全部門을 총괄하는 綜合指標를 구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1인당 GNP와 UN開發計劃(UNDP)의 人間開發指數(HDI)수준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삶의 질은 국제 종합순위 29위로, 1인당 GNP 순위 31위 그리고 UNDP 人間開發指數(HDI) 순위 31위에 비

교할 때, 국제순위면에서는 세가지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별 분석결과를 비춰볼 때,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圖 4-7〕 우리나라 「삶의 질」의 現住所: 國際順位와 點數



우리나라 삶의 질의 부문별 국제순위를 보면, 보건·의료부문에서는 174개국 가운데 59위, 경제부문에서는 29위, 교육부문에서는 28위 그리고 문화·정보부문에서는 23위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순위면에서는 보건·의료부문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부문, 교육부문, 문화·정보부문의 순서대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부문으로 알려져 있는 바, 정책적인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GNP로 세계 13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문의 삶의 질이 29위에 머무르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56위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동인력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관련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表 4-16〉 「삶의 질」의 現位置: 國際順位

국가	전부문 종합		삶의 질						HDI 지수
		보건 의료	경 제				교 육	문 화 정 보	
				1인당 GNP	경 제 규모	경 제 활동 참가			
미국	1	20	1	6	1	30	2	10	2
일본	8	3	2	3	2	27	33	8	3
프랑스	11	9	4	9	4	24	9	21	8
영국	10	8	9	19	5	10	22	9	18
독일	13	13	3	7	3	33	27	14	15
이탈리아	19	6	12	20	6	53	10	29	20
한국	29	59	29	31	13	56	28	23	31

삶의 질 수준을 최고수준의 국가를 100점, 최저수준의 국가를 0점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점수는 전부문 종합하여 약 60점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는 71점, 경제부문에서는 23점, 교육부문에서는 53점, 그리고 문화·정보부문에서는 40점을 기록하여, 점수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선진국보다 크게 열악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부문별 점수를 비교할때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 선진국이 모두 한결같이 90점수준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어느 부문보다도 보건·의료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동부문 수준은 비록 여타 부문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미치는 정도이다. 그리고 경제부문의 삶의 질 점수는 23점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영국과 독일에 필적하고, 일본 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데 주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일본보다 다소 높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 4-17〉 「삶의 질」의 現位置: 百分位 點數

국 가	전부문 종합				
		보건·의료	경제	교육	문화·정보
미 국	100	90	100	88	56
일 본	88	96	90	48	60
프 랑 스	79	94	48	62	45
영 국	80	95	42	54	57
독 일	78	93	55	53	52
이탈리아	74	96	37	62	35
한 국	60	71	23	53	40

註: 통계자료는 95년 9월 현재 각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국가별통계의
가용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가용통계중 최신의 자료를 이
용했기 때문에 각국의 통계자료의 기준년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결론적으로, 각국의 정책입안자가 국민이 향유하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하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 가운데는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부문을 구별하고 이에 정책적 관심과 지출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순위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부문 그리고 점수면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경제활동부문에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을 본 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 59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은, 남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59위, 영아생존율이 58위로 아직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제순위 29위의 경제부문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은 경제활동참가수준이 아직 낮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노동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여성인력을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의하면,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세계 71위로 매우 낮은 점 등이 동 부문의 삶의 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

용정책,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성정책 등에 정책적 우선 순위가 부여하여 경제활동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世界開發(World Development)차원에서 어느 부문의 삶의 질이 국가간에 가장 편중되어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 가운데 경제부문, 문화·정보부문, 교육부문의 순으로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은 국가간 편중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제부문의 삶의 질의 대부분을 소수의 先進開發國家가 향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分布問題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인 1인당 GNP의 국가간 편중도는 매우 극심한 상황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하기 전에 앞에서 산출한 국제순위를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국제순위 및 1인당 GNP 국제순위와 비교하여 후자의 순위가 삶의 질 순위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表 4-18〉 國際順位間의 相關係數 比較

구 분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1인당 GNP
「삶의 질」	1.0000	0.9595	0.8683
인간개발지수	-	1.0000	0.8992
1인당 GNP	-	-	1.0000

삶의 질 국제순위와 UNDP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가 약 0.9595이고, 1인당 GNP순위와는 약 0.8683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UNDP의 인간개발지수가 부문별 국제순위 수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적은 수의 변수로 삶의 질 국제순위를 비교적 간략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에, 1인당 GNP 순위는 인간개발지수에 비해 삶의 질수준을 평가하기에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비교대상국인 174개국의 자료를 모두 얻을 수 없는 관계로 분배, 복지, 환경, 교통, 공안, 주거,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룬 국가에 있어서 상기 부문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것이다.

〈表 4-19〉 分配와 福祉變數의 國際比較

국 가	소득분배	복지	
	Gini 계수	복지지출/GDP(%)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미 국	0.3536('85)	14.8('90)	28.5('92)
일 본	0.2879('89)	11.1('90)	-
프 랑 스	0.3219('79)	29.5('90)	-
영 국	0.3236('79)	20.2('90)	33.1('91)
독 일	0.3005('84)	24.4('90)	48.5('89)
이탈리아	0.3196('86)	-	-
한 국	0.3355('88)	3.7('94)	9.3('92)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4.

統計廳, 『統計로 본 世界와 韓國』, 『韓國의 社會指標』, 1995.

소득분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교국에 비하여 그다지 왜곡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문에 있어 GDP에 대한 복지지출 비율이나 중앙정부지출에서 사회보장이나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로 인한 대기오염도 및 도로교통사망자수를 고려할 때, 환경과 교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 환경, 교통부문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우리나라 삶의 질이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⁵²⁾.

〈表 4-20〉 環境과 交通部門의 國際比較

국가	환 경		교 통
	아황산가스농도('91) ($\mu\text{g}/\text{m}^3$)	이산화질소농도('91) ($\mu\text{g}/\text{m}^3$)	도로교통 사망자수 (10만명당)
미 국	36.7	76.1	15.4('92)
일 본	26.0	43.0	12.3('93)
프랑스	38.3	-	15.8('93)
영 국	31.9	81.7	8.6('92)
독 일	46.2	34.0	12.6('93)
이탈리아	55.7('88)	-	17.2('91)
한 국	123.2	94.2	35.9('94)

註: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농도는 각국 首都를 기준으로 함(단, 이탈리아는 밀라노).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4.

統計廳, 『통계로 본 世界와 韓國』, 『韓國의 社會指標』, 1995.

본 연구의 두번째 한계는 본 분석에서 선정한 18개 변수 모두가 삶의 질에 正의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 제약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증대가 보건·의료부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누적적 효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층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는 사회에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삶의 질에 負의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간 또는 국가군간에 이질성이 심각한 경우 각 변수의 일괄적인 처리방법은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다.

세번째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각국 국민의 選好度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별 가중치를 자료의 특성에만 의존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비용절약적

52)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복지, 환경, 교통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의 국제순위나 점수가 하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 장점으로 UNDP를 포함한 많은 연구기관에서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부분적으로라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상기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 무려 174개국을 망라하는 국가의 삶의 질을 비교연구하였고, 우리나라 삶의 질의 현주소를 부문별로 제시하였으며, 삶의 질 수준을 국제순위와 수준으로 구별하여 비교하였다. 더욱이 세계개발차원에서 삶의 질의 부문별 분포도를 제시하였다는 점 등이다.

앞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후속연구로 발전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삶의 질에 있어서 부문별 投資의 效率性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한 부문에의 투자가 기타 부문에 미치는 波及效果(spillover effect)는 어떠한가 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 두 연구는 動學的 方法論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政策的 含意를 갖는 것이다. 예로 비록 현재 A부문이 B부문보다 삶의 질 수준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A부문의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부문에 상당한 正의 波及효과를 준다면, 정책입안자는 삶의 질이 열악한 B부문의 지출을 당분간 유보하고 A부문에의 투자를 일시적으로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附 錄

〈附表 4-1〉 綜合指標로 본 「삶의 질」 國際比較

국가명	순위	점수	100분위 점수	HDI 순위	GNP 순위	GNP - QOL	HDI - QOL
미국	1	2.7283	100.00	2	6	5	1
캐나다	2	2.5068	95.40	1	17	15	-1
핀란드	3	2.3480	91.66	5	18	15	2
아이슬란드	4	2.3367	91.35	6	14	10	2
스웨덴	5	2.3151	91.21	10	13	8	5
노르웨이	6	2.2330	89.20	7	4	-2	1
덴마크	7	2.2098	89.01	16	5	-2	9
일본	8	2.1788	87.77	3	3	-5	-5
스위스	9	1.9253	81.62	13	2	-7	4
영국	10	1.8256	79.72	18	19	9	8
프랑스	11	1.8153	79.43	8	9	-2	-3
오스트리아	12	1.8030	79.03	14	8	-4	2
독일	13	1.7884	78.35	15	7	-6	2
뉴질랜드	14	1.7054	77.02	17	25	11	3
호주	15	1.7032	75.71	11	21	6	4
네덜란드	16	1.6580	75.30	4	16	0	-12
벨기에	17	1.6483	74.82	12	12	-5	-5
홍콩	18	1.5951	73.92	24	15	-3	6
이탈리아	19	1.5846	73.88	20	20	1	1
스페인	20	1.3869	69.09	9	28	8	-11
이스라엘	21	1.3390	67.66	21	26	5	0
룩셈부르크	22	1.3377	67.16	27	1	-21	5
아일랜드	23	1.1220	62.61	19	27	4	-4
카타르	24	1.1065	62.25	56	23	-1	32
그리스	25	1.0826	61.70	22	38	13	-3
불가리아	26	1.0770	61.57	65	97	71	39
바베이도스	27	1.0211	60.27	25	41	14	-2
포르투갈	28	1.0147	60.12	36	34	6	8
한국	29	1.0081	59.96	31	31	2	2
라트비아	30	0.9974	59.71	48	71	41	18

〈附表 4-1〉 계속

국가명	순위	점수	100분위 점수	HDI 순위	GNP 순위	GNP - QOL	HDI - QOL
몰타	31	0.9686	59.04	34	36	5	3
바하마	32	0.9503	58.62	26	29	-3	-6
헝가리	33	0.9442	58.48	50	48	15	17
싱가포르	34	0.9089	57.65	35	10	-24	1
러시아	35	0.8827	57.05	52	61	26	17
사이프러스	36	0.8440	56.14	23	30	-6	-13
체코	37	0.8161	55.49	38	52	15	1
아랍에미리트	38	0.8160	55.49	45	11	-27	7
아르헨티나	39	0.8140	55.45	30	33	-6	-9
폴란드	40	0.7814	54.69	51	66	26	11
에스토니아	41	0.7653	54.31	43	58	17	2
우루과이	42	0.7429	53.79	32	44	2	-10
쿠바	43	0.6734	52.17	72	79	36	29
우크라이나	44	0.5618	49.57	54	83	39	10
안티구아바부다	45	0.5448	49.18	55	40	-5	10
쿠웨이트	46	0.5230	48.67	61	22	-24	15
브루나이	47	0.5127	48.43	41	24	-23	-6
루마니아	48	0.5056	48.27	98	95	47	50
리투아니아	49	0.5008	48.15	71	90	41	22
벨라루스	50	0.4954	48.03	42	73	23	-8
슬로바키아	51	0.4239	46.37	40	69	18	-11
코스타리카	52	0.4131	46.11	28	62	10	-24
바레인	53	0.3928	45.64	44	37	-16	-9
파나마	54	0.3761	45.25	49	60	6	-5
세인트키츠네비스	55	0.3693	45.09	37	45	-10	-18
레바논	56	0.3354	44.31	101	80	24	45
베네수엘라	57	0.3218	43.99	47	65	8	-10
그레나다	58	0.3102	43.72	67	64	6	9
태국	59	0.2823	43.07	58	68	9	-1
트리니다드토바고	60	0.2693	42.77	39	49	-11	-21
세이셸	61	0.2633	42.63	62	42	-19	1
칠레	62	0.2206	41.63	33	50	-12	-29
벨리즈	63	0.1863	40.84	29	63	0	-34
세인트빈센트	64	0.0923	38.65	79	74	10	15
말레이시아	65	0.0776	38.31	59	54	-11	-6
세인트루시아	66	0.0683	38.09	84	53	-13	18

〈附表 4-1〉 계속

국가명	순위	점수	100분위 점수	HDI 순위	GNP 순위	GNP - QOL	HDI - QOL
멕시코	67	0.0675	38.07	53	47	-20	-14
콜롬비아	68	0.0672	38.06	57	76	8	-11
도미니카연방	69	0.0555	37.79	69	92	23	0
자메이카	70	0.0552	37.79	88	88	18	18
수리남	71	0.0545	37.77	77	110	39	6
브라질	72	0.0537	37.75	63	55	-17	-9
필리핀	73	0.0334	37.28	100	104	31	27
알바니아	74	0.0249	37.08	82	142	68	8
아르메니아	75	0.0245	37.07	90	118	43	15
리비아	76	-0.0121	36.22	73	32	-44	-3
그루지아	77	-0.0246	35.93	92	124	47	15
모리셔스	78	-0.0279	35.85	60	56	-22	-18
사우디아라비아	79	-0.0339	35.71	76	39	-40	-3
에콰도르	80	-0.0528	35.27	68	94	14	-12
오만	81	-0.0787	34.67	91	43	-38	10
몰도바	82	-0.0791	34.66	81	111	29	-1
카자흐스탄	83	-0.0822	34.59	64	102	19	-19
터키	84	-0.0888	34.43	66	67	-17	-18
북한	85	-0.0925	34.35	83	106	21	-2
요르단	86	-0.0980	34.22	80	89	3	-6
파라과이	87	-0.1271	33.54	87	84	-3	0
스리랑카	88	-0.1373	33.30	97	119	31	9
남아프리카	89	-0.1440	33.15	95	57	-32	6
중국	90	-0.1507	32.99	111	128	38	21
아제르바이잔	91	-0.1654	32.65	99	133	42	8
키르기즈	92	-0.1747	32.43	89	121	29	-3
엘살바도르	93	-0.1918	32.03	115	87	-6	22
페루	94	-0.2049	31.73	93	77	-17	-1
우즈베키스탄	95	-0.2373	30.98	94	105	10	-1
타지키스탄	96	-0.2553	30.56	103	144	48	7
볼리비아	97	-0.2615	30.41	113	113	16	16
몽골	98	-0.2903	29.74	110	146	48	12
튀니지	99	-0.3010	29.49	75	78	-21	-24
히지	100	-0.3142	29.19	46	70	-30	-54
투르크메니스탄	101	-0.3396	28.60	86	85	-16	-15
시리아	102	-0.3527	28.29	78	72	-30	-24

〈附表 4-1〉 계속

국가명	순위	점수	100분위 점수	HDI 순위	GNP 순위	GNP - QOL	HDI - QOL
도미니카공화국	103	-0.3643	28.02	96	93	-10	-7
인도네시아	104	-0.3822	27.60	104	109	5	0
이란	105	-0.3910	27.40	70	35	-70	-35
서사모아	106	-0.3942	27.32	102	103	-3	-4
이집트	107	-0.4205	26.71	107	114	7	0
가이아나	108	-0.4338	26.40	105	127	19	-3
온두라스	109	-0.4464	26.11	116	125	16	7
몰디브	110	-0.4531	25.95	118	108	-2	8
니카라과	111	-0.4591	25.81	109	147	36	-2
나미비아	112	-0.4622	25.74	108	75	-37	-4
이라크	113	-0.4799	25.33	106	46	-67	-7
베트남	114	-0.4826	25.27	120	166	52	6
솔로몬군도	115	-0.4861	25.18	125	112	-3	10
까뽀베르데	116	-0.4900	25.10	123	107	-9	7
알제리	117	-0.4924	25.04	85	81	-36	-32
보츠와나	118	-0.5091	24.65	74	59	-59	-44
바누아투	119	-0.5209	24.37	119	101	-18	0
파테말라	120	-0.5220	24.35	112	96	-24	-8
레소토	121	-0.6484	21.41	131	116	-5	10
모로코	122	-0.6832	20.60	117	100	-22	-5
짐바브웨	123	-0.6870	20.51	121	134	11	-2
스와질랜드	124	-0.7062	20.06	124	98	-26	0
쌍도메프린시페	125	-0.7066	20.05	133	155	30	8
가봉	126	-0.7191	19.76	114	51	-75	-12
케냐	127	-0.7697	18.58	130	154	27	3
캄보디아	128	-0.7919	18.07	153	91	-37	25
미얀마	129	-0.8155	17.52	132	82	-47	3
인도	130	-0.8220	17.37	134	150	20	4
파푸아뉴기니	131	-0.8262	17.27	126	99	-32	-5
마다가스카르	132	-0.8492	16.74	135	159	27	3
코모로	133	-0.8552	16.59	139	130	-3	6
아이티	134	-0.8656	16.35	148	162	28	14
지부티	135	-0.8778	16.07	154	86	-49	19
가나	136	-0.9151	15.20	129	137	1	-7
콩고	137	-0.9414	14.59	122	120	-17	-15
카메룬	138	-0.9444	14.52	127	117	-21	-11

〈附表 4-1〉 계속

국가명	순위	점수	100분위 점수	HDI 순위	GNP 순위	GNP - QOL	HDI - QOL
라오스	139	-0.9840	13.60	138	148	9	-1
파키스탄	140	-1.0159	12.86	128	136	-4	-12
수단	141	-1.0412	12.27	144	129	-12	3
방글라데시	142	-1.0433	12.22	146	160	18	4
탄자니아	143	-1.0489	12.09	147	172	29	4
적도기네	144	-1.0499	12.06	142	138	-6	-2
나이지리아	145	-1.0547	11.95	141	153	8	-4
자이르	146	-1.0563	11.91	143	173	27	-3
부룬디	147	-1.0641	11.73	165	168	21	18
토고	148	-1.0786	11.39	140	149	1	-8
부탄	149	-1.0844	11.26	160	139	-10	11
베냉	150	-1.0928	11.06	155	141	-9	5
네팔	151	-1.0979	10.95	151	164	13	0
코느디브와르	152	-1.1153	10.54	145	131	-21	-7
기네비쑤	153	-1.1159	10.53	163	157	4	10
예멘	154	-1.1375	10.03	137	152	-2	-17
라이베리아	155	-1.1396	9.97	159	126	-29	4
이디오피아	156	-1.1634	9.42	171	171	15	15
세네갈	157	-1.1681	9.31	152	122	-35	-5
감비아	158	-1.1683	9.31	161	143	-15	3
잠비아	159	-1.1736	9.18	136	145	-14	-23
르완다	160	-1.1968	8.64	156	163	3	-4
중앙아프리카	161	-1.1980	8.62	149	140	-21	-12
소말리아	162	-1.2026	8.51	166	158	-4	4
우간다	163	-1.2366	7.72	158	165	2	-5
앙골라	164	-1.2720	6.89	164	115	-49	0
부르키나파소	165	-1.2984	6.28	169	151	-14	4
차드	166	-1.3057	6.11	162	167	1	-4
모리타니	167	-1.3062	6.10	150	135	-32	-17
모잠비크	168	-1.3104	6.00	167	174	6	-1
말라위	169	-1.3405	5.30	157	170	1	-12
니제르	170	-1.3644	4.74	174	161	-9	4
기네	171	-1.3895	4.16	168	132	-39	-3
시에라리온	172	-1.4565	2.60	173	169	-3	1
아프가니스탄	173	-1.5207	1.11	170	123	-50	-3
말리	174	-1.5682	0.00	172	156	-18	-2

第 5 章 OECD國家와의 比較

서구의 선진 산업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삶의 질의 전반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앞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삶의 질의 전 영역에 걸쳐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1995년에 1만 달러에 도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서구 선진산업국, 예컨대 G7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삶의 질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들 나라에 크게 뒤져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현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의 삶의 질의 전반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현재의 삶의 질의 양상이 어떠한가 하는 점에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현수준과 OECD국가들의 과거의 시점에서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전세계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고려해야할 점 이외에 몇가지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첫째의 고려 사항은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하여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상황에 충분히 민감한(sensitive)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개별 척도로서 문맹률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합한 지표가 아니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들간에는 통계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다양한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척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가능한 많은 수의 다양한 개별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의 다차원

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는 전세계의 국가들과의 비교시보다 더 많은 수의 개별 척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의 다양한 영역을 보다 풍부하게 포착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많은 통계치들이 OECD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서로간에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컨대 환경 분야의 경우 OECD통계와 한국 통계의 기준이 상이하여 본 분석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 없었다. 셋째, 삶의 질의 구성 분야의 측정에 있어 ‘양’과 ‘질’의 구분 및 ‘수준’과 ‘분배’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분야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양과 질의 구분이나 수준과 분배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나,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질적인 측면 및 분배의 측면은 별도의 차원으로서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과 소득 분배는 별도의 차원을 구성하며, 교육의 경우 교육의 양적인 측면인 취학률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인 교사대 학생의 비율 등은 구분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第4章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분석틀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진단해 보았다. 본 분석에서는 앞장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자료 등 각종 국제 통계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앞장의 전세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근 시점의 통계치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한 반면, 본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래 5년 간격으로 6개의 시점을 잡아 종단면 분석을 시도한다. 5개의 시점은 1969년, 1974년, 1979년, 1984년, 1989년, 1992년이다. 여기서 각각의 시점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일부 지표들의 경우 당해 년도의 통계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기준 년도의 전후로 2년씩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계치를 각각의 대표 년도의 통계치로 하였으며, 1992년의 경우는 1992년 이래 구

득 가능한 최근의 통계치를 사용하였다⁵³⁾. 이결과 분석에 활용한 사례의 수는 한국을 포함한 OECD 23개 국가들⁵⁴⁾에 대한 6개시점의 사례로서 총 144개가 된다.

삶의 질은 총체적인 개념이므로 분석을 위하여는 세부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4章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구성 부분의 설정 및 각 구성 부분에 포함된 개별 변수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앞에서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 구분한 부문 설정을 선진국들의 상황 및 가용 통계치의 범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많은 수의 개별지표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의 구성 부문에 대한 복합 지표를 만들고자 할 때, 개별 지표간의 상대적 가중치의 설정에 있어 가능한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개별 지표들의 변이를 가장 잘 요약하는 복합 지표를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을 추출하는 기준은 관례에 따라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을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차원을 삶의 질의 구성 부문을 대표하는 복합지표로서 추출하였다(Dillon & Goldstein, 1984).

주성분 분석방법은 변수들간의 상대적 가중치의 설정에서 연구자의

53)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1992년 혹은 1993년도의 통계치가 구득 가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치가 1993년 혹은 1994년도의 통계치이다.

54) 폴란드와 헝가리 및 체코, 멕시코는 1990년대 이후에 OECD에 가입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터키의 경우 모든 지표에 있어 OECD의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매우 커 한국과 OECD국가들과의 비교 시 OECD 국가들간의 동질성 문제를 크게 증폭시켜 분석의 타당도를 낮추게 되므로 이 나라 또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본 분석에 포함된 OECD 23개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의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복합지표의 통계치의 해석이 곤란하며 복합지표 통계치들 서로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두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하나의 방법은 복합지표의 분포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척도로 표준화하여 복합지표들 서로간의 동일한 단위를 갖도록 조정하였으며, 다른 한가지 방법은 최저 관측치를 0으로 최고 관측치를 100으로 하는 새로운 척도로 표준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후자의 경우 0의 값에 대하여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관측된 최소치라는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이러한 두 방법은 실제의 의미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지 후자의 방법이 100분위 척도를 사용므로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분위 통계치를 사용하여 국가간 혹은 상이한 두 시점간의 상대적인 격차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여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주의를 요함을 밝혀 둔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개 부문에 대하여 설정과정을 설명하고 개개 부문에 대응하는 복합지표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복합지표를 이용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첫째는 한국의 최근의 수준과 OECD국가들의 과거와를 개개 부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개 부문에 대하여 한국의 현재 수준이 OECD국가들의 어느 시점과 유사한가를 살펴본다. 둘째는, 소득수준을 통제된 뒤 한국과 OECD국가들과의 삶의 질의 다양한 부문들을 상호간에 비교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OECD국가들이 현재의 한국의 소득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삶의 질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는, 삶의 질의 개개 부문을 하나씩 통제하면서 다른 부문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상호간에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어느 부문이 타 부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앞서거나 혹은 뒤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의 현재의 위치가 선진국의 어떤 나라의 언제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가를 밝히는 작업도 덧붙인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선진국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잃고 있는가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第1節 「삶의 질」의 構成部門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대인의 삶을 수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수리적 측정을 통하여 삶의 질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의 사회지표운동 이래 계속되어 왔다(Carley, 1983). 그러나 어느 시도에서도 삶의 영역 구분 및 각 영역에 속하는 개별 지표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삶의 영역 구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지표의 구분체계를 참조하여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는 보건·의료부문, 경제활동참여 부문, 교육부문, 문화·정보부문, 형평부문이다. 국민소득의 경우 국가간의 비교 분석에는 활용하였으나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나타내기 보다는 삶의 영위를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환경 및 주거의 부문이 자료의 제약으로 본 분석에는 포함할 수 없었다.

각 부문에 대한 척도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주성분 분석방법의 경우 어느 한 사례라도 자료의 결손이 있으면 그 국가의 전체 년도들의 자료 혹은 그 변수 자체가 완전히 분석에서 제외되

는 특성이 있으므로 결손 사례를 가능한한 추정치로서 대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자료의 경우 특히 일부의 변수(예컨대, 5세 이하의 유아사망률, 소득불평등도, 정부지출중 복지부문의 지출비율 등) 및 일부의 시점(특히, 1969년과 1992년에서)에서 자료의 결손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결손 사례의 경우 일부의 변수들에 대하여는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치를 구하여 대입하였으나⁵⁵⁾ 결손사례가 포함된 변수를 관련 변수로 설명하는 회귀 모델에서 설명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 사례를 추정치로 대치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각 부문에 포함된 개별변수의 선정은 자료의 구득가능성(availability)과 지표의 민감성(sensitivity)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부문별로 부문의 구성 내역 및 의미를 설명한다.

1. 保健·醫療部門

질 높은 삶의 첫째 조건이 건강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견해를 뒷받침하듯 분석 결과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어떤 부분 보다도 복합척도의 의미가 명료하며 개별지표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문을 구성하는 개별지표로는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 출생시 여성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율, 의사 1인당 인구 비율, 총인구에 대한 식수보급 인구비율⁵⁶⁾ 등의 6개 변수를 사용하

55) 회귀분석을 통한 대입 방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손사례가 포함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여타 변수들 (본 분석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4 이상의 변수만 선택하였음)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여 우선 회귀분석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 값이 0.5 이상인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계산하여 대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소득불평등도 변수의 경우 결손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결손사례를 추정치로 대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였다. 여기서 5세 미만의 유아사망률을 영아사망률과 함께 포함시킨 이유는 이 지표가 선진국의 상황에 보다 민감한 지표이므로 두 지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Haq, 1995).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제1주성분이 전체 변량의 75.6%를 설명하여 압도적인 대표성을 갖는 척도로 밝혀졌으며 개별 변수와의 관계의 강도 및 방향에 있어서도 기대한 대로 결과를 보였다. 다음의 <表 5-1>은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1> 保健·醫療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 수 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남성의 기대수명	70.60	3.01	0.404
여성의 기대수명	76.91	3.10	0.419
영아사망률	14.30	9.58	-0.396
5세 미만 유아사망률	13.76	9.17	-0.403
65세 이상 인구비율	12.28	2.81	0.306
의사 1인당 인구비율	566.31	267.80	-0.370
식수보급률	93.95	9.05	0.333

2. 經濟活動參加 部門

경제활동참가는 소득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지위 및 역할의 획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일 특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사회 일반의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활동능력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56) 이러한 변수들 외에 보건수준에 관계되는 지표로 '1인당 일일 칼로리 섭취량' 및 '보건관련 정부지출이 GNP 혹은 전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의 초기단계에서는 포함시켰으나 해석상의 모호성 문제로 이후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참가의 결과 획득되는 소득과는 별도로 질 높은 삶을 위한 독립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에의 참가 여부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기 완성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는 참가의 질 또한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의 질적인 측면 특히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실업률과 10만명의 제조업 근로자당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⁵⁷⁾.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아이겐 값이 1.0을 넘거나 혹은 근접하는 두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 제1주성분이 전체 변량의 59.3%를, 제2주성분이 전체변량의 23.1%를 설명하여 함께 82.4%가 이 두 주성분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각각의 주성분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요인 부하율(factor loading)을 검토하여 각각의 주성분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성분의 경우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하여 요인 부하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실업률 및 산재사망비율과는 요인 부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주성분이 경제활동참가의 양적인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2주성분의 경우 제1주성분과는 개별 변수들간의 요인부하율의 분포에 있어 반대의 양상을 보여,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낮은 연관을 실업률 및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을 보인다⁵⁸⁾. 이는 이 주성분이 경제활

57) 이밖의 지표로서 '제조업의 주당근로시간', '연소 노동자 비율', '노동자의 권익 수준을 나타내는 일련의 지표' 등을 초기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타변수들과의 상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으며, 연소 노동자 비율과 노동자 권익 지표들은 선진국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결손 사례가 매우 많아 최종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58) 산재사망률의 경우 제1주성분과의 요인부하율이 제2주성분과의 요인부하율보다 높으나 상관관계의 방향을 살펴볼 때 이 변수는 실업률과 일관된 방향을 보이므로, 실업률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복합적도의 기여 변수의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동참가의 안정성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1주성분을 경제활동의 ‘양’, 제2주성분을 경제활동의 ‘질’로 명명하기로 한다. 제2주성분의 경우 실업률과 사고사망 비율과 정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주성분들과는 달리 주성분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의 질이 낮은 상태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은 상호간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도록(orthogonal) 되어 있으므로 이 두 척도를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척도로 만드는 작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복합변수를 경제활동참여의 상호간 독립된 두개의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⁵⁹⁾. 다음의 <表 5-2>는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2> 經濟活動參加 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제2주성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3.56	10.35	0.585	-0.06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0.05	14.00	0.597	-0.139
실업률	5.69	4.19	0.238	0.964
산재사고사망률	10.28	6.06	-0.495	0.217

3. 教育部門

질 높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인적자본을 축적한다는 수단적인 의미로서 질 높은 삶을 가능케하는 전제 조건이 될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아완성을 향한 질 높은 삶의 중요한 구성 부

59)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여러개의 주성분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다. 예컨대 Slottje 등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간 비교 연구(Slottje et al., 1991)에서는 각 주성분의 변이 설명도를 가중치로 하여 몇개의 주성분을 한개의 복합척도로 합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주성분들 상호간의 상관도가 전혀 없는 두차원을 결합하려는 그릇된 시도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분이다(Haq, 1995). 교육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과 질의 측면을 분석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대변되듯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열망은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며,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의 양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流量指標와 貯量指標 모두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流量指標로서, 취학률 즉 해당 인구연령대의 인구대비 취학인구의 비율이 대표적인 것이라면 貯量指標로서, 해당인구중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을 생각할 수 있다. 높은 취학률이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써 이 효과가 축적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流量指標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것이나 축적의 과정이 짧으므로써 貯量指標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전문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25세 이상 인구중 고등학교 수료 이상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 비율의 역수 및 인구 1000명당 과학자 및 전문기술인의 비율을 사용하였다⁶⁰⁾. 이러한 지표들을 이

60) 과학자 및 전문기술인의 비율은 교육의 질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비율이 낮다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낮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타, 이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들의 선정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때 더이상 적절한 척도가 될수 없는 지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예로 문맹률,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을 들 수 있다. 또한 GNP 혹은 정부지출중 교육부문에의 지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해석의 모호성 문제로 본 부분의 구성 변수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수준과 함께 형평의 차원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의 차원은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용하여 주성분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아이겐 값이 1.0을 넘는 두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 제1주성분이 전체 변량의 57.6%를, 제2주성분이 전체변량의 21.9%를 설명하여 합계 79.4%가 이 두 주성분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각각의 주성분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요인 부하율을 검토하여 각각의 주성분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성분의 경우 남성 및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및 25세 이상 인구중 고등학교 수료 이상의 비율에 대하여 요인 부하율이 높다. 따라서 이 주성분은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은 제2주성분은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의 역수 및 인구 1000명당 과학자 및 전문기술인의 비율에 대하여 높은 요인부하율을 보여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1주성분을 교육의 ‘양’, 제2주성분을 교육의 ‘질’로 명명하기로 한다. 다음의 <表 5-3>은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3> 教育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제2주성분
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30.31	14.02	0.511	-0.364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26.43	17.80	0.528	-0.238
고등학교 수료이상 인구비율	12.75	7.28	0.483	-0.166
초등학생 100명당 교사수	0.06	0.02	0.273	0.739
과학자 및 전문기술인 비율	2.77	1.54	0.390	0.487

4. 文化·情報部門

문화적인 산물의 향유 및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체계 또한 질 높은 삶의 내용인 동시에 전제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수량적으로 계측하기 힘든 문화적인 산물 자체의 수준 보다는 문화 산물의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계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질 높은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산물의 보편적인 향유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문화 향유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인구 1,000명당 신문구독수, 인구 1,000명당 텔레비전 보유대수, 인구 100명당 전화 보유대수, 인구 100,000명당 출판된 도서 수를 이 부문의 측정을 위한 개별척도로 사용하였다⁶¹⁾.

OECD국가들에 대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아이겐 값이 1.0이 넘는 1개의 주성분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주성분은 전체 변량의 54.2%를 설명하며 구성 변수와의 상관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미가 비교적 명료한 복합척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表 5-4>는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4> 文化·情報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TV보급률	364.16	145.80	0.521
출판도서 보급률	96.19	92.70	0.327
전화 보급률	43.53	18.00	0.593
신문 구독률	312.99	144.19	0.520

5. 衡平部門

평균적인 수준으로서의 질 높은 삶의 향유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간에 분배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 또한

61) 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GDP대비 해외관광에 소요한 금액의 비율’ 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지표로서 문화·정보 부문의 다른 변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형평이라고 하면 빈부간의 소득 혹은 재산의 격차를 제일 먼저 떠올리나,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 또한 별도의 차원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⁶²⁾. 우리나라의 경우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를 볼때 소득격차와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서로간에 독립된 차원으로 생각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는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원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기회의 성격에 따라 남녀간의 어느 정도의 격차를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현재의 수준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포되고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가 작은 것이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 사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소득분포에서 하위의 40% 집단의 소득점유율과 상위 20%집단에 대한 하위 20%집단의 소득비율 및 정부지출총액에 대한 사회보장과 복지부문의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하위 40%집단의 소득점유율의 값이 높을 수록 및 상위 20% 대 하위 20%집단의 소득비율의 값이 낮을수록 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정부지출 비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이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값이 높을수록 보다 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에 있어서의 남녀간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간 비율을 사용하였다.

62) 지역간의 격차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또한 중요한 형평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및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사일 뿐 농업인구가 5%를 넘어서지 않는 선진산업국의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이 나라들의 경우 도농간의 격차에 관한 적절한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소득분배의 차원과 남녀간 형평의 차원은 상호간 상당히 독립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겐값이 1.0이상인 두개의 주성분이 전체 변량의 78.2%를 설명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 이중 제1주성분은 41.5%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소득분배와 관련된 변수와 큰 요인부하율을 보이고, 반면 제2주성분은 36.7%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갖으면서 성별 격차와 주로 관련성을 갖고 또한 복지 지출비율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⁶³⁾. 따라서 제1주성분은 ‘소득 분배도’로, 제2주성분은 ‘남녀 평등도’로 명명하기로 한다. 다음의 <表 5-5>는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5> 衡平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상위 20% 대 하위 20%의 소득비율	6.86	1.78	0.663	-0.136
하위 40%의 소득점유율	18.37	2.31	-0.667	0.130
취학률의 남녀 비율	0.83	0.26	0.298	0.550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비율	0.63	0.13	0.120	0.614
복지부문 지출비율	32.02	9.60	-0.112	0.534

마지막으로 독립된 부문은 아니나 1인당 국민소득(GNP per capita)을 삶의 질의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국민소득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변수이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 부문에 걸쳐 배후에 존재하는 결정요인

63) 정부지출중 복지부문에의 지출비율이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 보다 남녀격차를 나타내는 변수와 보다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단순상관계수를 검토해 보아도 복지부문의 지출이 하위 40%집단의 소득점유비율 및 상위 20%대 하위 20%집단의 소득비율 변수와 같은 상관관계의 정도는 미약한 반면, 남녀간 취학률비 및 경제활동참가율비와는 각각 0.307, 0.368로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달러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다.

第2節 OECD國家와의 靜態的 比較

본 절에서는 한국과 OECD국가들간의 삶의 질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먼저 개별 부문에 대하여 한국의 현 위치가 OECD국가들의 현재의 수준과 흡사하였는가를 비교한다. 다음으로는 OECD 국가들이 한국의 현재의 소득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삶의 다양한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비교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삶의 다양한 부문에 있어 한국의 현 수준에 도달하였던 OECD국가들의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의 어느 부문이 어느 정도 과도하게 뒤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각부문을 대표하는 복합척도인 주성분 점수를 0(최저치)과 100(최고치)의 범위로 재척도화하여 제시한다. 여기서 0이란 수리적으로 절대적인 0의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해당부문의 주성분 점수중 가장 작은 관측치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의 경우 과거의 값일수록 0에 접근할 것이며 최근의 값일수록 100에 접근할 것이다⁶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1990년대 이전의 수준은 OECD 국가들의 1960년대의 수준보다 못하므로 이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음의 주성분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64) 경제활동참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인 경제활동의 질 부문 점수의 경우에는 거꾸로 해석된다. 즉 과거가 현재보다도 경제활동참여의 안정성이 낮다면 과거가 100에 접근할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 근접할 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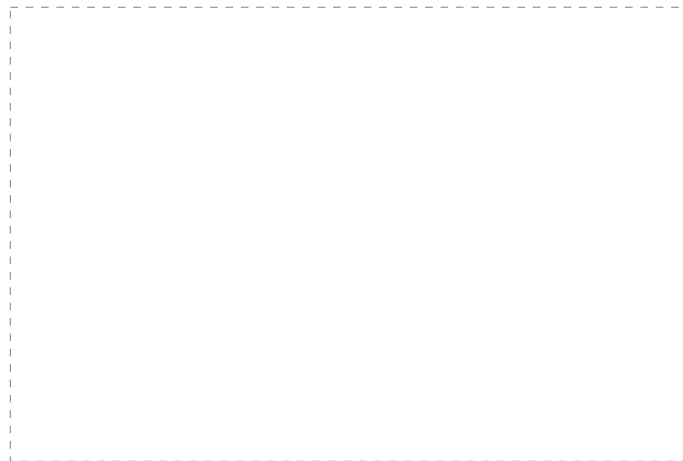
1. 個別部門의 比較

앞절에서 구분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문에 대하여 선진 산업국들은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과거 20여년간 어떠한 변화의 역정을 거처온 것일까. 또한 한국의 현재 수준은 OECD국가들의 변화의 경로에 있어 그들의 어느 시점의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한국과 OECD국가들의 평균과의 비교를 다음에서 시도해 본다.

가. 1人當 國民所得

19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OECD국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1969년의 8,165달러에서 1994년의 19,710달러로 2.4배의 증가를 보이며, 1980년대 초·중반의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圖 5-1〕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1969년의 885달러에서 1994년의 7,637달러로 8.6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속한 소득증가율을 보임에도 1992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터키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1969년도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1990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때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보다 6.9% 더 높은 수준이 OECD국가들의 1969년도 당시의 수준이다. [圖 5-1] 및 <表 5-6>은 OECD국가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시계열로 비교한 추이를 나타낸다.

<表 5-6>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단위: US달러, 1990年 不變價格)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8,165	12,841	16,240	11,312	19,675	19,710
한 국	885	1,381	2,587	2,734	5,528	7,637

나. 保健·醫療部門

보건·의료부문은 OECD국가들의 경우 1969년 50.15점에서 최근 년도에는 91.26점으로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9년에는 -55.73점으로 OECD국가들의 전기간의 최저치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들 나라들의 최저치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최근 년도에는 OECD국가들의 1969년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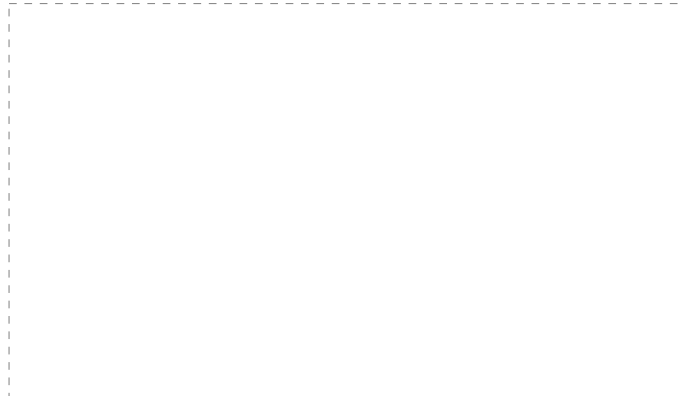
<表 5-7>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50.15	60.11	71.37	79.61	86.30	91.26
한 국	-55.73	-34.60	-8.80	7.00	20.90	49.29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圖 5-2〕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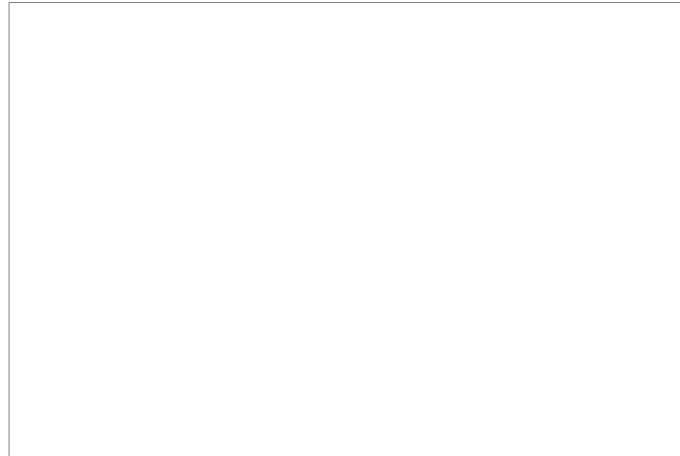
이 부분의 특색은 현재에 가까울수록 OECD 국가들 내부의 서로간 격차가 좁혀진다는 점이다. 1969년에는 평균이 50.15점에 불과함에도 표준편차는 14.8점에 달하였으나 최근 년도에는 평균값이 91.26점으로 증가했음에도 표준편차는 5.2점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근래로 올수록 보건·의료에 관한한 동질적이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表 5-7> 및 [圖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보건·의료 부문이 지속적이며 급격한 향상을 보여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개선의 속도가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게 된다.

다. 經濟活動參與 部門

1) 經濟活動參與의 量

경제활동참여의 양적인 부문에 대한 지표에 있어 OECD국가들은 1969년의 13.22점에서 최근 년도에는 69.68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23.96점으로 OECD국가들의 전기간의 최저치보다 낮았으나 1980년대초 OECD국가들의 최저치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년도에는 41.64점을 기록하여 OECD국가들의 1980년대말의 수준

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다음 [圖 5-3] 및 <表 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圖 5-3]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表 5-8>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13.22	19.42	29.26	39.56	50.16	69.68
한 국	-23.96	-10.17	-7.05	36.27	37.73	41.64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우리나라와 OECD간의 비교에 있어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경제 활동참여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8%에 달하며(1995년의 인구총조사 결과 이는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과잉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인구의 실제 참가율은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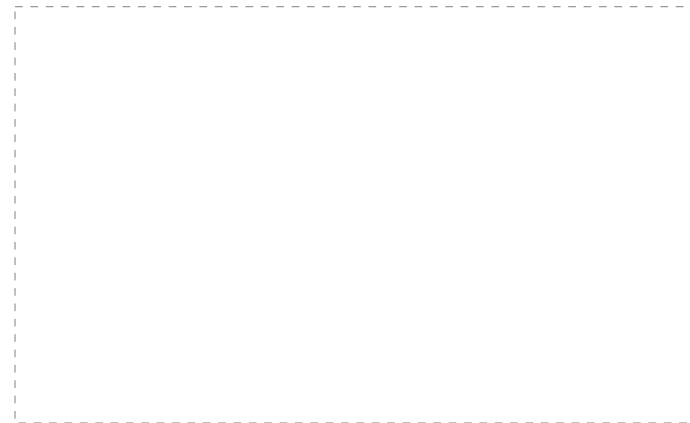
통계치 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經濟活動參與의 質

다음의 [圖 5-4] 및 <表 5-9>를 보면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OECD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에 경기가 후퇴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의 전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참여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읽을 수 있다.

[圖 5-4]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表 5-9>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25.82	25.96	27.81	36.08	28.47	35.39
한 국	50.40	43.19	43.83	30.59	22.93	22.70

註: 값이 클수록 경제활동참여의 안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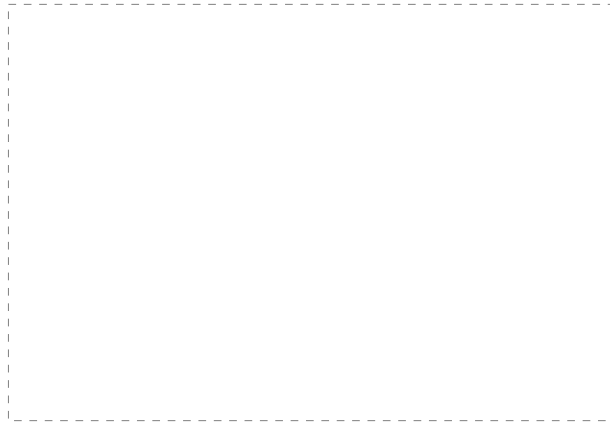
이러한 비교 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활동참여의 안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OECD국가들에 비하여 진실로 보다 나은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척도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률과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이 척도의 가장 큰 구성 요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당한 규모의 불완전고용자 및 잠재실업자의 존재를 무시한 수치이므로 선진산업국과 동일 수준의 비교가 부적절하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치에 대한 보고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조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한국이 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계측한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수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두 개별 지표의 의미와 정확도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를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서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서 경제활동참가의 질의 부문에 관하여는 통계치를 참고로만 제시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라. 教育部門

1) 教育의 量

교육열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며 다음의 [圖 5-5] 및 <表 5-10>는 부분적으로 이말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다.

〔圖 5-5〕 教育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 중후반에 OECD국가들의 최저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년도의 수치는 OECD국가들의 1980년대 중반의 수준에 육박함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 관한한 위에서 검토한 경제활동참여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OECD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表 5-10〉 教育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18.61	28.65	35.33	40.28	48.97	53.90
한 국	0.39	4.35	11.77	32.31	37.22	42.31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이는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그 의미를 되짚어 볼 때 우리나라의 실제의 현위치에 대하여 경제활동의 양적인 측면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교육의 양 부문의 척도는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과 25세 이상 인구중 고등학교 수료 이상의 인구의 비율을 주로 반영한다. 그런데 취학률의 경우 국가

들간에 교육제도의 차이에 따라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학제를 따르는 캐나다, 미국, 한국 등은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매우 높은 반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장래의 직업계획에 따라 대학교에 갈 사람을 제한적으로 선발하므로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의 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척도는 25세 이상 인구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이 수치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OECD국가 17.1%, 한국 9.0%) 따라서 위의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 관한 비교 결과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2) 教育의 質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여 질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콩나물 교실’ 혹은 ‘입시지옥’ 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관하여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表 5-11> 및 [圖 5-6]은 이러한 사실을 뚜렷이 말해 준다.

<表 5-11> 教育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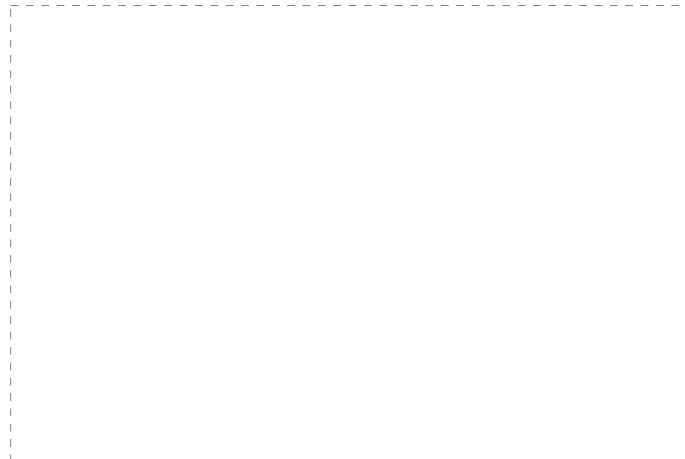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47.49	49.70	54.10	58.98	58.56	57.69
한 국	28.14	30.19	26.99	21.06	19.59	21.57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OECD국가들의 경우 1969년 이후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4년의 시점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에 정점에 도달한뒤 1980년대 후반까지 하강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개선의 기미를 보이거나 현재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과거 1960년대의 수준에도 못미치며 전기 간을 걸쳐 OECD국가들의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970~80년대에 걸쳐 높은 인구증가율 및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집중 현상의 결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문제가 크게 악화되었던 데 주로 기인한다.

[圖 5-6] 敎育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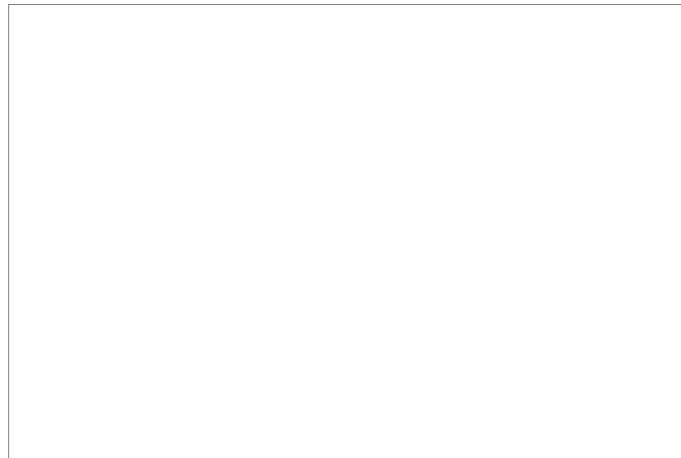
반면 교육의 질을 구성하는 또다른 구성 변수로서 과학자 및 전문기술인의 비율에 관하여는, 한편으로는 교육의 질이 높지않은데도 책임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학교에서 배양되었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들을 과학자로서 일하도록 하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OECD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보다 적절하게 과학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에 관한한 위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는 우리나라가 불리한 방향으로 과소평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둔다하여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 부문이 선진국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부문에서 개선이 크게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 文化·情報部門

문화·정보부문에 관한 우리나라는 과거 20여년간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준다. 1969년에 이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은 OECD국가들의 최저치의 수준에 근접해 있었으나 최근 년도에 이르러 OECD국가들의 1970년대 초반의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圖 5-7] 및 <表 5-12>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圖 5-7] 文化·情報部門의 時系列 比較



우리나라가 과거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1969년 OECD의 최하위국가 수준에서부터 1974년 OECD국가들의 평균의 수준까지 밖에 뒤쫓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의 설명은 이 부문에 관한 한 OECD국가들 사이에서도 서로간에 격차가 매우 커서 OECD국가들중 최저점에서 평균점에 도

달하는 데에만 해도 큰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의 설명은 이 부문에서 그동안 OECD국가들의 향상이 매우 돋보여, 위의 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중후반 이래 향상의 속도가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1970년대 전기간을 걸쳐 OECD국가들의 향상의 속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저개발도상국의 향상의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부문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이들 OECD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5-12〉 文化·情報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37.47	46.08	55.94	61.66	63.86	62.77
한 국	-2.30	4.08	15.78	26.10	38.46	44.05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바. 衡平部門

1) 所得分配部門

우리나라는 비교적 소득의 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분배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은 OECD국가들의 1980년대말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 관하여 자료구득이 가능했던 1979년 이래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준은 OECD국가들 중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들의 수준을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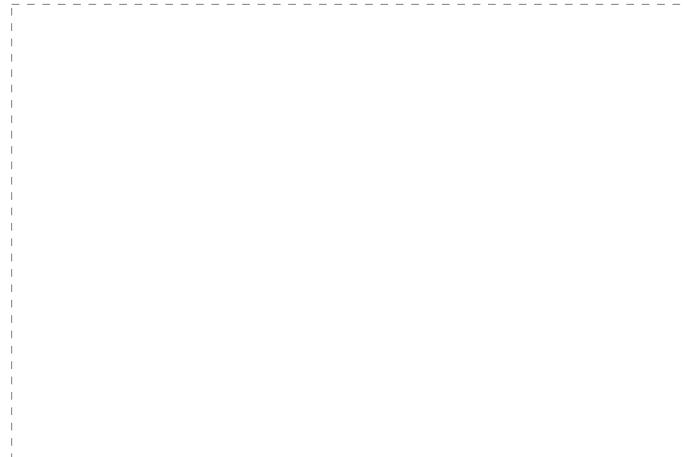
〈表 5-13〉 所得衡平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24.09	36.87	47.11	47.16	50.47	64.80
한 국	-	-	14.48	36.47	39.13	51.07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圖 5-8] 所得衡平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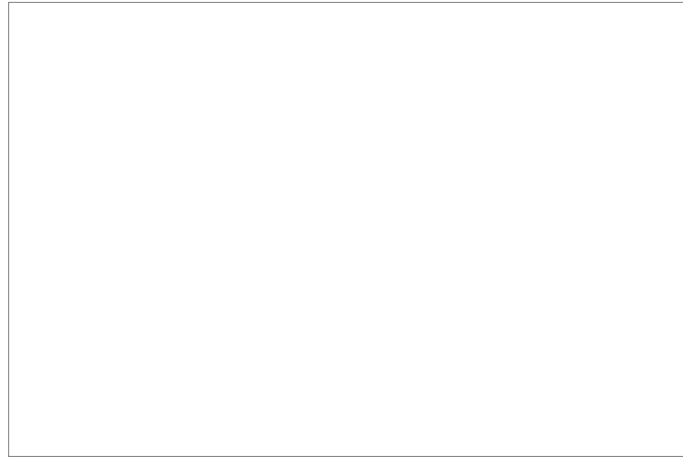
한편 OECD국가들의 경우 본 분석의 출발 시점인 1969년 이래 최근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소득형평의 측면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래 소득형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소득 40% 집단의 소득점유율은 1969년에 17%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21%로 높아져 소득형평이 과거에 대비하여 보다 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소득이 적게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비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男女間 平等部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UNDP, 19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간 격차는 선진산업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본 분석에서도 우리나라의 남녀간 격차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놀랄 정도로 큰 수준임이 드러난다. 다음의 [圖 5-9] 및 <表 5-14>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시계열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圖 5-9〕 男女平等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表 5-14〉 男女平等部門에 대한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29.06	36.53	48.62	62.33	72.22	69.33
한 국	-	-	10.06	11.85	17.25	16.57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1990년대의 우리나라의 남녀평등부분에 대한 점수는 16.57점으로 OECD국가들의 29.06 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분석이 가능했던 1979년에서 1992년의 10여 년동안 우리나라는 10.06점에서 16.57점으로 6.51점의 개선에 그쳤으나, OECD국가들은 같은기간 동안 20.71점이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이 부분의 주요 구성 변수인 경제활동참가율 및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남녀간 상대비에 대한 시계열 비교를 제시한다⁶⁵⁾.

65)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학률의 남녀간 비율이 남녀 평등과 관련된 주성분의

〈表 5-15〉 男女平等部門의 構成 要素에 대한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구성요소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취학률의 남녀비	OECD	57.8	67.8	82.5	91.1	101.1	107.1
	한국	33.6	39.4	35.2	45.6	50.6	60.5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비	OECD	48.2	53.5	59.6	66.9	69.6	73.5
	한국	54.2	64.0	58.0	62.1	63.4	62.7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위의 表를 보면 우선 남녀간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에 있어 한국의 현재수준은 OECD국가들의 1970년대 초반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 본 연구대상인 1970년대, 1980년대의 전기간 동안 남녀간 교육기회의 평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80년대말 이후로는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의 그것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참여 기회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에 관한 한국의 현수준은 OECD국가들의 1980년대 초반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미혼여성들을 대규모로 제조업에 활용하느로서 남녀간의 경제활동참여비가 64.0%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비율에 있어 큰 개선이 관찰되지 않으나, OECD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이 73.4%까지 높아졌다.

사. 要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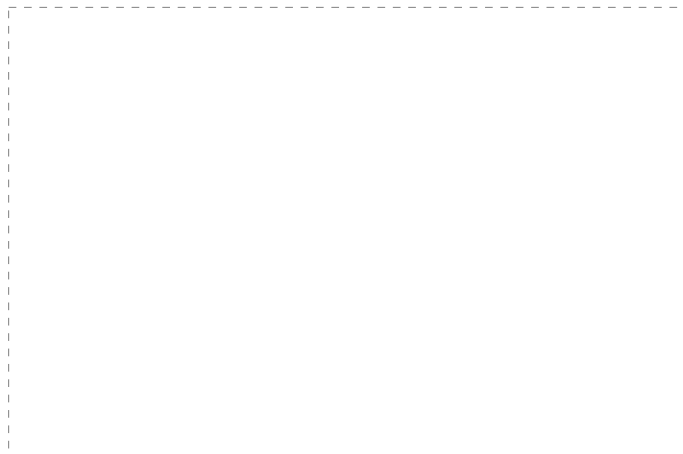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수준이 OECD국가들의 과거 어느 시점의 수준에 대응될 수 있는가 하는 점

주요 구성 요소이므로 이들 개별 변수의 비교는 부분적으로 이 부문의 주성분 점수를 통한 비교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성분 점수의 경우 이 두 변수 이외에 복지부문의 지출비율과도 상당한 정도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주성분 점수의 비교결과는 개별 변수의 비교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에 관하여 다음의 圖에서는 세로축을 연도로 가로축을 각 부문으로 하여 요약하여 제시하였다⁶⁶⁾.

[圖 5-10]을 보면 소득분배부문이 OECD국가들의 가장 최근의 수준(1980년대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 및 교육의 양 부문이 다음으로 OECD국가들의 1980년대 중반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뒤를 이어 문화·정보부문이 OECD국가들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그리고 보건·의료의 부문이 그들의 1960년대말의 수준에 우리나라가 현재 도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국민소득은 OECD국가들의 1960년대말의 수준에 조금 못미치며, 교육의 질 부문과 남녀간 평등 부문은 OECD국가들의 1960년대말의 수준과 비교하여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5-10] OECD國家 對比 韓國의 現位置



다음 節에서 상세히 분석하겠으나, 위의 圖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못미친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설득력

66) 경제활동참여의 질에 관한 부문은 우리나라 자료의 질이 문제가 되어 본 비교부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앞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조할 것.

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표현하면 OECD국가들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다른 어느 부문에 기울이는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2. 國民所得과 各 部門間の 對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삶의 수준이 부분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겠으나, 삶의 질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금전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조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물론 소득과 삶의 질간의 비례적인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의 상승과 삶의 질의 고양 간에는 반드시 인과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동반적인 상관관계를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밑바탕에 깔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삶의 질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과 대응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겠다. 물론 과거 어느 시점에서 선진국들이 그러했다고 하여 후발국인 우리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OECD의 과거의 경험이 한국의 현재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기에 따른 효과(period effect)를 무시한 유추임으로 옳지 않다. 극단적인 예로서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소득의 증가 없이도 선진국의 보건지식이 유입되어 유아사망률등이 급속히 개선된 사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후발국의 삶의 질의 수준은 선진국의 과거의 경험을 앞질러 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소득 증대를 삶의 질의 개선으로 반영시키는 데 있어 ‘후발국의 이익’⁶⁷⁾의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시도하는 OECD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정태적인 비교가 소득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의 삶의 질의 현 수준에 대하여 절대적인 판정을 시도한다기 보다는, 단지 준거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 자료로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1994년의 1인당 국민소득과 유사한 OECD의 사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19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소득인 7,637달러의 아래 위로 약 1,500달러의 범위(6,000~9,000달러)에 속하는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이 결과 24개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시기별로 선정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992년과 1989년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2사례이며, 1984년에는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의 3사례, 1979년에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의 3사례, 1974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의 3사례, 1969년에는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이 소득범위에 속한 비교 분석 사례들이다.

소득의 범위를 6,000~9,000달러로 한정하여 비교를 시도하기 전에 전 소득범위에 걸쳐 소득과 개개 부문의 수치들간 분포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1인당 국민소득과 개별 부문과의 상관분포는 附錄 참조).

예상한 대로 삶의 질의 全部門에 걸쳐 소득과 개개 부문과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그림에서 읽을 수 있다⁶⁸⁾. 그중에서도 교육의 양 부문과 문화·정보부문의 경우 소득과의 정비례 관계가 보다 뚜렷함을 읽을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소득과의 관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부문의 점수가 체감하는 로그함수의 형태를 확

67)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 개발국의 발전과정으로부터 발전전략 등을 본받음으로 선진국이 밟았던 시행착오의 전철을 피할 수 있으므로 얻게되는 이익을 의미함.

68) 경제활동참여의 질과 소득간에는 우하향 즉 負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나 경제활동참여의 질에 관한 주성분은 높은 점수가 질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실제 내용에 있어 이 부문의 점수와 소득과의 관계는 正의 방향이다.

인하게 된다. 경제활동참여의 양의 부문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부문의 편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면 경제활동참여의 질의 부문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부문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있어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큰 대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의 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형평의 부문은 소득의 측면이건 성별간의 격차의 측면이건 전반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나, 주어진 소득수준에서의 국가간의 변이가 매우 큼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작으므로 전반적으로 1 및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된다. 앞절의 분석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문인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과 교육의 양 및 소득분배부문에서는 전체 평균을 넘어서서 1사분면에 위치하며, 기타의 부문에서는 4사분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表 5-16>은 1인당 국민소득 6,000~9,000달러 범위에 속하는 OECD국가들의 6개 시점에 걸친 24개의 사례에 대한 각 부문별 주성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表 5-16>에서 이들 OECD 사례들의 평균보다 한국의 수치가 낮은 부문으로는 보건·의료 부문, 교육의 질 부문, 남녀 평등 부문이 확인된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점수는 48.3점으로 이들 나라의 평균인 61.9점에 비교해 0.87 표준편차만큼 낮다. 남녀 평등도 부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점수는 16.6점으로 이들나라의 평균 36.6점에 비교해 0.88 표준편차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육의 질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수는 21.6점으로 이들나라의 평균인 48.2점은 물론 이들나라의 최저치인 32.8점에 비교하여서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表 5-16〉 우리나라 및 6,000~9,000달러 所得範圍의
OECD事例들에 대한 部門別 統計値

부 문	한국(1992)	OECD(24개 사례) ¹⁾	
		평 균	표준편차
1인당 국민소득	7637.3 ²⁾	7402.1	1034.2
보건·의료	48.3	61.9	15.4
경제활동의 양	41.6	20.4	15.6
경제활동의 질	22.7	32.1	19.9
교육의 양	42.3	20.6	7.8
교육의 질	21.6	48.2	9.8
문화·정보	44.1	32.8	14.0
소득분배	51.1	27.5	14.6
남녀평등	16.6	36.6	23.2

註: 1) 형평부문의 사례수는 15개임.

2) 1994년도 수치임.

다른 한편으로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 교육의 양 부문, 문화·정보 부문, 소득분배부문은 이들 나라들의 평균치를 각각 1.36, 2.77, 0.80, 1.62 표준편차 만큼 앞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즉 교육의 양, 소득분배, 경제활동참여의 양, 문화·정보부문의 순으로 한국이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OECD국가의 사례들 보다 앞서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는 現在(1992~94년)라는 동일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국가들인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를 비교해 보므로써 시대효과(period effect)의 영향을 배제하고 소득수준을 고정시켰을 때 한국의 상대적인 위상을 검토해 본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들 나라 보다 조금 앞서있는 반면 보건·의료 부문, 교육의 질 부문, 및 남녀간 평등 부문에서 이들 나라에 크게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의 양 부문 또한 앞의 세 부문 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뒤져 있다. 반면 교육의 양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에 크게 앞서 있으며, 문화·정보 부문 및 소득분배의 부문에서 이들

나라 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5-17〉 1992년의 韓國, 그리스, 포르투갈의 比較

(단위: 점수, 달러)

부 문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1인당 국민소득	7,637.3	6,730.7	7,304.3
보건·의료	48.3	96.4	79.2
경제활동의 양	41.6	66.9	46.0
경제활동의 질	22.7	29.6	39.2
교육의 양	42.3	25.9	29.6
교육의 질	21.6	48.0	67.3
문화·정보	44.1	32.9	19.2
소득분배	51.1	35.0 ²⁾	59.3 ²⁾
남녀평등	16.6	59.3 ³⁾	93.7 ³⁾

註: 1) 1994년도 수치임.

2) 1984년도 자료임(해당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4,040달러였음).

3) 1989년도 자료임(해당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6,047달러였음).

本節의 분석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국가들의 과거 및 현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부문, 교육의 질 부문 및 남녀 평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게 크게 뒤떨어져 있다. 반면 교육의 양, 문화·정보, 소득분배 부문은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3. 部門間の 相互 對比

한나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 중 어느 부문이 얼마나 뒤지거나 혹은 앞서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앞절에서는 소득수준을 고정시키고 국가들간에 개개 부문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소득이 삶의 질의 구성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시대효과(period effect) 및 부문들 상호간의 영향으로 각 부문의 수준이 결

정되는 측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의 양 부문이 향상된다면 경제활동의 양 부문이 향상된다던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구성 부문중 어느 부문이 어느 정도 앞서거나 혹은 뒤떨어져 있는가를 OECD국가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고찰해 보았다.

본절에서의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절에서 취했던 소득을 고정시키고 여타 부문을 비교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각 부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의 수준과 유사한 범위(여기서는 상하로 0.3 표준편차의 범위로 함)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 포함되는 OECD의 사례들에 대하여 여타의 개개 부문별로 이들 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수치를 비교하므로서, 통제 기준으로 설정된 부문과 비교하여 어느 부문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판별한다. 여기서 뒤떨어지거나 앞서있는 정도에 대한 논의는 OECD 사례들과 우리나라와의 각 부문별 상대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 진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수치들은 1인당 국민소득을 제외하고는 0의 값의 정의가 본 분석의 대상인 전체 138개의 OECD사례들 중에서 관측되는 최소값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의미는 없으므로 상대비의 해석에서도 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각 부문별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가. 保健·醫療部門과의 比較

앞절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문이 유사 소득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보건·의료 수준에 있었던 OECD국가들의 경우 타 부문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비교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문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15개의 사례를 얻을 수 있었

다. 아래의 表는 이들 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表 5-18>에서 백분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보건·의료부문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교육의 질, 남녀간의 평등도에 있어 그들이 크게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⁹⁾. 반면 경제활동참여의 양, 교육의 양, 문화·정보, 소득형평의 부문에서는 우리가 부문에 따라 상당한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효과 및 부분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은 유추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위의 表가 가리키는 결과만을 놓고 해석한다면, 남녀간의 평등도 및 교육의 질 부문의 개선이 보건·의료부문의 개선보다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表 5-18> 韓國의 保健·醫療部門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점수, 달러)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9,307	21.9
경제활동의 양	41.6	12.8	-69.2
경제활동의 질	22.7	30.4	33.9
교육의 양	42.3	21.6	-48.9
교육의 질	21.6	47.0	117.6
문화·정보	44.1	37.4	-15.2
소득분배	51.1	27.3	-46.6
남녀평등	16.6	34.3	106.6
보건·의료	48.3	48.6	0.6

註: 1) 보건·의료부문의 42.5~54.0의 범위에 속한 15개의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나.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과의 比較

경제활동참여의 양적인 측면에서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69) 경제활동의 질의 측면은 우리나라 자료의 신뢰도가 OECD국가들에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어 동일 선상의 비교가 무의미하므로 본절에서는 단지 참고로 제시만 할 뿐 구체적 논의는 생략한다.

의 수준에 있었을 때 다른 부문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점을 다음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20개의 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의 表는 이들 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값을 비교하고 있다.

<表 5-19>에서 백분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남녀 평등도, 교육의 질, 소득, 보건·의료의 순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의 양 및 소득분배 부문에서는 그들과 우리의 수준이 거의 동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남녀 평등도, 교육의 질, 소득, 보건·의료부문들이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의 개선 보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활동참여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여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순 비교를 통한 유추의 한계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

<表 5-19> 韓國의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5,935	108.7
보건·의료	48.3	79.1	63.8
경제활동의 질	22.7	24.6	8.4
교육의 양	42.3	43.9	3.8
교육의 질	21.6	53.9	149.5
문화·정보	44.1	67.3	52.6
소득분배	51.1	48.3	-5.5
남녀평등	16.6	59.6	259.0
경제활동의 양	41.6	39.0	-6.3

註: 1)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의 33.6~49.6의 범위에 속한 20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다. 敎育의 量 部門과의 比較

우리나라의 敎育의 양적인 부분은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OECD국가들과 타부분에 대한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타부분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29개의 OECD사례들을 얻을 수 있었다. 아래의 表에서는 이들 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表 5-20>에서 백분위 비율을 살펴보면 앞에서 경제활동의 양의 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敎育의 양 부분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남녀 평등도, 敎育의 질, 소득, 보건·의료의 순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表에서 나타나는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남녀평등도, 敎育의 질, 소득, 보건·의료부분들이 敎育의 양 부분의 개선 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表 5-20〉 韓國의 敎育의 量 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6,399	114.7
보건·의료	48.3	79.5	64.6
경제활동의 양	41.6	43.1	3.6
경제활동의 질	22.7	28.8	26.9
敎育의 질	21.6	57.6	166.7
문화·정보	44.1	65.5	48.5
소득분배	51.1	48.7	-4.7
남녀평등	16.6	58.4	251.8
敎育의 양	42.3	41.8	-1.2

註: 1) 敎育의 양 부분의 35.9~48.7의 범위에 속한 29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라. 敎育의 質 部門과의 比較

앞에서 우리나라의 敎育의 質 부분의 수준은 척도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敎育의 質에 관하여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OECD국가들과 타부분에 대한 수준을 비교했을 때 논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서거나 혹은 적어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6개의 OECD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다음의 <表 5-21>을 보면 앞에서 평균치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 예상이 그릇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敎育의 質 부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 국가들의 경우 남녀 평등도 및 소득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는 敎育의 質의 척도의 타당도(validity)가 높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점수의 변이가 크기는 하지만, 다른 변수들 예컨대 소득 수준과의 관계 등에서 예상된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척도의 타당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 수준의 OECD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敎育의 質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남녀 평등도 및 소득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 않은 정도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동일한 논리로 OECD와 비교할 때 그들보다 뒤떨어지는 정도에서는 덜하나 敎育의 양, 문화·정보, 보건·의료의 부문도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남녀 평등도와 소득의 개선이 敎育의 質의 개선 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表 5-21〉 韓國의 教育의 質 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8,507	142.3
보건·의료	48.3	69.1	43.1
경제활동의 양	41.6	39.2	-5.8
경제활동의 질	22.7	33.6	48.0
교육의 양	42.3	71.1	68.1
문화·정보	44.1	67.9	54.0
소득분배	51.1	31.0	-39.3
남녀평등	16.6	73.4	342.2
교육의 질	21.6	22.6	4.6

註: 1) 교육의 질 부분의 16.0~27.1의 범위에 속한 6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마. 文化·情報部門과의 比較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화·정보부문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타부문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의 1992년의 이 부문점수를 중심으로 상하위 0.3 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24개의 OECD사례들을 얻을 수 있었다. <表 5-22>에서는 이들 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값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화·정보부문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교육의 질, 남녀 평등도, 소득의 순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서와 동일한 논리로 교육의 질, 남녀평등도, 소득부문들이 문화·정보부문의 개선 보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 所得分配部門과의 比較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부문의 수준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하여 타

부문과 비교할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부문 점수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27개의 OECD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소득분배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남녀 평등도, 교육의 질, 소득, 보건·의료의 순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表 5-22〉 韓國의 文化·情報部門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2,326	61.4
보건·의료	48.3	65.8	36.2
경제활동의 양	41.6	23.4	-43.8
경제활동의 질	22.7	32.1	41.4
교육의 양	42.3	28.7	-32.2
교육의 질	21.6	53.8	149.1
소득분배	51.1	47.2	-7.6
남녀평등	16.6	38.8	133.7
문화·정보	44.1	44.3	0.5

註: 1) 문화·정보 부문의 36.4~51.6의 범위에 속한 24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表 5-23〉에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정도가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부문에서 음(-)의 값을 갖는, 즉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앞서는 부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한 부문의 수준이 높으면 타 부문의 수준도 함께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몇개의 부문만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높은 수준의 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여타 부문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앞서서와 동일한 논리로 남녀 평등도, 교육의 질, 소득, 보건·의료부문들이 소득분배부문의 개선 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表 5-23〉 韓國의 所得分配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6,154	111.5
보건·의료	48.3	77.8	61.1
경제활동의 양	41.6	43.5	4.6
경제활동의 질	22.7	32.2	41.9
교육의 양	42.3	42.0	-0.7
교육의 질	21.6	60.6	180.6
문화·정보	44.1	62.4	41.5
남녀평등	16.6	16.9	272.9
소득분배	51.1	51.1	0

註: 1) 소득형평부문의 43.7~58.3의 범위에 속한 27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사. 男女平等部門과의 比較

위의 분석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부문이 OECD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떤 부문 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表 5-24>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부문의 점수를 중심으로 상하위 0.3표준편차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추출된 10개의 OECD사례들의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1992년도의 값을 비교하고 있다.

예상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남녀평등부문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OECD국가들의 경우 교육의 질과 소득부문을 제외하고는 그들 나라들이 우리의 현상황 보다 크게 앞서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경제활동의 양의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가 그들 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OECD국가들의 경우 남녀의 평등도가 매우 낮았던 경우 삶의 질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의 수준도 우리의 현재의 수준과 유사했거나 혹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교육의 질과 소득부문은 남녀의 평등도 못지않게 개선되어야 할 부문임을 확인하게 된다.

〈表 5-24〉 韓國의 男女平等部門의 水準과 類似한
OECD事例의 比較

(단위: 달러, 점수)

부 문	한국	OECD ¹⁾	비중 ²⁾
1인당 국민소득	7,637	11,831	54.9
보건·의료	48.3	65.4	35.4
경제활동의 양	41.6	20.8	-50.0
경제활동의 질	22.7	22.7	0
교육의 양	42.3	26.3	-37.8
교육의 질	21.6	53.1	145.8
문화·정보	44.1	52.2	18.4
소득분배	51.1	47.9	-6.3
남녀평등	16.6	18.4	10.9

註: 1) 남녀 평등 부문의 8.1~25.0의 범위에 속한 10개 사례들의 평균치임.

2)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위 비율로 음의 값은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아. 部門間 相互對比의 綜合

본절에서는 각 부문별로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부문들 간의 균형 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문이 어느 정도 그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뒤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부문들간의 우선 순위를 매겨보고자 한다. 위에서 각 부문별로 파악한 우열의 우선 순위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表 5-25>와 같다. <表 5-25>는 앞의 분석에서 준거가 되는 각 부문별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최소한 5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부문들 중 격차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부문만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表 5-25〉 部門間の 改善の 優先順位 比較

준거 부문	개선 의 우선 순위 부문
국민소득	교육의 질 남녀평등
보건·의료	교육의 질 남녀평등
경제활동참여의 양	남녀평등 교육의 질 국민소득
교육의 양	남녀평등 교육의 질 국민소득
교육의 질	남녀평등 국민소득
문화·정보	교육의 질 남녀평등 국민소득
소득분배	남녀평등 교육의 질 국민소득 보건·의료
남녀평등	교육의 질

註: 각 준거부문 혹은 기준지표에서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과의 격차의 크기가 50% 이상인 부문 중에서 격차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함.

예컨대 준거부문이 소득인 경우 교육의 질 과 남녀평등부문이 과거 OECD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월등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두 부문에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해석을 각 부문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 부문에 대한 우선 순위의 배열을 도출할 수 있다.

남녀 평등, 교육의 질 > 소득, 보건·의료 > 문화·정보,
경제활동참여의 양 > 교육의 양, 소득분배

즉, 남녀평등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소득의 향상과 보건·의료의 개선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그다음으로는 문화·정보, 경제활동참여의 양 부문에, 그리고 교육의 양, 소득분배의 부문순으로 개선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부문들 상호간의 인과적 연결성 혹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유추이기는 하나, OECD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 우리의 좌표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第3節 結 論

앞장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수준을 전세계의 국가들간에 횡단면적으로 비교 하는 시도에 뒤이어, 본장에서는 OECD 선진산업국들과 대비해 종단면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전자의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위상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자의 시도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느 면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으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장의 분석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앞장의 분석에서 보다 더 많은 수의 변수와 차원을 고려하였다. 이는 삶의 다차원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시도이기는 하나, 또한 자료의 제약으로 삶의 중요한 영역들의 일부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삶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복합적도의 설정에 있어 적도의 타당도 면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장에서 발견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수준은 남녀평등 및 교육의 질에서 특히 낮아 그들의 1960년대 후반의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못미치며, 소득과 보건·의료의 부문은 그들의 1960년대 중후반의 수준에 도달하여 있고, 여타의 부문들은 그들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의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OECD의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문별 낙후도에 따른 개선의 우선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서 남녀평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개선의 노력이 가장 크게 집중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소득 및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개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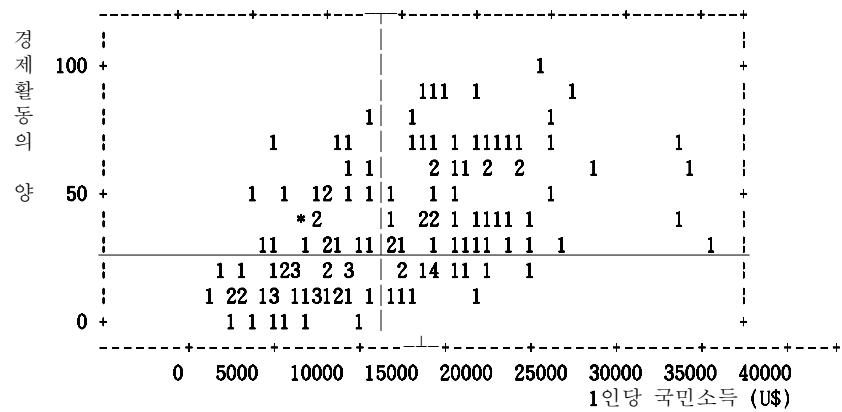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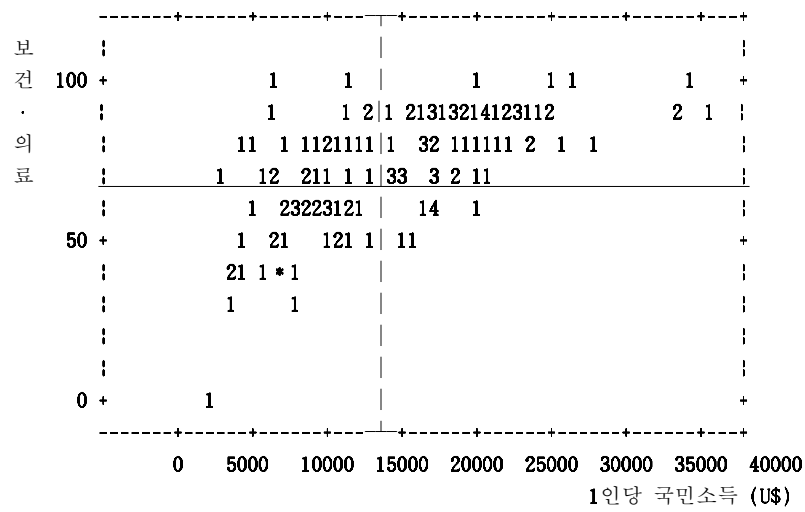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에 가장 유사

한 OECD 사례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부문
 주성분 점수를 근거로 하여 터키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과거 6개
 시점의 사례들에 대하여 다변량 분석방법의 하나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결과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과
 가장 흡사한 상황은 이탈리아의 1974년, 아이슬랜드의 1969년, 뉴질랜
 드의 1984년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이들 나
 라들의 그 당시 및 이후 전개 상황을 분석하므로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장의 분석은 정태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
 을 구성하는 부문 상호간의 파급효과 및 개선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등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음을 지적해야 하
 겠다. 아울러 후발국의 발전과정이 선진국의 경험을 동일하게 뒤쫓아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발국의 이익’의 측면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선진국과의 정태적인 비교가 같은 제한
 점임을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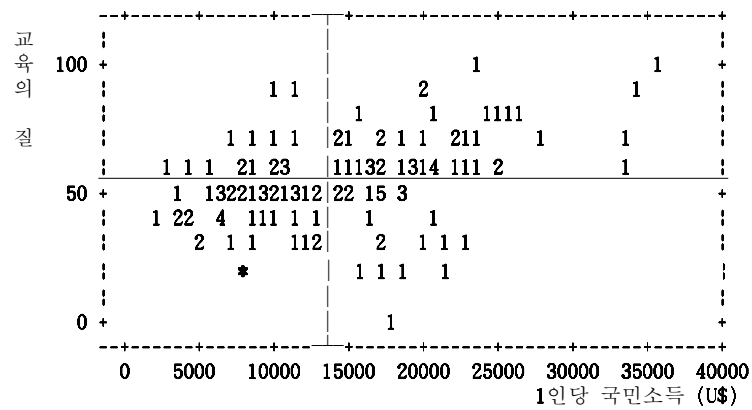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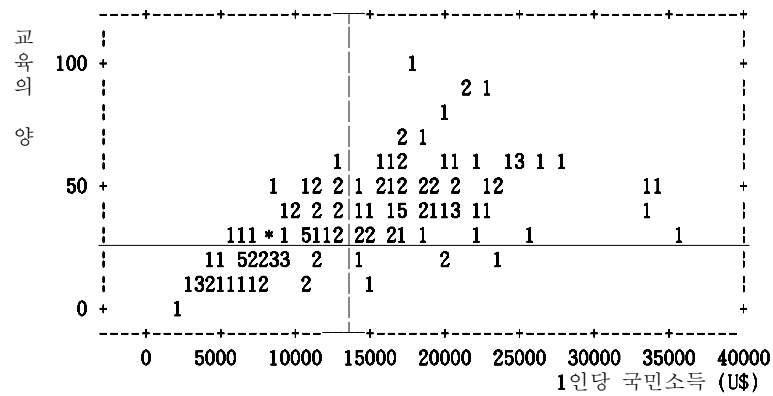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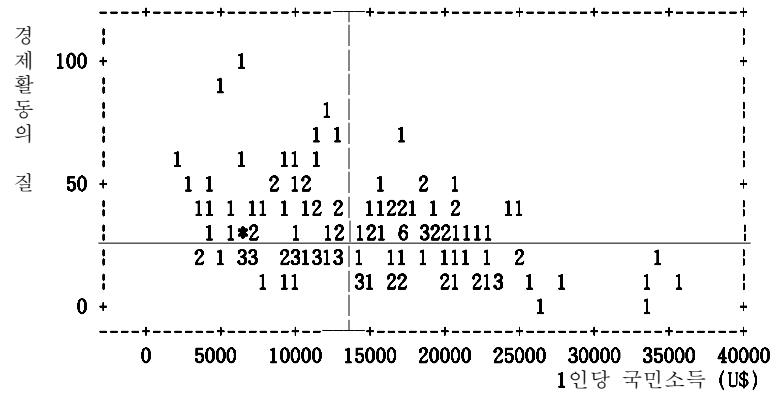
附 錄

[附圖 5-1] 1人當 國民所得과 個別部門과의 相關分布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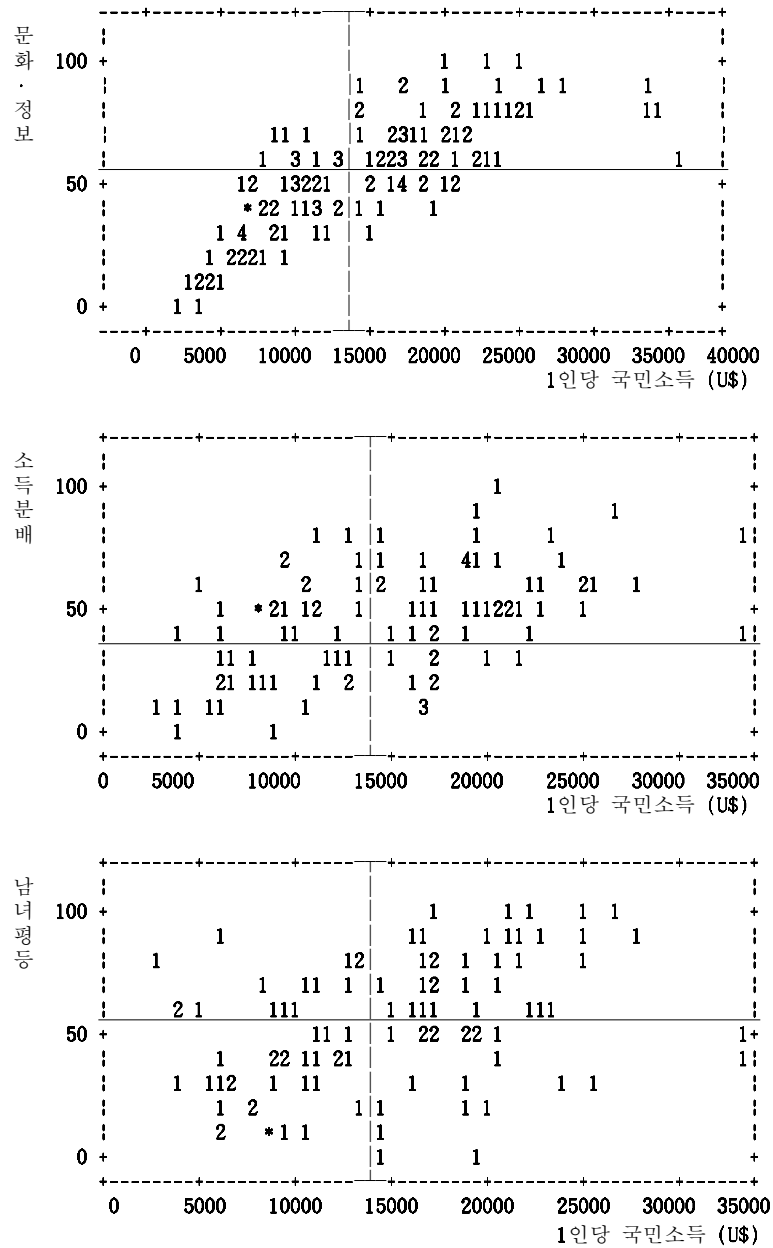


註: 1) 좌표상의 숫자는 빈도를, *는 우리나라 1992년의 위치를, 중형의 실선은 전체의 평균값을 의미함.

〔附圖 5-1〕 계속



[附圖 5-1] 계속



第6章 快適한 삶을 위한 環境政策

第1節 序 論

人類는 끊임없이 천연자원을 이용하며 경제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石器時代의 自然石, 鐵器時代의 鐵鑛石, 現在의 化石燃料에서 부터 地球表面의 水資源, 大氣 등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자연자원이 각 시대의 기술수준에 맞게 이용되면서 인류의 경제발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술발달이란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變遷史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천연자원들의 총체적인 개념이 環境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천연자원들이 調和를 이루는 均衡狀態였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발전 과정은 천연자원을 人爲的으로 사용한 후 변형된 형태로 다시 환경으로 되돌려 놓는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자원의 변형은 환경의 균형상태를 위협하게 된다. 천연자원과 환경오염은 경제시스템을 중간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인과 결과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위적인 천연자원의 변형은 환경의 균형상태를 항상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스스로 최초의 균형상태로 복원하려는 自淨能力을 갖고 있다. 自淨能力안에서의 환경자원의 이용은 환경의 균형상태를 해치지 않는다. 최근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환경의 自淨能力을 초과하는 환경자원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불균형상태를 의미한다. 自然環境資源을 이용하며 경제발전을 거듭해온 인류에게 환경문제로 말미암아 경제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현재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그 발단이 인류의 발달이 시작된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20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오랜 과거의 환경자원 이용은 환경의 自淨能力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현재는 그 밖에서 이루어져 환경의 균형상태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최근의 경제성장중 일부는 환경 파괴를 對價로 지불하고 얻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삶의 질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함께 개선되어 진다. 경제성장은 물질적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결과 우리의 삶은 양적으로 매우 윤택해 졌다. 그러나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준, 사회안정, 교육, 문화수준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균형상태에 있는 환경은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한다. 우리 인간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個體이기 때문에 균형상태에 있는 환경에 쉽게 調和될 수 있어 인간의 삶은 쾌적하게 된다. 그러나 균형상태가 깨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適應이 불가능하기도 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비경제적 요인 중 환경 질은 경제성장과 자칫 상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경제시스템은 자연환경시스템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부시스템(sub-system)이다. 따라서 물질적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경제시스템의 성장이 자연환경자원 남용을 전제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가설이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Essay on Population),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인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삶의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을 결정하는 경제성장과 환경 질간의 상충관계 가설은 환경파괴를 초래한 경제성장도, 경제성장을 희생시킨 환경

개선도 삶의 질을 절대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성장의 희생은 실업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환경악화보다 삶의 질을 더욱 직접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렇다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은 항상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은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실증하고 있다. 저개발국에서 사막화, 도시공해, 수질오염, 산림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성숙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의 환경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은 조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의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을 평가한 후 경제성장과 조화된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안해 본다.

第2節 環境汚染 現況

公害란 환경질의 악화로 인하여 인간생활에 불편이나 보건상의 피해를 주고 동식물에 장애를 주거나 재산상에 끼치는 피해를 의미한다. 환경질의 악화는 자연환경시스템내에 환경오염물질의 구성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시스템의 균형상태가 붕괴될 때 발생한다. 자연환경시스템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지구상의 하천 및 해양과 같은 수자원 그리고 육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 종류도 자연환경시스템 구성분류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大氣汚染

大氣汚染物質은 사람의 健康上 또는 財産上에 害를 미치거나 動植

物의 生育環境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물질로서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47종의 대기오염물질과 카드뮴 등의 16종의 대기유해물질을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 대기관리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암모니아 등 16종의 가스상 오염물질과 먼지, 카드뮴 화합물 등 9종의 입자상 물질 그리고 악취 등이 있다. 이중 오늘날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에 대한 피해 또한 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황산가스(SO_2), 이산화질소(N_2O),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와 부유먼지(TSP), 오존(O_3), 납(Pb) 등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이외에 동식물에 피해를 직접 끼치지 않지만 최근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地球溫暖化 현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도 대기환경문제에서 제외할 수 없는 관리대상이다.

〈表 6-1〉 年度別 大氣汚染物質 排出量

(단위: 천톤/년)

	계	아황산 가스	이산화 질소	먼 지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1990	5,169	1,610	926	420	1,991	220
1991	4,869	1,597	878	431	1,759	199
1992	4,867	1,613	1,067	392	1,630	164
1993	4,583	1,571	1,186	389	1,290	145
1994	4,526	1,602	1,191	429	1,156	146

資料: 환경처, 『大氣汚染物質排出量』, 1995.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사람을 비롯한 生物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일단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특정 다수의 人命, 財産上 被害를 誘發한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대형 大氣汚染事故는 1952년 12월 15일부터 1952년 12월 19일 사이의 5일간 런던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런던 스모그는 그 被害가 처음에는 완만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처음 3일간에 過剩死亡者가 3,000명이 되었고 그 후에도 異常死亡者가 계속 속출했으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8,000명의 過剩死亡者를 낸 大慘死로 기록되고 있다. 이 같은 慘死의 주요 유해물질은 아황산가스와 浮遊粉塵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스모그 발생전인 11월에는 0.1ppm이었으나 12월 4일에는 0.375ppm, 이어서 5일, 6일, 7일까지 계속 상승하여 최고 1.3ppm의 高濃度現像을 나타냈으며 粉塵濃度도 3일간에 걸쳐 최고 4.5 mg/m³의 높은 濃度를 기록했었다.

런던 스모그 사건 이외에도 1930년 12월 벨기에의 공장지대 뮤즈곡(Meuse Valley)에서 급성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평소의 10배인 60명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948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공장지대 도노라(Donora)에서는 6일간의 스모그 발생으로 18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고통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낙동강 오염사고, 남해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수질오염사고는 기록된 바 있으나 사망률과 발병률을 높이는 대기오염사고는 실제로 보고된 바는 아직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의 각종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가 10여개 발표되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오염도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大氣汚染物質과 發病率 혹은 死亡率간에 有意的인 相關關係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는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수,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일산화탄소는 호흡기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윤순창 외, 1992).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더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여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인체 혹은 동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끼치지 않지만,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대기중 기온의 상승을 초래하여 해수면 상승, 내륙의 사막화, 생태계 균형파괴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많은 大氣科學者들은 지금과 같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서기 2025~2050년경의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1.5~4.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되어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상태에 이르면, 海岸都市는 물속으로 잠기고 온대지방은 열대지방으로 변하는 등 전대미문의 災殃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재앙은 후세대의 삶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表 6-2〉 大氣汚染物質의 弊害

대기오염물질	증 상
부유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폐기증,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염, 천식, 폐기증, 폐쇄성 질환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중추신경장애, 호흡기장애 시각 장애, 폐기능 저하

資料: 윤순창 외, 『대기환경 기준설정 및 대기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1992.

가. 亞黃酸가스

아황산가스는 석탄과 석유제품과 같은 化石燃料에 含有되어 있는 黃分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국내에서 使用되고 있는 무연탄과 유연탄은 각각 대략 0.4~0.7%, 0.3~1.0%의 황분을 함유하고 있다. 石油製品 중에는 輕油和 重油에 상대적으로 황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경유와 중유에는 각각 0.4~1.0%, 0.3~4.0%의 황분을 함유하고 있다. 경유의 경우 1981년까지는 전량 1.0% 제품을 소

비하고 있었으나 0.4% 경유의 생산확대로 그 比重이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 이르러서는 0.4% 경유의 소비비중이 86%를 上廻하고 있다. BC유의 경우도 2.5%이하 소비비중이 1992년의 경우 약 71%를 上廻하고 있어 低黃 石油製品의 소비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趨勢다.

우리나라에서는 직할시 이상 6개 도시와 대규모 공장 밀집지역인 울산지역에서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소득증가, 급속한 도시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발달, 자동차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로 인한 大氣汚染을 防止하기 위해 燃料使用規制, 排出量基準 強化 등과 같은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어온 결과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表 6-3>은 아황산가스 연평균 농도 추이를 도시별로 보이고 있는데 대구지방과 울산지방의 오염도가 타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6-3> 主要都市 亞黃酸가스 汚染度 推移

(단위: pp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81	0.086	0.061	0.046	0.043	0.021	0.029	0.057
1982	0.057	0.065	0.039	0.033	0.024	0.030	0.039
1983	0.051	0.051	0.046	0.037	0.029	0.028	0.033
1984	0.066	0.050	0.040	0.056	0.026	0.030	0.024
1985	0.056	0.047	0.039	0.052	0.020	0.033	0.030
1986	0.054	0.042	0.043	0.053	0.020	0.027	0.032
1987	0.056	0.039	0.055	0.056	0.014	0.026	0.027
1988	0.062	0.044	0.052	0.056	0.019	0.034	0.028
1989	0.056	0.047	0.048	0.065	0.021	0.035	0.029
1990	0.051	0.039	0.041	0.044	0.017	0.029	0.031
1991	0.043	0.038	0.041	0.041	0.017	0.028	0.038
1992	0.035	0.033	0.040	0.036	0.017	0.022	0.031
1993	0.023	0.028	0.035	0.021	0.014	0.022	0.032
1994	0.019	0.023	0.038	0.022	0.013	0.021	0.030

資料: 환경부, 『大氣汚染度現況』, 1995.

서울지방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低黃油 공급 확대(BC油: 4 →

1.6%(1981), 1.6 → 1.0%(1993)), 固體燃料 使用規制, LNG 使用義務化 등의 강력한 연료정책의 추진에 따라 1981년 0.086ppm에서 1994년 0.019ppm으로 대폭 개선되어 WHO기준뿐 아니라 여러 선진국의 大氣質 規制値를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表 6-4〉 各國의 SO₂ 基準値 比較

(단위: ppm)

	1시간	24시간	1년	비 고
WHO	0.13	-	-	0.19(10분)
EC 기준치 (limit)	spm > 40 /m ³ 0.03 spm < 40 /m ³ 0.046 spm > 60 /m ³ 0.05 spm < 60 /m ³ 0.07 spm > 150 /m ³ 0.96 spm < 150 /m ³ 0.13			일평균치의 1년 중앙값 겨울철 일평균치의 1년 98%값
EC 권고치 (guide)	-	0.038~0.06	0.015~0.023	연평균치
한 국	-	0.15	0.05	
미 국	-	0.14	0.03	0.5(3시간)
일 본	0.10	0.04	-	
대 만	0.25	0.1	0.1	
말레이시아	0.13	-	-	0.19(10분), 0.04(3시간)
호 주	-	-	0.02	
뉴질랜드	-	0.05	-	0.02(3개월)
캐나다	0.17 0.34	0.06 0.11 0.31	0.01 0.02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資料: 윤순창 외, 『대기환경 기준설정 및 대기환경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1992.

나. 먼지(TSP) 汚染度

먼지는 대기중의 亞黃酸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呼吸器疾患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대기중 150 μ g/m³의 농도가 존재할 때 視界距離를 8km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먼지오염도를 보면 전도시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서울의 경우 먼지

오염도는 1986년도 $183\mu\text{g}/\text{m}^3$ 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1990년도에는 $150\mu\text{g}/\text{m}^3$, 그리고 1994년에는 $78\mu\text{g}/\text{m}^3$ 으로 감소하여 연간 환경기준치인 $150\mu\text{g}/\text{m}^3$ 이하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에서 발생하는 黃砂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 중에는 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2~4 배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계절적 차이를 보이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表 6-5〉 主要都市의 年度別 먼지汚染度

(단위: $\mu\text{g}/\text{m}^3$)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서울	183	175	179	149	150	121	97	88	78
부산	194	197	214	178	140	134	113	96	97
대구	140	146	155	128	134	109	119	105	93
인천	153	163	162	152	170	144	103	100	93
광주	133	105	100	116	109	100	104	75	64
대전	-	175	178	119	115	68	52	53	58
울산	172	190	238	165	122	104	102	98	99

資料: 환경부, 『大氣汚染現況』, 1995.

다. 其他 主要 大氣汚染物質 汚染度

전국 주요도시의 二酸化窒素, 오존 및 一酸化炭素 汚染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1994년에는 <表 6-6>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우리나라 환경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라. 酸性雨 (Acid Rain)

酸性雨라 함은 보통 pH 5.6 이하의 酸性度を 갖는 降雨를 말하며 강우중의 산성도는 大氣汚染度(특히 亞黃酸가스 汚染度)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4년도 주요 도시의 우중 산성도를 보면 부산이 pH 5.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울산은 pH 5.4로 약산성을 띤 산성비가 내

렸으나, 광주, 대구 등의 도시에서는 pH 5.6 이상의 정상적인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表 6-6〉 其他 主要 大氣汚染物質 汚染度(1994)

(단위: ppm)

오염물질 도 시	NO ₂		O ₃		CO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서 울	0.032	0.032	0.013	0.014	1.5	1.5
부 산	0.025	0.024	0.014	0.014	1.3	1.6
대 구	0.024	0.023	0.013	0.015	1.2	1.1
인 천	0.030	0.029	0.012	0.014	1.8	1.6
광 주	0.017	0.022	0.015	0.015	1.3	1.2
대 전	0.014	0.019	0.011	0.014	1.2	1.4
울 산	0.026	0.026	0.014	0.014	1.2	1.1
환경기준	0.05/년		0.1/시간		9/8시간	

資料: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95.

〈表 6-7〉 主要都市의 年度別 降雨中酸度

(단위: $\mu\text{g}/\text{m}^3$)

연도 도시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서 울	5.3	5.1	5.7	5.6	5.0	5.4	5.3	5.4	5.4
부 산	5.2	5.4	5.2	5.2	5.2	5.1	5.2	5.3	5.2
대 구	5.4	5.3	5.6	5.3	5.7	5.9	5.6	5.5	5.6
인 천	5.5	5.2	6.0	5.7	5.9	6.1	6.2	5.8	6.0
광 주	6.1	5.8	5.7	5.7	5.5	5.5	5.7	5.8	5.8
대 전	5.4	5.5	5.7	5.8	5.4	5.4	5.7	5.5	5.7
울 산	5.2	4.9	5.1	5.6	5.6	5.6	5.6	5.6	5.4

資料: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95.

2. 水質汚染

물은 식수로서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여가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환경자원이다. 인구증가와 산

업의 발전은 생활폐수와 산업폐수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농축업의 비료와 농약 사용 증가는 농축폐수를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물질은 크게 유기성 오염물질과 화학성 오염물질로 구분된다.

유기성 오염물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유기물질을 영양원으로 섭취하는 수중생물체의 성장을 자극하여 富營養化(eutrophication) 현상을 일으켜 수중 용존산소를 감소시키고, 물을 흐리게 하거나 색깔을 변화시켜 상수로서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물의 이용에 장애를 준다. 바다에서의 富營養化는 赤潮現象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는 등 어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수중 산소 소비량이 대기중 산소가 물 속에 녹아들어 가는 양보다 많으면 산소가 없는 상태, 즉 혐기성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합성세제, 페놀류 등 화학성 오염물질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 수중 생물체 내에 독성으로 잔류한다. 오염된 물이나 생물체에 잔류된 독성이 사람 체내에 축적될 경우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수질관리 기준으로 수역별, 항목별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수, 해역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소이온농도(pH), 산소용존량(DO),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카드뮴(Cd), 수은(Hg)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지수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물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보통 4~5ppm 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권역으로 나누어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한강수계는 주요 오염지천의 꾸준한 개선사업 등에 힘입어 침전여과와 같은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가능한 2급 상수원수

로 적합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는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 합류이후 고령과 남지지점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수계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는 상수원수 2급수 이내로 양호한 수질이나 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이후 하류까지는 상수원수 2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4대 하천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은 영산강 수계이다. 특히 1994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는 하천수 5등급(BOD 10mg/l)에도 못 미치는 16.2mg/l로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991년의 배출량을 보면 생활하수는 하루에 약 1천만톤으로 총발생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5%이고, 산업폐수는 약 8백10만톤으로 44%를 차지하며 축산폐수는 0.5%를 차지하고 있다.

〈表 6-8〉 우리나라 4大 河川 水質 現況

		(단위: mg/l)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한강	의암	1.1	1.3	1.6	1.4	1.5	1.5
	충주	1.3	1.1	0.9	1.1	1.0	0.9
	팔당	1.4	1.0	1.1	1.1	1.2	1.2
	노량진	4.7	3.4	3.9	3.6	3.1	3.3
	가양	11.4	4.7	4.8	4.3	4.0	4.3
낙동강	안동	1.3	1.0	1.1	1.1	0.9	0.9
	고령	8.5	5.4	5.8	5.4	4.5	5.9
	남지	2.8	3.2	4.3	3.8	3.8	5.4
	물금	3.7	3.0	4.0	3.3	3.4	4.6
	구포	4.2	3.3	3.7	3.5	3.9	4.6
금강	옥천	1.4	1.5	1.6	1.4	1.4	1.4
	대청	1.1	1.7	1.6	1.6	1.6	1.5
	청원	3.2	3.1	3.1	2.9	2.7	3.3
	공주	2.6	3.2	3.1	3.3	3.1	3.7
	부여	2.5	3.1	3.0	3.2	3.1	3.7
영산강	담양	1.3	1.2	1.1	1.4	1.4	2.0
	광주	3.0	3.4	2.8	3.4	2.6	3.3
	나주	5.2	6.7	5.6	5.6	4.5	7.3
	무안	1.9	1.2	1.5	2.1	1.5	1.9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1995.

3. 廢棄物

폐기물이란 생산, 소비과정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지면서 자연환경으로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일반폐기물은 분뇨, 생활쓰레기, 축산분뇨 등을 말하며 산업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진, 잔폐물, 폐유, 폐산과 폐알카리 및 폐합성수지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쓰레기 배출량 증대로 인한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문제 및 부지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이다.

〈表 6-9〉 廢棄物 發生 現況 比較

폐기물양 국 가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총발생량 (천톤)	1인당 발생량 (Kg/인)	총발생량 (천톤)	GDP ²⁾ 당발생량 (Kg/1,000달러)
한국 ¹⁾	21,213	482	32,460	-
OECD	425,000	500	1,500,000	100
캐나다	16,000	601	-	-
미국	177,500	710	760,000	137
일본	50,441	408	132,304	59
프랑스	30,220	533	50,000	49
독일	27,958	351	81,906	61
이탈리아	20,033	347	34,710	36
영국	20,000	348	56,000	61

註: 1) 한국통계는 1994년 기준이고 나머지 국가 통계는 1990년대초 통계임.

2) GDP는 1985년 불변가격 기준임.

資料: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1994.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1990년 현재 폐기물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일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83,962톤, 산업폐기물은 61,412톤으로 전체 폐기물량은 145,374톤으로 연간 5천3백만톤에 달한다. 이는 연간 2백만평 이상의 쓰레기 매립장을 필요로 하

는 양이다. 인구 1인당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990년 482Kg인데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1990년대초 일본의 408Kg, 독일의 351Kg, 영국의 348Kg과 비교하여 높은 쓰레기 발생량이다.

재활용의 경우 1992년 29.8%, 1993년, 1994년 각각 39.5%, 4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정책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년을 기준으로 1일 총발생량 147,049톤 중에서 처리량은 146,017톤으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 비율이 1992년 64.5%에서 1994년 52.1%로 대폭 줄어들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각과 재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매립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선진국들의 폐기물 처리구조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表 6-10〉 廢棄物の 處理方法別 現況

(단위: 톤/일)

	계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1992	144,535 (100.0)	93,272 (64.5)	4,746 (3.3)	43,142 (29.8)	3,375 (2.3)
1993	141,383 (100.0)	76,449 (54.1)	5,822 (4.1)	55,844 (39.5)	3,218 (2.3)
1994	147,049 (100.0)	76,565 (52.1)	6,512 (4.4)	62,940 (42.8)	1,032 (0.1)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1995.

第3節 環境汚染 増加의 社會經濟的 要因

환경오염은 經濟活動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副作用이다. 환경오염은 경제활동 과정에 투입된 천연자원이 사용된 후 폐기물의 형태로 자연환경시스템에 배출될 때 발생된다. 따라서 특별한 환경오염대책의 수립 없이는 경제활동 증가는 곧 환경오염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총체적인 경제활동 증가는 人口増加와 所得増加로 나타난다. 人口増加와 所得増加는 大量生産, 大量消費로 이어지는 經濟活動 増加를 자극하게 된다. 또한 경제활동의 증가가 어떤 産業에 의해 주도되는가가 환경오염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환경부하가 높은 製造業 중심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비스 중심의 그것보다 환경오염을 더욱 초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화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환경오염 문제는 地域的(local) 環境問題이다.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와 농촌지역 대기오염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환경오염문제는 주로 도시 환경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화 또한 환경오염 증가의 중요 요인이 된다.

1. 人口増加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 2,500만명에서 1990년에는 4,287만명으로 약 1.7배나 증가하였고 인구밀도도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으나, 1970년대 가족계획에 힘입어 1990년대 들어와 인구증가율이 1.0% 이하로 감소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모범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表 6-11〉 人口指標 推移

(단위: 1,000명,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총인구	32,241	35,281	38,125	40,806	42,869	43,268
(증가율)	(2.4)	(1.8)	(1.6)	(1.4)	(1.0)	(0.9)
생산연령인구	18,632	21,666	25,174	28,501	31,792	32,321
(점유율)	(57.8)	(61.4)	(66.0)	(69.9)	(74.2)	(74.7)
경제활동인구	10,062	12,192	14,431	15,592	18,487	19,012
(점유율)	(31.2)	(34.5)	(37.9)	(38.2)	(43.1)	(43.9)
노령인구	991	1,217	1,456	1,742	2,144	2,212
(점유율)	(3.1)	(3.4)	(3.8)	(4.3)	(5.0)	(5.1)

註: 1991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다른 연도는 5년간 평균 증가율임.

생산연령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노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2.

1970년대 이후 5년마다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1971~75년 기간에는 1.8%, 1976~80년 기간에는 1.6%, 1981~85년 기간에는 1.4%, 1986~90년 기간에는 1.0%로 계속해서 인구증가율은 하향 추세에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의 추이는 1970년 1006만 2천명, 1980년 1443만 1천명, 1990년 1848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총인구 중 15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57.8%에서 1990년 74.2%로 크게 증가하였다.

2. 所得増加

소득증가는 1인당 소비증가의 원인이 된다. 특히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소비 증가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높은 소득증가율과 더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1993년까지 총에너지소비와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8.5%, 7.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6-12〉 所得増加와 에너지消費 増加

	국내총생산 (십억원)	인구 (천명)	1인당 GDP (천원)	총1차에너지 (천TOE)	에너지소비 (1인당 TOE)
1970	2,785	32,241	863	19,678	0.61
1975	10,302	35,282	291	27,553	0.78
1980	38,041	38,124	997	43,911	1.15
1985	82,062	40,806	2,011	56,296	1.38
1990	179,539	42,869	4,188	93,192	2.17
1991	215,734	43,268	4,986	103,622	2.39
1992	240,392	43,663	5,505	116,010	2.66
1993	265,548	44,056	6,027	126,879	2.88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3. 都市化

産業의 密集化와 노동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공단지역과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 6대도시의 人口集中率は 1960년 全人口의 21.0%인 약 524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는 2066만 2천명으로 全人口의 48.2%가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환경오염문제가 어디보다도 심각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은 1960년 20.8%에서 1990년 43.3%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巨大都市化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도시 및 공업단지의 대기오염문제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表 6-13〉 人口의 大都市 集中率 推移

(단위: %)

	1960	1970	1980	1990
6대도시	21.0	31.9	41.5	48.2
서울	9.8	17.6	22.3	24.8
부산	4.7	6.0	8.4	8.9
대구	2.7	3.4	4.3	5.2
인천	1.6	2.0	2.9	4.2
광주	1.3	1.6	1.9	2.7
대전	0.9	1.3	1.7	2.4
경기도	11.0	10.7	13.2	18.6
수도권	20.8	28.2	35.5	43.4
전국(천명)	24,989	31,434	37,436	42,869

資料: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各년도.

에너지經濟研究院, 『에너지통계연보』, 各년도.

4. 産業化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2차, 3차 산업 위주로 발달하였고 더구나 제조업의 구조가 경공업보다는 에너지다소비형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表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980년 14.55%에서 1994년 9.84%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광공업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25.53%에서 1994년에는 32.2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에너지다소비업인 수송부문 등의 성장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1980년 자동차 대수는 528천대에서 1994년에는 약 7,402대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表 6-14> 産業構造 推移

(단위: %)

	1980	1985	1990	1994
산업별 비중				
농림수산업	14.55	14.12	11.60	9.84
광공업	30.90	30.27	29.41	28.77
서비스업	54.55	55.56	58.99	61.39
광공업중 중화학공업 비율 ¹⁾	25.53	28.91	30.94	32.26
자동차 대수(천대)	528	1,113	3,394	7,402

註: 1) 중화학공업은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일반기계를 포함.

5. 環境汚染 低減努力 未洽

인구증가, 소득증가,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변화는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을 증대시켜 에너지사용과 관련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급증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상당부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증가는 사실상 사회변화에 의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아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된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環境豫算 규모를 살펴보면 GNP 대비 약 0.25%의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준도 최근의 환경예산 확충

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환경예산은 GNP 대비 0.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한나라의 환경지출 규모가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어렵다. 적정 환경지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현황,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환경용량까지도 파악되어야 하지만 환경용량을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적정 환경지출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택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이 국가간 비교다.

〈表 6-15〉 環境部門 豫算의 年度別 變化

(단위: 억원)

	국민총생산 (A)	정부예산 (B)	환경예산 (C)	GNP 대비 환경예산 (%)	정부예산 대비 환경예산 (%)
1984	700,839	110,721	640	0.091	0.310
1985	780,884	124,064	877	0.112	0.339
1986	905,987	137,965	1,017	0.112	0.314
1987	1,060,244	157,945	1,658	0.156	0.425
1988	1,262,305	180,250	2,160	0.171	0.429
1989	1,417,944	216,531	1,806	0.127	0.298
1990	1,714,881	274,367	2,524	0.147	0.329
1991	2,060,265	313,823	4,963	0.241	0.776
1992	2,267,650	332,000	5,706	0.252	0.812

資料: 환경부, 『환경연감』, 각년도.

우리나라는 OECD 진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규모 통계가 비교적 자세하고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OECD 주요국들의 환경지출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환경지출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환경지출 규모는 상수도 및 자연보호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과약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은 오염의 방지, 감소 및 제거(PAC,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를 목적으로 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을 환경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지출을 OECD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한다.

<表 6-16>과 <表 6-17>은 각각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공공부문의 환경지출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表 6-16>과 <表 6-17>을 비교해 보면 다소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상대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비중은 일본이 1.0%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1992년에서 1994년까지의 평균치와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간 환경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크기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인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 현시점의 지출규모 비교를 통해 환경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환경지출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점에서의 비교보다는 비교 상대국들의 시계열자료로부터 지금의 우리 여건과 비슷한 시점을 찾아 환경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1인당 GDP수준이 7,000~8,000달러 시대인 1978~79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비중은 각각 1.5~6%로 현재 우리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이상의 국가간 비교 결과,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깨끗한 환경 질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초시설 역시 낙후된 상태여서 우리나라 환경지출 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表 6-16〉 OECD國家들의 公共部門 GDP 對比 PAC 支出

	1985	1987	1988	1989	1990
캐나다	0.7	0.7	0.7	0.8	0.9
미국	0.6	0.6	0.5	1.6	0.6
일본	0.9	1.0	1.0	1.0	1.0
오스트리아	1.0	1.0	1.0	-	-
덴마크	0.7	0.8	0.9	0.9	1.0
프랑스	0.6	0.7	0.7	0.7	0.5
독일	0.7	0.8	0.8	0.8	0.8
이탈리아	-	-	0.2	0.2	-
화란	1.0	0.9	-	0.9	-
포르투갈	-	-	0.5	0.4	-
스페인	-	0.5	0.5	0.6	0.6
스웨덴	-	0.7	-	-	-
스위스	0.7	-	0.7	0.8	-
영국	0.7	-	-	-	0.4

資料: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Environmental Monographs*, No.75, 1993.

〈表 6-17〉 公共部門의 環境支出純計 規模(OECD 基準)

(단위: 백만원)

	1992	1993	1994
중앙정부	149,079	104,839	281,492
지방자치단체	2,118,761	2,480,734	2,893,696
총지출	2,267,840	2,585,573	3,175,188
GDP(10억원)	240,392.2	267,146.0	305,077.7
총지출/GDP(%)	0.94	0.97	1.04

資料: 김홍규·임종수, 『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 환경기술개발원, 1995.

第 4 節 環境政策 現況 및 計劃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시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으로 5년 단위의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시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表 6-18>에 정리된 각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기준 설정,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表 6-18> 1990年代 環境政策方向

정책방향	내 용
경제사회적 여건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궤도 진입 경제정의 실현으로 사회적 형평의 제고 지역균형 개발로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
환경행정적 여건	산업구조의 고도화, 토지이용의 확대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 소비생활의 다양화
환경정책 방향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시책을 추진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국민의 환경권 보장

1. 環境基準 設定

環境基準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다.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의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이외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그러나 世界保健機構(WHO)는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절대적 의미에서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국은 환경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環境基準을 전국적으로 설정하여 大氣의 質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대기 환경기준의 비교는 表 6-22 참조). 한편, 수질 기준으로 BOD등 17개 항목을 설정하여 하천은 5개 등급으로, 해역은 3개 등급으로 차등하여

관리하고 있다.

2. 汚染物質 排出量 低減 對策

특정지역의 오염도는 氣象條件, 地形上 特性과 같은 自然條件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다. 자연조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요인이므로 환경질의 개선은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오염물질 배출저감 대책에는 단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배출된 오염물질을 재처리하여 자연환경시스템으로의 방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배출가스량 저감, 環境親和的 産業構造로의 개편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아직도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해 있고 산업정책 수립시 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제환경 통합 정책 수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 大氣汚染物質 排出 低減 對策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은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반면 배출저감기술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아황산가스 배출저감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도시 대기공해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감축기술개발 등과 같은 長期的 대책 등이 병행되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런던 스모그 사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오염물질이다. 아황산가스 배출저감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저감노력에 따라 개선여지가 큰 오염물질이다. 대부분의 구미선진국은

이미 아황산가스 오염문제는 거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오염문제는 개도국들의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6-19〉 亞黃酸가스 低減對策

대 책	세 부 내 용
저황연료유 공급확대	수도권 및 주요도시에서 1.0% 이하 BC유, 0.2% 이하 경유 사용 의무화
청정연료 (LNG, LPG) 사용의무화	수도권 지역 평균 전용 면적 25평 이상, 중앙집중 난방식 아파트, 서울지역 0.2톤 이상 보일러, 부산, 대구지역 0.5톤 이상 보일러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난방 시스템의 확대	신규택지개발시 지역난방 확대 보급, 기존지역 쓰레기 소각시설의 폐열 및 산업체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 추진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지역내 고체연료 사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굴뚝높이 제한, 비산먼지 방지시설 및 오염물질 측정기 부착 의무화
저황연료공급	공급대상지역에 황함유 0.75% 일반연탄 대신 0.5% 이하 저황연탄 공급
저황유사용업소 지도, 점검	특정지역내 특정시설이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면 사용금지, 제한의 조치 명령

資料: 박주현,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및 비용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大氣中の 亞黃酸ガスを 줄이는 방법으로는 연료 중에 포함된 황분은 적은 低黃燃料나 황분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淸淨燃料로 轉換하는 방법과 高黃燃料 연소 후 발생하는 배출가스에서 脫黃하는 방법(排煙脫黃)이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황산가스 배출 저감 대책은 고유황 연료사용을 억제하고 저유황연료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높은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아황산가스 배출의 주 원인인 연탄과 같은 고체연료사용을 금하거나 저황탄 사용을 의무하고 있고, 경유와 BC유의 황함유량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대형보일러 시설부터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大都市의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表 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大氣汚染物質의 總排出量 중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각각 83.1%, 96.6%, 5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表 6-20> 大氣汚染物質別 自動車 排出가스量(1994)

(단위: 톤, %)

구 분	CO	HC	NO _x	먼지	SO ₂
배출량					
전국	1,156	146	1,192	429	1,603
서울	255	29.4	113	17	40
수송부문					
전국	961(83.1)	141(96.6)	674(56.5)	100(23.3)	275(17.2)
서울	210(82.4)	29(98.6)	93(82.3)	14(82.4)	5(12.5)

資料: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4)』, 1995.

<表 6-21> 自動車 排出가스 低減對策

대 책	세 부 내 용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1998년부터 시내버스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9.0g/kwh, 0.5g/kwh로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1987년 삼원촉매장치 부착 저공해자동차 보급 이래 1994년 말 현재 저공해자동차 보급률이 99%에 도달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 추진	LPG 및 LNG차량으로 전환 유도
고출력버스의 보급확대	230마력 고출력 시내버스 보급확대로 1994년말 현재 고출력 시내버스 비율이 53%로 확대
연료여과장치 개발추진	G-7사업으로 추진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 사용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을 1996년 이후 제작 자동차에 대해서는 35% 이하로 강화
배출가스 단속 강화	지방환경청 및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단속 주체를 1994년 6월 이후 시·도로 일원화 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

<表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크게 技術的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경유차량의 低公害燃料 차량으로의 전환, 연비개선, 저공해차량 개발 등과 같은 기술개발과 기존 차량의 유지관리를 제고키 위한 단속행정 등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중이나 아황산가스 배출저감 대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과 같이 명령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비슷한 실정이다.

나. 水質汚染物質 排出低減 對策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호법에서 28개 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text{m}^3/\text{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text{m}^3/\text{일}$ 이상의 폐수 대량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濃度規制方式과 量的規制方式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의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表 6-22〉 大氣環境基準

항 목		한 국 기 준	WHO	미 국	일 본
아황산가스(SO ₂)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0.25ppm 이하	10분 평균치 0.19ppm	-	-
일산화탄소(CO) (시행 1995. 1. 1.)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25ppm 8시간 9ppm	1시간 35ppm 8시간 9ppm	1시간 20ppm 8시간 10ppm
이산화질소(NO ₂)		•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	-	-
먼지	총먼지(TSP)	• 연간 평균치 150μg/m³이하 • 24시간 평균치 300μg/m³이하	-	24시간 150 μ g/m ³ 1년 50 μ g/m ³	1시간 200 μ g/m ³ 24시간 100 μ g/m ³
	미세먼지(PM-10) (시행 1995. 1. 1.)	• 연간 평균치 80μg/m³이하 • 24시간 평균치 150μg/m³이하	-	-	-
오존(O ₃)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1시간 0.075~0.10ppm 8시간 0.05~0.06ppm	-	-
납(Pb)		• 3개월 평균치 1.5μg/m³이하	-	-	-

다. 廢棄物 發生 低減 對策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은 배출자 처리비용부담원칙 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감량화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수요확대와 관련사업육성으로 재활용촉진 기반을 조성하여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2001년에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1.39Kg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 쓰레기 처리비의 자기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2001년까지 100%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의 대상품목, 부과요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음식쓰레기 퇴비화 등을 통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등 감량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폐기물처리 방법도 지금까지 주로 의존하였던 단순매립처리방식을 탈피, 위생매립지를 확보하여 2001년까지 매립률을 45%까지 줄여 나가고, 기술수준 등 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2001년까지 소각처리율을 25%까지 높여 매립지 부지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表 6-23〉 廢棄物處理 現況 및 中長期 計劃

(단위: %)

	1992	1997	2001
1인당 쓰레기 발생량(Kg)	1.54	1.49	1.39
재활용	7.9	20.0	30.0
소각	1.5	14.2	25.0
매립	89.2	65.8	45.0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1995.

第5節 環境政策의 方向

지금까지 논의한 環境汚染 低減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 대기환경질과 5대 하천의 수질은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결코 만족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

<表 6-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스모그 사고를 경험한 런던보다도 훨씬 높으며 미국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L.A., 뉴욕, 일본의 東京보다도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의 부유먼지, 질소산화물의 농도도 세계 주요도시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오존만이 동경이나 뉴욕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오존농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주요도시와 더불어 오존문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6-24> 主要 世界都市의 大氣 汚染度

국 가	도 시	SO ₂ (ppm)	TSP ($\mu\text{g}/\text{m}^3$)	O ₃ (ppm)	NO ₂ (ppm)	비 고
미국(1992)	L.A.	0.006	49	0.29	0.051	TSP는 10 μm 미만, O ₃ 는 시간최고치임.
	뉴욕	0.019	28	0.12	0.036	
	시카고	0.009	42	0.13	0.03	
영국(1990)	런던	0.017	-	-	-	
프랑스(1990)	파리	0.01	-	-	-	
일본(1992)	동경	0.009	57	0.021	0.032	TSP는 10 μm 미만
캐나다(1989)	오타와	0.006	61	0.010	-	TSP는 10 μm 미만
대만(1990)	타이페이	0.033	77	0.007	-	
한국(1990)	서울	0.023	88	0.013	0.032	
	부산	0.028	96	0.014	0.025	
	대구	0.035	105	0.013	0.024	

資料: 환경부 대기정책과 내부자료.

대기오염 정도를 결정하는 自然的 要因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만을 국제비교하여도 <表 6-25>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1인당 배출량이 선진국들에 비해 대부분 높다.

<表 6-25> 主要國의 大氣汚染物質 排出量 比較

	공기		
	아황산가스 (kg/capita)	산화질소 (kg/capita)	이산화탄소 (ton/capita)
호주	-	-	16
오스트리아	10	25	7
벨기에	42	30	12
캐나다	107	68	16
덴마크	35	55	11
핀란드	28	53	10
프랑스	21	26	7
독일	56	36	11
그리스	51	15	7
아이슬랜드	33	88	9
아일랜드	53	37	9
이탈리아	30	36	7
일본	7	12	9
룩셈부르크	26	-	29
멕시코	-	-	4
네덜란드	11	36	11

資料: OECD, Environment Data, *Compendium 1993*, Paris, 1993.

_____, *Environmental Indicators-OECD Core Set*, Paris, 1994.

또한 <表 6-26>은 OECD 주요국의 대표적 하천들의 수질을 BOD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時點은 다소 다르지만 <表 6-26>과 <表 6-8>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의 하천과 이탈리아의 포강을 제외하면 OECD 국가의 주요하천들의 수질이 우리나라 4대강 하천 수질에 비해 조금씩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表 6-26〉 外國 主要河川의 水質 現況

(단위: BOD, mg/l)

국 가	하천	1970	1975	1980	1985	80년대 후반	최근 3년 평균
미 국	델라웨어	2.1	2.2	2.0	2.6	2.0	2.1
	미시시피	3.0	3.2	1.9	1.1	1.4	1.5
일 본	이시카리	1.9	1.3	1.5	1.5	1.5	1.3
	요도	5.2	3.0	3.7	3.6	3.3	3.5
호 주	브리스베인	-	1.5	1.0	1.2	1.2	-
프 랑 스	르와르	6.7	4.4	6.6	-	6.4	6.9
	라인	2.9	9.1	7.8	3.0	2.4	4.4
독 일	라인	6.1	7.9	3.9	3.8	2.9	3.1
	다뉴브	4.8	3.1	3.1	3.2	2.5	2.5
이탈리아	포	-	7.1	6.1	4.6	8.3	7.2
	티베르	8.3	-	9.5	2.0	-	-
스 페 인	그아달quivier	-	12.2	11.8	8.8	1.5	1.7
영 국	템즈	-	3.3	2.7	2.4	2.6	2.5
	마썸	-	8.6	-	5.0	5.9	5.1

資料: OECD,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1991.World Resources Institute, *World Resources 1988~89*, 1990.

국제비교를 통한 『환경 질』의 객관적 평가는 우리국민들의 環境 質에 대한 主觀的 評價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는 평가가 33.3%에 이르고 보통이라는 평가가 40.4%에 달해 약 73.7%가 현재 環境質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평가는 특히 人口密度가 稠密한 시부에 있어서는 심각과 보통의 비율이 각각 38.8%, 42.9%로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노력에 대한 평가도 약 45.4%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기오염도의 국제비교와 우리 국민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기존의 우리나라 환경 정책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질의 대폭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기환경 정책 체제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表 6-27〉 環境汚染 防止努力(1992)

(단위: %)

	전 국	시 부			군부
			대도시	기타도시	
노 력 함	54.6	58.6	59.8	56.5	41.8
보 통	28.9	27.3	26.9	28.0	34.1
노력안함	16.5	14.1	13.3	15.5	24.1

資料: 환경부, 『환경연감』, 1995.

〈表 6-28〉 環境汚染 程度 評價(1992)

(단위: %)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음			잘모름
		매우 심각함	심각한 편임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전국	33.3	4.6	28.8	40.4	23.5	18.4	5.1	2.8
시부	38.8	5.5	33.3	42.9	16.2	14.2	2.0	2.0
군부	17.3	1.8	15.5	32.9	44.9	30.8	14.1	5.0

資料: 환경부, 『환경연감』, 1995.

1. 環境稅制의 改善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같은 지시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環境稅(environmental tax)나 排出權去來制度(tradable permit)와 같은 경제적 유인정책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환경세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는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과 같은 직접세적 성격을 갖는 것과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 합성수지폐기물 처리 부담금 같은 간접세 형태의 환경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인책은 지시 및 통제수단에 비해 환경개선 효

과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효과적(cost effective)인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나성린(1995)은 실증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세는 환경오염 저감과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세의 경우 원유환산배럴당 선진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준인 10달러를 부과하면 총탄소배출량은 19.2% 줄고, 장기적으로 총세수를 약 14.02%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환경세 도입으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제성장 둔화도, 환경세 부과를 가능하면 국내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부터, 국제경쟁력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그리고 가격탄력도가 높은 제품부터 점차 도입하면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배출부과금제도는 직접규제와 벌과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직접환경세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많은 경우 오염자와 부담금 납부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직접환경세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본격적인 환경세 제도의 도입 이전이라도 기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오염 배출량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부문별 오염 기여도는 무슨 연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다른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기부문의 직접환경세는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를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농도기준의 총량규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의 규

모, 연료사용량 등을 근거로 효율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정기적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원조달의 안정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오염 발생원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제조부문과 생활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소비유통부문으로 구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유통, 소비부문에는 총배출량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생산제조업 부문에는 오염량 일부에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질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총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은 汚染者負擔原則(PPP: Polluters Pay Principle)에 입각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은 환경수요의 소득탄력성 같은 個人的 特性을 반영치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으로 얻게 되는 개인별 편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환경재 수요는 저소득층의 그것에 비해 높다. 環境財는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적인 재화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支拂用意費用(WTP: Willingness-To-Pay)은 個人別 所得과 正의 關係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환경세 부담은 租稅轉嫁 과정을 거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형평의 논리에 배치될 수 있다. 環境 質에 대한 개인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환경세 도입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조만간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용의비용 추정과 같은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용의비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정가능하나 조건부가치조사(Contingent Valuation Method)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附錄]은 조건부가치조사 방법에 의한 지불용의비용 추정방법을 개관하고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용의비용은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세 형태의 환경세 도입의 필요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환경세 부과 주체도 재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지구환경문제에서 지역적 환경문제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나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는 환경문제는 지역적 환경문제다. 환경오염도, 산업구조, 지역주민들의 환경수요 등에서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세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어렵다. 각 지역의 환경문제의 본질은 각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중앙부처가 환경세부과의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각자의 환경오염도와 환경수요를 감안하여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환경세부과권 인정은 최근 시작된 지방화 시대의 조류와도 상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환경세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점진적인 환경세 도입은 경제성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환경세는 대기부문과 수질부문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세 형태의 누진환경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環境産業의 育成

環境汚染問題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염원인물질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수동적 접근방법과 오염원인물질을 사용하되 사용방법을 개선하거나 사용 후 배출된 오염물질을 사후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적극적 접근방법이 있다.

汚染物質 사용을 단순히 억제시키는 受動的 方法은 오염물질 배출을 效果的으로 즉시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오염물질을 原料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커다란 隘路로 作用하여 經濟成長의 장애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갖고 있다. 환경오염이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지만 경제성장 둔화는 실업증가와 같이 더욱더 삶의 질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經濟成長을 희생시킨 環境保護도 環境汚染을 對價로 지불하는 經濟成長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성장 즉, 持續可能 成長(sustainable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持續可能한 成長의 可能性을 環境産業의 發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環境産業의 발전은 環境保護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經濟成長의 原動力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더우기 무역조치와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여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환경산업의 육성은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케 하는 거의 유일한 長期的 代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新經濟 5個年計劃 중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 산업계의 再活用 施策, 國際的인 環境規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中期計劃期間중 環境投資 所要는 12조 1,917억원에 이르며 公共部門 투자 소요가 6조 7,094억원, 민간부문투자 소요는 5조 4,823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원의 일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表 6-29〉 環境投資財源 總括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총 소 요	121,917	121,917	27,920	28,226	26,203	15,784
공공부문	67,094	67,094	14,040	15,181	15,928	12,632
민간부문	54,823	54,823	13,880	13,045	10,275	3,152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각년도.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公害防止法을 制定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시행했으나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오다가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수질 및 大氣汚染 防止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환경설비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단순설비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基礎科學과 관련하여 주요 核心技術 및 그에 연관된 기자재는 여전히 海外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설비산업의 生産規模는 제조업 전체의 0.3% 정도며 輸出額은 제조업 전체의 0.1%, 수입액은 0.39%로 수입이 수출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6-30〉 環境汚染 防止産業의 比重

(단위: 억 달러)

구 분	총업체수	종업원(천명)	생산	수출	수입
제 조 업	72,213	2,918	1,665	685	598
환경오염방지산업 ¹⁾	631	13	7.84	0.66	2.33
비 중(%)	0.81	0.45	0.47	0.10	0.39

註: 1) 환경오염 방지산업 중 폐기물 분야는 제외되었음.

資料: 상공회의소,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1993.

環境産業技術은 事後 처리하는 배출구기술(end-of-pipe technologies)과, 低汚染工程과 같은 淸淨技術(clean technologies)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산업기술은 事後處理技術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대체

로 단순설비 부분만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高級技術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高級環境産業技術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G-7프로젝트에 환경공학 기술개발을 과제로 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연구를 분장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뚜렷한 成果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實情이다.

선진 각국에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基底에는 自國環境을 보호하려는 기본적 목표가 있기도 하겠지만 매출액의 증대에 이은 신규 고용의 창출, 해외환경산업 시장진출로 인한 貿易收支의 改善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兩立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기인하기도 한다.

〈表 6-31〉 우리나라 公害防止技術의 等級 評價

(단위: 기술수준 100 기준)

	단순설비	중급설비	고급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85	70	15
수질오염방지설비	80	75	20
소음, 진동방지설비	85	65	10
폐기물처리설비	85	65	20

資料: 장태구,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KIEP, 1994.

환경산업 육성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이 있다. 국내시장기반의 취약은 환경기술 발달을 저해하였으며, 技術水準 및 研究費 投資의 절대액 및 비중도 선진국들에 크게 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수요의 증가와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은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를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협소한 시장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持續成長의 기틀이 되는 환경산업은 토건, 기계, 전기 전자부문 등의 분야로 구성된 綜合産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산업을 환경설비와 같은 건설업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산업을 구

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투자 육성하는 것은 투자여력, 투자효율 등을 감안해 볼 때, 크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적인 比較優位에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環境規制도 가능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亞黃酸가스 排出低減 改善方案

아황산가스 배출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이는 현재와 같은 規制方法으로는 향후 아황산가스 농도를 현격히 저감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료 사용규제 같은 규제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에서 脫皮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저황연료 사용확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황연료 需給均衡을 이룰 수 있는 저황유 공급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BC유의 경우 현재 1.6%, 1.0% 黃含有量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1.0%, 0.5% 중심의 생산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低黃原油 導入의 擴大와 脫黃設備 擴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황연료 도입은 점차 그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需要側面에서는 세계 각국이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저황연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供給側面에서도 세계 원유수급은 대표적인 고허원유인 중동산 원유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 확실하여 低黃原油 供給 增大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저황연료 需給上 乖離를 극복하면서 아황산가스 배출 저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배연탈황설비가 있다. 배연탈황은 高黃燃料 사용 후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아황산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

형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배연탈황 설비 도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는 이미 아황산가스 농도 저감을 위한 代案으로 배연탈황을 적극 활용하여 그 實效性を 인정하고 있다.

이동근(1996)은 만과 리첼스(Alan Manne and Richard Richels, 1992)가 공동개발한 Global 2100의 日本版 모형(Shimazaki and Morita, 1995)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에너지-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으로 배연탈황 설비 도입을 서두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근(1996)은 우리나라 大氣質改善度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환경비전21(施案)을 기초로 2001년 이후 아황산가스 농도를 0.01ppm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燃料轉換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고, 배연탈황시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배연탈황시설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소비연료의 대부분이 천연가스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12년에 이르러야 환경부의 大氣質改善程度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개별 사업시설에 배연탈황설비 설치 가능 여부는 사전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별 경제주체가 스스로 아황산가스 배출저감 방법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으로는 저황유사용 의무화와 같은 규제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배연탈황설비 도입을 포함한 모든 아황산가스 저감방법을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규제철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第 7 章 21世紀 韓國의 選擇: 「삶의 질」의 先進化

第 1 節 序 論

「삶의 질」의 先進化는 선진국의 발전전략을 답습하여 현재의 선진국 모습으로 指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歷史的 경험으로부터 敎訓을 얻고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재정립함으로써 世界를 앞서나가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21세기 經濟長期構想」은 2020년에 국민 1인당 所得水準과 經濟規模에 있어서 G7에 進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1세기 경제장기구상위원회, 1996). 그러나 이와 같은 G7 진입의 量的成長의 필요조건과 함께 충분조건인 保健, 福祉, 環境, 文化 등 여러 부문에서의 質的 측면이 향상되어야 한다. 즉 成長과 동시에 전반적인 삶의 질의 先進化를 이루지 않는다면 G7 진입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995년 3월 코펜하겐의 社會開發頂上會議에서 제기된 “人間安保”(human security) 개념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취한 경제성장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고도성장 이면에는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을 유발하였다. 즉 외형적 성장에 비해 환경, 교통, 사회안전 등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수출위주의 공업화 전략은 국제비교상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 개인서비스 등 국내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 투입증가와 자원재배분

효과,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축적, 기술혁신 등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은 초기단계 및 중간단계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 소규모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함에 따른 자원배분효과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에 기인했으나, 성숙단계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축적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전반의 효율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우리경제도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인바⁷⁰⁾ 향후의 성장잠재력 향상은 인력자원의 질과 동태적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좌우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이 軟着陸할 것임에 따라 소득수준의 안정적인 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問題는 成長優先의 不均衡發展戰略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부문의 均衡的 發展을 유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관련 부문과 經濟成長간의 均衡發展戰略을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인지에 대한 選擇과 調和의 解法을 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해결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지만 本章에서는 政府의 役割을 중심으로 어떤 戰略으로 국민 모두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本章의 구성은 제2절에서 삶의 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現位置를 國際比較를 통해 파악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제3절에서는 經濟成長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이론

70) 한국경제는 2000~2010년 기간에는 기준전망치로써 연평균 5.5%, 2010~2020년 기간에는 연평균 4.0%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1세기 경제장기구상위원회, 1996).

적·실증적 논의를 전개한다. 제4절에서는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國家發展의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고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제5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第2節 「삶의 질」의 現位置

1. 「삶의 질」의 概念과 範圍

삶의 질의 개념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며 객관화하기 어렵다. 특히 이론적으로 삶의 질이란 厚生(welfare)혹은 效用(utility)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개념의 이해와 계량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경제학적인 후생(welfare)의 개념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praag, 1993 참조). 삶의 질을 經濟的, 社會的, 環境的 觀點의 統合的 시각으로 개념화하여 持續可能的 發展⁷¹⁾(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파악한 견해는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되 生産的 資産(productive assets)을 미래에 걸쳐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unasinghe and Cruz, 1993).

1960~70년대 초반에 걸쳐 서구선진국들이 경험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물질적 생활여건을 개선시킴에 따라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동시에 經濟指標를 포함한 포괄적 지표로서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에 의해 삶의 질을 측정하려 하였다(Carley, 1983)⁷²⁾ UN, OECD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사회지표는 ‘社

71) 지속가능성의 개념이란 자본스톡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플로우의 극대화라는 Hicks-Lindahl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會的 關心事項에 대한 變化를 測定' 하는 것임에 동의하고 있으나 관심사항의 範圍와 分類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⁷³⁾.

社會指標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방법상의 改善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表 7-1>은 현재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하 『保社研』)에서 개발한 삶의 질 지표와 UNDP가 1990년에 개발한 人間開發指數(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여주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의 관심 영역은, 첫째 건강, 둘째 지식과 기술, 셋째 물질적인 생활수준에 두고 이러한 세영역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자기실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保社研』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개선하여 보다 多樣하고 包括적인 指標로써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72) 70년대말에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포괄적 지표에서 점차 특정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OECD(1978)의 도시환경지표, UNESCO(1982)의 문화통계지표가 있다.

73) UN이 정의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이 한 국가의 진정한 富이며,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오래, 건강하게, 창조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人間開發이란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며 經濟開發은 광의의 인간개발의 한 구성부분으로 이해한다.”(UNDP, 1995. 11) 한편 우리나라 統計廳에서는 社會指標에 대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態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量的인 측면은 물론 質的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가능케 하여 주는 尺度”로 정의하고 있다.

74) 이러한 지표는 평균적인 인간에 대한 지표이므로 남녀간 성별 격차를 고려한 지표인 GDI(Gender-equity-sensitive HDI)와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을 1995년부터 도입하였다.

〈表 7-1〉 「保社研」과 UNDP의 「삶의 질」 指標 比較¹⁾

부문		「보사연」의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경제	1인당 소득	· 1인당 GNP	· 1인당 국민소득
	경제규모	· GNP규모	
	경제활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남, 여) · 여성/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교육		· 문자해독률 · 고등교육취학률(남, 여) · 여성/남성의 고등교육취학률 · 초등학생 100명당 교원수	· 문자해독률 · 초중고등 평균취학률
보건		· 기대수명(남, 여) · 영아생존율 · 65세이상 인구비율	· 기대수명
문화		· 신문구독률 · TV보급률· 전화보급률 · 출판도서 보급률	

註: 1) 174개국 대상으로 비교하는 기준임.

資料: Anand, Sudhir & Amartya Sen, "Human Development Index: Methodology and Measurement",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UNDP, 1993.
Hag, Mahbubul,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 「삶의 질」의 現位置와 評價

삶의 질의 범위에는 상기 指標외에 많은 다른 指標를 포함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保社研」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分配, 福祉, 環境部門은 可用統計를 이용하여 국제 비교를 제시하였다.

〈表 7-2〉는 장래에 G7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중심으로⁷⁵⁾ 현재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았으며, 국민소득과 삶의 질의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상으로 나타난 국제적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成長과 삶의 질이

75) 7개국의 선정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 의해 2020년경에 한국을 포함한 G7에 진입하는 국가들로 구성하였다(21세기 경제장기구상위원회, 1996).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간 불균형에 유의하여야 한다.

〈表 7-2〉 「삶의 질」의 現位置(國際順位)

국가	전 체	「삶의 질」(1994년 기준)								HDI
		경 제				교육	보건	문 화		
			1인당 소득	경 제 규모	경제활 동참가					
한 국	29	29	31	13	56	28	59	23	31	
미 국	1	1	6	1	30	2	20	10	2	
일 본	8	2	3	2	21	33	3	8	3	
프 랑 스	11	4	9	4	24	9	9	21	8	
영 국	10	9	19	5	10	22	8	9	18	
독 일	13	3	7	3	33	27	13	14	15	
이탈리아	19	12	20	6	53	10	6	29	20	

註: 본 연구의 삶의 질 지수는 <表 7-1>의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主成分分析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에 의한 複合指標로 산정하였음. 인간 개발지수는 UNDP에서 추계한 Human Development Index임.

保健·교육과 노동시장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상대적으로 劣位에 있으며, <表 7-3>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期待壽命, 특히 男性의 기대수명이 낮으며 영아생존율이 아직 낮은 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특히 女性의 經濟活動 및 教育 機會의 不平等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主要因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건강의 질적 개선을 위한 保健政策, 교육환경의 개선, 경제활동기회의 확대를 위한 雇傭政策, 女性의 社會參與機會 증대를 위한 女性政策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表 7-4>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상하 5위권에 속하는 국가군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1人當 소득이 상위에 속하는 국가는 삶의 질의 순위가 소득수준의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우리보다 1人當 소득이 하위에 속하는 국가는 삶의 질 순위가 소득수준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7-3〉 우리나라가 相對的 劣位에 있는 「삶의 질」 部門

부 문	지 표	순위
보 건	기대수명(남)	59
	기대수명(여)	42
	영아생존율	58
	65세이상 인구	62
교 육	초등학생 100명당 교원수	100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	99
경 제	경제활동참가율(남)	71
	경제활동참가율(여)	59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1

註: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전체 국제순위(1994) 29위에 비하여 낮은 순위에 있다는 의미임.

〈表 7-4〉 類似한 所得水準에 속하는 國家와의 「삶의 질」 比較(1994)

국 가	1인당 GNP	삶의 질				
		전체	경 제	교 육	보 건	문 화
뉴질랜드	25	14	21	6	26	16
이스라엘	26	21	25	18	28	22
아일랜드	27	23	33	26	24	31
스페인	28	20	24	20	7	25
한국	31	29	29	28	59	23
리비아	32	82	149	37	118	58
아르헨티나	33	37	37	14	47	54
포르투갈	34	28	31	25	21	51
이란	35	108	88	111	92	109

註: 1인당 GNP 29위는 바하마, 30위는 사이프러스이며, 각각의 삶의 질 순위는 36위임.

이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비교상의 삶의 질의 순위 그 자체가 쟁점이 아니고 일정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선·후진국간의 삶의 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所得水準의 上昇 이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삶의 질」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한 分配, 福祉, 環境 등에 대

한 국제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分配의 경우 소득계층간 분배불균등을 측정하는 Gini계수로써 비교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분배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소득보다는 富의 편중도 등이 더 적절한 지표로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이다⁷⁶⁾.

〈表 7-5〉 分配, 福祉, 環境部門의 國際比較

국 가	소득분배	복 지	환 경			
	Gini 계수	복지지출/ GDP('90) (%)	산업 재해율 ¹⁾ (%)	도로교통 사망자수 ²⁾ (10만명당)	아황산가스 농도('91) ³⁾ ($\mu\text{g}/\text{m}^3$)	이산화질소 농도('91) ³⁾ ($\mu\text{g}/\text{m}^3$)
한 국	0.3355('88)	3.7('94)	0.340('92)	23.6('93)	123.2	94.2
미 국	0.3536('85)	14.8	0.021('91)	15.4('92)	36.7	76.1
일 본	0.2879('89)	11.1	0.010('91)	8.8('90)	26.0	43.0
프 랑 스	0.3219('79)	29.5	0.074('91)	15.8('93)	38.3	-
영 국	0.3236('79)	20.2	0.012('92)	7.3('92)	31.9	81.7
독 일	0.3005('84)	24.4	0.070('92)	9.4('91)	46.2	34.0
이탈리아	0.3196('86)	-	-	13.0('91)	55.7('88)	-

註: 1) 산업재해율은 46개국중 체코(0.758), 터키(0.468)를 제외하고 가장 높음.

2) 교통사고사망률은 100개국중 11위임.

3) 각국 首都를 기준으로 함(단, 이탈리아는 밀라노).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4.

統計廳, 『統計로 본 世界와 韓國』, 1995.

福祉에 있어서는 福祉財政의 對 GDP 비율로 비교하였는데,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같은 所得水準群에 속한 국가들과의 국제비교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⁷⁷⁾. 環境의 경우 국제

7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都市勤勞者家口의 지니계수는 1970~74년 0.295, 1975~79년 0.323, 1980~84년 0.315, 1985~89년 0.310, 1990~94년 0.286 으로서 분배가 악화되다가 다시 개선되고 있다(경제기획원, 각년도; 통계청, 각년도). 한편 1988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소득의 지니계수는 0.404, 資産의 지니계수는 0.579(금융자산 0.770, 실물자산 0.596)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88).

77) 保健福祉部門 財政의 對 GDP비율을 국제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적 기대치를 100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保健醫療 18.6, 社會保障 및 福祉 29.2 로써 상당히 취약하다(延河淸외, 1995).

비교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안되는 것이 분석한계로 작용하고 있지만 産災發生, 交通事故死亡, 大氣汚染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재해율은 46개국 중 3위, 교통사망률은 100개국 중 11위(사고발생률은 7위)이며,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및 분배, 복지부문 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國際的 位相은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第3節 經濟成長과 「삶의 질」

1. 分配, 福祉와 成長의 關係

本節에서는 經濟成長과 삶의 질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分配, 福祉 및 保健과 成長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成長과 分配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탐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이론적 배경은 限界效用遞減 原理에 의해 소득재분배로 인한 저소득자의 한계효용증가가 고소득자의 한계효용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은 증대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⁷⁸⁾.

한편 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Kuznets(1955)는 미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분배가 악화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개선된다는 逆U字型 假說(Inverted U Shape Hypothesis)을 정립하였다. 이 가설은

78) Hochman and Rogers(1969)는 效用은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자의 소득에도 의존한다는 가정하에,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移轉시킬 경우 발생하는 순한계효용의 증가가 멈출 때를 파레토最適再分配라고 보았다. Thurow(1971)는 소득분배를 純粹公共財로서 효용함수에 포함하여, 파레토最適(Pareto optimum)을 정의하고, 파레토최적에 이르도록 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은 전체적인 厚生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son and Lindert(1980)가 미국, 영국의 실증자료로써 검증하였고, Mizoguchi and Takayama(1984)는 일본의 실증자료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미국 經濟學界의 여러 분석들은 약간의 衡平性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效率性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적인 성격을 지닌 租稅制度 및 연금제도와 같은 社會保障制度가 갖는 經濟的 非效率性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⁷⁹⁾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分配가 適正한지는 경제학적 분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국의 國民的 情緒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한편 소득분배도 중요하지만 소득분배가 축적된 스톡으로서의 실물 및 금융자산 등 富의 偏重問題가 상대적인 삶의 질에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富의 집중은 성장과정에서의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 물가상승 등에 의한 資產所得의 증가요인에 의해 많이 좌우되었고,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산업, 금융, 재정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초의 안정정책은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분배의 악화를 완화시켰으며, 8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產業間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생산성, 임금, 기업복지 수준의 격차는 더욱 악화되는 構造的 兩極化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불평등요인을 시정하는 정책은 長期間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관점에서 그러한 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的 不均等下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短期的으로 정부가 福祉政策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所得과 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수단들에서 조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

79) 이와 관련한 논문들로서는 Auerbach, et al., 1983; Auerbach and Kotlikoff, 1987; Fullerton, 1991; Ballard, et al., 1985; Ballard, 1988; Browning and Johnson, 1984; Browning, 1987; Stuart, 1984 등을 들 수 있다.

가 있을 것이다⁸⁰⁾.

福祉制度는 분배상태에 대한 是正으로서의 再分配와 社會的 危險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性格이 강하다. 福祉가 成長에 負擔이 되는지 寄與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서, 복지가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는 복지지출이 자본축적과 생산성을 저해하여 성장을 억제하게 되며, 또한 누진적 조세제도는 저축 및 이윤동기와 근로의욕을 저해함으로써 자본축적 저해, 실업유발, 노동생산성 저하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지출확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福祉制度에의 의존을 높여 構造的 貧困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¹⁾ 한편 福祉가 成長에 기여한다는 論理는 복지제도(실업급여, 누진세등)의 自動安定裝置(built-in stabilizer)에 의해 불황기에 有效需要를 창출하고 호황기에는 景氣過熱을 緩和시키는 景氣調節機能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積立方式의 연금제도는 基金積立에 의한 資本蓄積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원마련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저축률을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은 人的資本의 손실을 방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에 대한 雇傭促進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교육·직업훈련은 人的資本의 質을 향상시켜 생산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관련 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각종 복지제도는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社會的 混亂을 방지함으로써 社會的 불안요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상 分配, 福祉와 成長間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三者間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財政·金融政策, 産業政策 및 福祉政策

80) 한가지 예를 들면, 富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형평적 차원에서의 相續稅로부터의 재원을 貧困의 대물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문(教育·生計·醫療保護, 自活對策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81) 또한 開放經濟下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복지부담은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시킴으로써, 국내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고용감소는 다시 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부담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책간 적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環境, 保健, 社會安定과 成長의 關係

먼저 環境·保健과 成長間의 關係를 보자. 自然資源을 투입要素의 하나로 하는 成長은 資源이 無限하지 않은 한 成長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生産과정에서 나타나는 廢기물과 有害成分은 自然環境을 惡化시키고 健康을 害치게 되는 關係를 形成하게 된다. 미래의 삶의 질에는 健康과 環境이 重要하게 등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環境과 國民保健의 質이 生産性確保의 바탕이 될 것이다. 環境이 保健에 미치는 影響을 推定한 研究을 보면, 미국의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통제로부터의 便益을 GNP의 1.2%(1978)로 推定하고, 그 편익중 64%는 國民健康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는 環境오염비용의 19.3%(1987)가 保健에 轉嫁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Pearce and Warford, 1993).

한편 環境, 社會安定과 成長間의 關係를 持續可能的 發展의 視覺에서 접근해보자. 1950~60年代의 발전과정은 經濟적 효율의 개념에 기초한 成長이 지배적이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분배에 관심이 모아져 衡平的 成長(equitable growth)이 重要하게 인식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自然環境破壞가 發展의 制約要因이라는 研究가 축적됨에 따라 環境보존이 개발의 제3의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 社會安定, 環境의 조화로운 観点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的 觀點이란 分배개선,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인간지향적이며 社會·문화적 체제의 安定성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環境的 시각은 전체 生態界體制(ecosystem)의 安定성에 필수적인 下部體제의 생존능력이 특히 重要하며, 도시와 같은 人工環境을 生態界에 포함시

켜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적이고 동태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연계 측면을 보면, 經濟的-社會的 관점은 세대내 형평(소득분배, 복지)과 빈곤구제, 經濟的-環境的 관점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環境費用의 內部化(internalization), 社會的-環境的 관점은 세대간 형평(미래세대의 환경권)과 대중적 참여 등으로 연계되어 진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실질적으로 통합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經濟的인 效率을 지속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Munasinghe and Cruz, 1995).

따라서 우리는 분배개선과 복지향상 그리고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經濟成長도 이룰 수 있는 “win-win” 戰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시키며 환경에 순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還流(feedback)過程을 통해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第4節 「삶의 질」의 先進化를 위한 政策課題

1. 21世紀 展望과 새로운 發展의 패러다임 摸索

가. 21世紀의 展望

21세기 한국을 전망하는 많은 문헌과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情報化와 그 결과로서 地球村化, 高齡化와 少家族化, 地方化, 統一韓國의 달성, 삶의 질의 重視와 概念의 變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情報化의 급속한 확산과 진행은 전세계를 地球村化(Globalization) 함으로써 모든 재화와 서비스, 특히 情報가 貿易可能한 交易財가 되어 전세계가 생산과 소비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의 역

할에 변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게임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축적과 질적 개선에 힘쓰고, 경쟁력향상을 위한 물리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적 환경의 개선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로 등장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生産性(productivity)에 대한 새로운 概念 정립이 요청될 것이다. 소비자만족, 인간적 문화욕구에의 부응 등 人間的인 삶의 價値가 부각되면서 產出의 量보다는 質이 중요해질 것이며, 投入에 있어서도 기술혁신, 지식, 정보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것이다. 環境과 生産性의 관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진보가 공해없는 高附加價値産業을 창출함으로써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老齡化와 少家族化 현상이 진행되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老人扶養 및 子女養育機能이 가족에서 社會로 代替될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는 住宅과 관련한 복지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미래사회의 價値觀은 人間性尊重이 될 것이며 자율적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多元主義가 강조됨에 따라 개인적인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발전정도는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다섯째, 地方自治時代가 향후에 정착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福祉欲求가 표출될 것이며, 또한 지역간 격차와 지역간 경쟁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調整役割이 요구될 것이다. 여섯째, 21세기 전망에 있어서 南北韓統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통일과정이 진행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의 완급이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한간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 새로운 체제에의 부적응, 지역간 격차해소 등의 福祉需要가 증가할 것이다.

나. 새로운 發展의 패러다임

21세기의 展望을 바탕으로 國家發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청되는데,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은 國家競爭力의 강화는 물론 “함께(福祉) 나아가는(成長) 共同體”의 성취에 두어야 하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반의 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은 「共同體的 市場經濟體制」의 구축으로써 국가발전의 추진주체는 政府에서 民間으로, 국가자원배분의 우선순위는 成長과 함께 均衡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된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보호와 통제에 의한 성장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인간의 창의와 자율 그리고 경쟁을 통해 경제·사회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발전 목표는 “富民安國”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生産的이고 成熟한 韓國型 福祉社會의 실현을 의미한다. “生産的 社會”란 국민 모두가 自立, 自助, 自活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知的 資産이 축적되어 삶의 질이 擴大再生産되는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成熟한” 사회란 범죄·사고·환경오염·실업·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용해될 수 있는 人間이 존중되는 안정된 사회를 의미한다⁸²⁾. 대외적으로는 世

82) 삶의 質 향상은 결국 人間の 문제이며, “人間開發”의 측면에서 Haq(1995)는 네가지 原則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生産性(productivity) 제고와 경제활

界秩序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位相을 제고하며, 南北韓의 공동번영을 위한 經濟統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선진한국에 적합한 세계인으로서의 새로운 價値觀과 市民意識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실질적인 厚生增進(welfare improvement)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장단점을 잘 가려 한국인의 意識과 思考에 적합한 발전모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서구에서 발전되어온 경제학적 분석들은 한국사회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一流國家를 지향할 때 기존의 일류국가 발전모형에서 벗어나 韓國型 資本主義의 發展模型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 政策課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은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 부문의 改善이 다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一般均衡的 觀點에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부문에 대한 政策的 優先順位에 따른 投資資源의 효율적 배분과 時差的 調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⁸³⁾.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동에의 참여, 둘째, 均等한 參與機會(equity)의 부여와 공정한 분배, 셋째, 參與機會의 未來世代에의 지속과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의 재충진(sustainability), 넷째, 發展이 ‘인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決定權(empowerment)이 부여되는 것이다.

- 83) 예를 들어,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는 생산비용을 높임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총생산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성장·후분배 정책은 국민소득이 낮고 저축률이 낮은 경우 타당할 수 있으나 일정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이후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소득불균형은 근로의욕과 국민적 연대를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는 부문간 相互作用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一般均衡模型을 구성하는 문제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당국에게 던져진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政策課題를 주요 主題別로 접근하기로 한다.

가. 生産性(競爭力) 提高와 「삶의 질」

生産性の 제고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이 競爭力 제고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중 특히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人的 資本(human capital)육성의 하부구조인 教育·訓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업이 리스트럭처링등을 통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도태시키는 것 보다는 능력자와 같이 공존시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도태에 따른 人力이 적합한 자리를 찾아가는 市場構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失業給與등 복지부담과 같은 社會的 費用을 정부가 안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태보다는 組織內에서 人力의 能力에 따라 適正配分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자리잡을 때 조직의 일체감이나 연대감이 형성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⁸⁴⁾. 동시에 도태나 적응하지 못하여 기업간 人力의 再配分이 필요할 경우 인력의 최적배분을 위한 雇傭情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기존 인력이 年齡에 따라 생산성과 신기술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職業教育·再訓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84) 『21세기 世界一流國家로의 도약을 위한 新노사관계 구상』(1996. 4)은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質 향상이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며, 그 5대원칙으로서 共同善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政府의 役割과 財政機能의 再定立

급속히 변화하는 民間部門과 世界市場의 흐름에 따라 세계각국의 글로벌게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政府가 신축적이고 역동적으로 改革하여 政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政府재정기능의 구조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⁸⁵⁾. 政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民間부문에 이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문은 民營化하고, 顧客滿足行政을 強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政府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政府役割의 構造的 轉換이 요청된다. 새롭게 요청되는 政府의 역할로서는 장래의 생산성향상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情報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산업 인재의 육성, 국민복지의 증진, 맑은 물의 공급 및 환경개선, 생활안전의 확보, 문화복지의 기반조성 등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부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政府역할의 전환에는 政府財政 우선순위의 構造的 變化가 수반되어야 한다. 民間으로 이양되는 부문의 예산과 조직은 감축되고 새로운 수요가 요청되는 부문의 예산과 조직은 확대되면서, 기존의 재정지출, 제도와 조직의 비용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政府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으면서 民間資源을 효율적으로 誘引하는 정책의 개발이 새로운 政府의 역할로 정립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民間자원 활용의 福祉部門의 예로서, 民間의 募金運動의 장려와 기업참여의 촉진,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종교계와 비영리단체의 참여유도, 실버산업·보육사업·在家福祉事業등에 대한 세제·금융상 유인제공을 들 수 있다. 政府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財源確保

85) 1996년 IMD(국제경영연구원)의 國家競爭力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政府部門의 경쟁력이 세계 46개국중 33위로서 지난 해의 24위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다.

는 세율의 인상, 新稅의 도입 등 추가적인 增稅보다는 歲出構造의 변경에 의한 재정확보, 세무행정 개선에 의한 課稅對象의 捕捉率 및 底邊擴大,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에 따른 衡平課稅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稅收基盤을 최대한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라 中央과 地方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요청된다. 地域의 質的으로 多樣한 需要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나, 地方의 自律化는 삶의 질에 관련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행정업무의 現基調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발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및 재원을 이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이양하되 광역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획업무이지만 지역특수성이 강한 업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재분배하고 국고보조금에 포괄성을 부여하여 융통성있는 대지역주민서비스를 지역별로 개발·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女性의 參與機會와 高齡者의 雇傭機會 擴充

女性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公共部門에서 적극적인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의 효과가 民間部門에 波及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女性에 의해 전담되던 子女養育 및 教育, 老父母奉養의 역할을 가족 내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保育施設의 확충,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彈力時間勤務制⁰, 在宅勤務制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취업기회의 확대는 복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勞動市場의 人力構造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年功序列制와 같은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조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⁸⁶⁾.

高齡化對策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有利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제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施行錯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韓國的 文化에 적합한 고령화대책을 새로이 정립할 것이 요청된다. 그 정책과제로서 노인부양의 부담을 社會福祉制度, 家庭과 個人間에 적정하게 분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고령자에 대한 雇傭市場의 構造的 轉換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 삶의 가장 基本的인 單位인 家庭이 2世代중심으로 변모하는 경향에 대해 3世代중심 家庭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고, 또한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稅制·金融上 支援을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3세대 家庭 속에서 자식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식세대는 3세대가정 구성에 의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와 가족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勞動市場에 있어서 정년연장 등 고용구조의 새로운 轉換이 요청된다. 향후 人口構造를 보면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고령화의 진행으로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전체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과이를 계속 신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 1인당 생산성이 인구증가율과 고령화속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전체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後者の 경우 生産年齡人口의 年齡上限이 고령화진행과 연계하여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壽命延長에 따라 인간의 潛在力을 계속

86) 한국사회에서 남성에게 집중된 사회활동의 부담과 이에 따른 여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의 제한을 해소하려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유도 및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하여야 선진국과의 삶의 질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이현송, 1995).

개발하여야 하는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각종 고령화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年金財政의 健全性도 확보될 수 있다⁸⁷⁾.

라. 分配의 改善과 福祉制度의 再定立

分配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여성 및 고령자의 參與機會의 확대와 教育機會의 균등, 公正한 競爭基盤의 조성 등 여러가지 측면이 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며 相對的 貧困과 같은 분배상태에 대한 불만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福祉制度의 재정립은 복지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敎訓을 얻어, 경제성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生産的·豫防的인 제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價値觀과 부합하는 韓國的인 福祉模型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첫째,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을 사회보험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축하여 基礎的인 保障을 하고, 일차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 이차적 안전망을 통해 國民最低水準(national minimum)을 보장함으로써 절대빈곤에 대처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운영의 費用效果性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制度와 組織의 連繫 및 統合과 情報網構築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복지부문에 民間資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財政的 介入에 의해 해결하려는 틀에서 벗어나 政策的 介入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병행·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삶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안정과 건강성을 회복·유지·보장하기 위

87) 현재 인구전망에 의하면 노인부양비(65세 이상/15~64세 인구)는 '95년 8.0%, 2000년 9.4%에서 2020년 17.3%, 2035년 30.1%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금부양비(연금수급자/연금가입자수)는 2010년 11.5%, 2020년 26.5%, 2035년 47.5%로 전망되고 있다. 2035년경 거의 생산활동인구 3명이 1명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안게 된다.

해서 家族福祉機能을 강화하기 위한 支援이 재정, 금융, 고용정책 등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⁸⁸⁾.

마. 健康의 質 向上과 保健醫療 改革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고령화, 만성질환비중의 증대, 의과학 기술의 발전 등 보건·의료부문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보험의 낮은 수가체계는 의료공급자 재정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의료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尙後 보건·의료부문의 개혁 및 발전목표는 의료서비스의 質的 향상,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 및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5년부터 의료서비스분야의 外國人投資가 허용됨에 따라 醫療市場이 더욱 開放될 것이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분야의 투자와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 측면과 保健醫療서비스의 질적 향상 측면을 연계하기 위하여, 첫째, 보건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원의 적정배분의 관점에서 一次醫療機能과 醫療傳達體系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의료기관간 환자에 대한 醫療情報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민간병원과 기능상 차이가 없는 공공병원의 적정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醫療保險은 健康保險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급여범위가 조속히 확대되어 국민의 醫療接近性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財政增加는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88) 福祉의 선진화를 위한 자세한 논의는 延河淸외(1995) 참조. 한국의 경제사회개발과정과의 관련에서는 Yeon(1989)과 Yeon et al(1995) 참조.

老人, 障碍人, 貧困層에 대한 의료혜택의 부여와 기회확충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국민보건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해 應急醫療體系와 食品·醫藥品 안전관리체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생명공학, 의공학 등 保健科學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분야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바. 持續可能的 發展을 위한 環境의 維持·保存

環境問題는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일 것이며, 환경의 개선은 國民健康에도 직결된다. 또한 21세기에는 環境과 貿易을 연계하는 “環境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 및 자연자원소모로 인한 費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生産物의 價格은 社會的 限界費用(생산의 한계비용과 환경파괴의 외부비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격을 부과하는 수단으로서는 오염배출기준의 규제, 環境稅, 使用者負擔(user charges)등이 있다. 이에 따르는 경쟁력의 약화 문제는 國際的 協議(예: Green Round)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시아권에서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環境産業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附加價值를 높임과 함께 환경의 질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도시 및 지역개발시에는 일정비율의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국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국토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經濟政策이 環境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環境이 經濟的 厚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情報가 정부, 기업 및 가계에 제공되어 認識과 行態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사. 餘暇와 文化生活水準의 向上

餘暇時間의 質은 삶의 질과 직결되며, 좋은 여가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으로서 결국 環境, 健康의 質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經濟成長과 社會福祉가 國民의 物質的·經濟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文化福祉는 정신적·문화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韓國의 文化的인 自矜心이 없이는 향후 G7 국가로의 진입은 그 빛이 바래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고 社會病理現象을 문화적으로 치유하는 豫防的 文化福祉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증대와 함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 레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활주변에 공연장, 전시관, 예술관등 基本的 文化施設의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벽지, 공단 등에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하여야 하겠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건전한 여가를 위하여 生活體育施設 및 公園등 휴식장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레저 산업육성이 필요하며, 셋째,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旅行이나 觀光을 통한 여가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休息, 觀光, 스포츠를 겸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여가시설은 SOC투자와 주택, 교통 및 토지개발정책 등과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凡政府的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 韓民族共同體의 形成과 『삶의 질』

南北韓 經濟관계 발전의 정책과제 설정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을 내다보면서 예견되는 對內外 與件과 環境의 變化를 점검하

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충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단계별 접근 방안을 찾는 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 이후 반세기 가까이 상반된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 체제간의 이질성 정도가 과거의 어느 분단국가보다도 크므로 점진적인 경제·사회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南韓은 政治制度 側面에서 多黨制, 民主主義, 그리고 經濟制度 側面에서 시장경제, 의사결정의 분권체제, 경제적 유인의 강조, 사회제도 측면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반면 北韓은 政治制度的인 側面에서 일당지배, 전체주의, 그리고 經濟制度 側面에서 계획·중앙집중경제, 사회적 규범의 강조, 社會制度 側面에서 집단주의, 통제 및 조직중심의 사회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항은 통일방법으로서 이에 따라 통일된 국가의 형태가 규정될 뿐 만 아니라 통일된 사회의 발전 가능성도 결정되므로 평화적-민주적-단계적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한국인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統一의 진정한 의미가 韓民族 全體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하여 南北韓이 하나가 되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 그리고 文化的 成熟과 社會的 一體感을 이루어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신뢰회복과 경제사회통합에 대한 기본개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窮極的인 目標: 自由民主主義 統一國家의 樹立
- ② 中間目標: 平和共存 및 民族經濟·社會의 同質化 追求
- ③ 短期目標: 南北經濟·社會交流擴大

이와 같은 段階的 基本概念에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민족 성원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통일, 민족사회 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통일은 결국 平和

共存이 보장되는 統一이다. 이는 南北韓 經濟協力을 통한 民族經濟共同體 形成과 政治的 統一의 成就是 민족적인 과제의 완결을 의미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의 새로운 跳躍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선 상에서 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第5節 結 論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국내외 환경은 새로운 變化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우리에게 도전이며 또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한국사회의 모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生産的이고 성숙한 사회를 의미한다. 生産的 국가사회란 국민 모두가 自立, 自助, 自活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자산이 축적되어 삶의 질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지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성장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으나 외형적인 최고·최다의 것을 가능한 빨리 성취하는 것만이 至高至善의 목표라는 잘못된 量의 價値觀이 형성·확산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개도국의 수준에 있으나, 물질생활은 선진국 수준으로서 의식과 행동사이에 여러 가지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비교상 우리의 『삶의 질』지표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삶의 질의 現位置를 경제·교육·보건·문화부문의 종합지표로 평가할 때 한국의 현위치는 세계 174개국 중 29위로, 국민보건(59위), 경제활동참여(57위), 여성의 고용(59위) 및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취학률(99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지

표 이외에도 富의 偏重, 복지재정, 산재, 교통사고 및 환경 등 사회안전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의 환경변화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과 진행은 전세계를 지구촌화 함으로써 각국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제기된 人間安保(human security) 개념에 따라 자국민의 삶의 질 向上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게임에 주력할 것으로 인적자본의 축적, 질적 개선은 중요한 향후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生産性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産出의 量보다는 質이 더욱 중요하여 질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더욱 전가시킬 것이며, 地方自治時代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이다. 넷째, 미래사회는 개인적인 삶의 질이 중시되며 국가발전정도는 국민의 삶의 질로서 평가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양측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청되는데,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함께(福祉) 나아가는(成長) 공동체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은 「共同體的 市場經濟體制」의 구축으로서 국가자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지속적 成長부문과 함께 삶의 질 向上에도 균형되게 두어져야 한다.

삶의 질 先進化를 위한 具體的 政策課題로서는 첫째, 삶의 질과 競爭力提高가 상호 작용하여 상승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발전모형으로써, 정부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문은 이양하고 顧客滿

足行政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財政的 支援 뿐만 아니라 政策的 介入의 『틀』을 보강하고, 民間資源을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부정책의 構造的 轉換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彈力時間勤務制, 在宅勤務制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高齡者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年功序列制와 같은 장애요인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分配의 개선은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福祉制度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와 함께 生産的·豫防的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健康의 質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는 예방·건강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持續可能的 발전을 위해서 環境破壞의 사회적 비용을 內部化하고 環境産業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文化福祉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공간, 생활체육시설, 휴식·관광시설이 국토개발정책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 과정은 量的 성장중심의 부분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일반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과거 누적된 量的 價値觀으로부터 質의 價値觀으로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며 각 경제주체별로 공직윤리(奉仕), 기업윤리(淸富), 근로윤리(勤勉), 소비윤리(儉約)를 정립하으로써 공동체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서 分配改善·福祉制度의 성숙화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함께 보건향상·환경개선·문화선진화 등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win-win”전략을 위한 국가장기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강승필, 『交通混雜費用』, 『無秩序의 經濟的 費用에 관한 研究』(주학중·박명호 편저), KDI 국민경제연구소, 1995.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청, 『都市家計年報』, 각년도.
- 김경동, 『발전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79.
- 김승우·김정인·윤여창, 『環境計定體系 構築方案 研究』,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 김홍균·임종수, 『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 나성린,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환경기술개발원 정책토의 자료집 KETRI/1995/PR-02』, 1995.
- 대우경제연구소,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1995.
-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1995. 3. 23일.
- 박명수,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無秩序의 經濟的 費用에 관한 研究』(주학중·박명호 편저),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 박성복, 『지역발전격차의 분석시론 : 1994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2호, 1996.
- 박주현,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및 비용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외,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995. 5.
- 延河淸 외,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國民福祉의 基本構想』, 국민복지기획단, 1995.
- _____, 『복지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11.

- 윤순창·이용근·김윤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2
- 에너지경제연구원·상공자원부,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연구』, 1994.
- 에너지경제연구원·통상산업부,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 21세기 경제장기구상위원회, 『21세기 한국경제의 위상』, 한국개발연구원, 1996. 5.
-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 이현송, 『한국인의 「삶의 질」: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장영채, 『道路交通事故로 인한 社會的 費用』, 『無秩序의 經濟的 費用에 관한 研究』(주학중·박명호 편저), KDI 국민경제연구소, 1995.
- 장태구,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0.
- 정규현·배규한·이달곤·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성장·복지·환경의 조화』, 나남출판, 1994.
- (주)미디어 리서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보고서(공보처위탁 조사보고서)』, 1995. 10.
- 주학중, 『소득분배연구에 있어서 소득의 개념과 결정요인』, 주학중 편,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 ,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1 여름호.
- ,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課題와 對應方向』,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1 가을호.
- 주학중·박명호 편저, 『無秩序의 經濟的 費用에 관한 研究』,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입체분석』, 1995.
- 崔鎔一, 『Green GNP制度의 導入에 따른 環境影響評價制度 改善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994.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의식조사』, 1988.

_____,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I): 總括編』, 1995.

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한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86.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1995.

_____,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1987.

한성덕, 「국민복지측정의 방법론적 고찰」, 『사회복지연구(제12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84.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1994)』, 1995.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각년도.

_____, 『환경백서』, 각년도.

_____, 『환경비전21』, 1996.

日本 總務廳統計局, 『社會生活統計指標』, 1995.

日本 國民生活センター編, 『くらしの統計』, 1990.

日本 內閣總理大臣 官房廣報室(總理府), 『國民生活に關する世論調査』, 平成7年(1995) 5月.

日本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編, 『신국민생활지표』, 平成 7年(1995).

Adelman Irma and Cynthia 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67.

Anand, Sudhir & Amartya Sen, "Human Development Index: Methodology and Measurement,"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UNDP, 1993.

- Auerbach, A.J., L.J. Kotlikoff, and J. Skinner, "The Efficiency Gains from Dynamic Tax Reform,"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Feb. 1983.
- ,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Ballard, Charles L.,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of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8.
- Ballard, Charles L., John B. Shoven & J. Whalley,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s of the Marginal Welfare Cost of Tax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85.
- Bank Harbison, Frederick H., Joan Maruhnic, and Jane R. Resnick, *Quantitative Analysis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Univ. Press, 1970.
- Bartelmus, Peter, *Towards a Framework for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Information and Policy Analysis, Working Paper Series No. 7, New York, 1994.
- Browning, Edgar K., "On the Marginal Welfare Cost of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87.
- Browning, Edgar K., William R. Johnson, "The Tradeoff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 1984.
- Bartelmus, P. "Towards a Framework for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Information and Policy Analysis*, Working Paper, Series No.7, New York, 1994.
- Becker, G. S.,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Sept. 1965.
- Bennett, M. K., "International Disparities in Consumption Level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1.

- Carley, M.,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George Allen and Urwin: London, 1983.
- Cameron, Trudy Ann and Michelle D. James, "Efficient Estimation Methods for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7. pp.269~276.
-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Social Trends*, 1990
- Davis, J. S., "Standard and Content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5, No.1, March 1945.
- Dillon, W. and M. Goldstein, *Multivariate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 1984.
- Drewnowski, Jan,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70.3, Geneva, 1970.
- ,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 Economic Council of Japan, *Measuring Net National Welfare of Japan*, Tokyo, 1973.
- Engel, E., "Die Produktions- und Konsumptionsverhältnisse des Königreichs Sachsen", *Die Lebenskosten belgischer Arbeiterfamilien*, Anlage I, Dresden, 1895.
- Fullerton, Don, "Reconciling Recent Estimates of the Marginal Welfare Cost of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8.
- Goodstein, Eban S.,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Prentice-Hall 1995.
- Hagen, Everett E.,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1968.(Chp. I: Some Characteristics of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 Haq, Mahbubul,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ochman, Harold M., and James D. Rodgers,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9, Sep., 196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4.

- IPCC, "Policymakers Summary of the Scientific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PCC Report*, June 1990.
- Juster, F. T., "A 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1973.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4, 1955.
- Kuznets, S., *National Income and its Composition, 1918~38*, Vol. II, 1941.
- , *Problems in the Study of Economic Growth*,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9.
- Lancaster, K. J., *Consumer Demand: A New Approac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 Lewis, A. W., "Economic Development of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edited by Agarwalar, A. N. and S. P. Singh, 1968.
- Maddala, G. S.,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Magrabi, F. M. and Y. S. Chung,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1991.
- Mihalyi, Peter, "Book Review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7, 1993.
- Mizoguchi T. and N. Takayama, *Equity and Poverty under Rapid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Experience*, Kinokuniya Co. Ltd., Tokyo, 1984.
- Morris, M. d. "Measuring the Condition of the World's Poor: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Overseas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 Munasinghe, Mohan and Wilfrido Cruz, *Economywide Policies and the Environment: Lessons from Experience*, 1994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NNW Measurement Committee, Economic Council of Japan, *Measuring Net National Welfare of Japan*, Tokyo, 1973.
- Nordhaus, W. D. and Tobin, J., "Is Growth Obsolete?", *Economic Growth, Fiftieth Anniversary Colloquium V*,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eneral Series 96, New York, 1972.
- Nussbaum, Martha and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1993.
-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76.
- _____,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June 1973.
- _____,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 _____, *Environmental Damage Costs*, Paris, 1974.
- Pearce, D. W. and J. J. Warford, *World Without End: Economic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Sametz, A. W.,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Economic Growth", *Indicators of Social Change*, edited by E. B. Sheldon and W. E. Moore,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1968.
- Scanlon, Thomas, "Value, Desire, and Quality of Life",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1993.

- Schwabe, H., "Das Verhältniß von Miethe und Einkommen in Berlin", *Berlin und Seine Entwicklung: Gemeinde-Kalender und städtisches Jahrbuch für 1898*, Mit einem Nachwort von Dr. H. Schiebel, 1966.
- Sen, A., *Commodities & Capabilities*, North-Holland, Amsterdam, 1985.
- , "The Standard of Living: Lecture I, Concept and Critiques", G. Hawthorn, (ed.), *The Standard of Liv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 "Capability and Well-Being",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1993.
- Solow, R., "On the Intergenerational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88, No.1, 1986.
- Stigler, G. J., "The Early History of Empirical Studies of Consumer Behavior",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LX II, No.2, April 1954.
- Stone, Philip J., "Models for Everyday Time Allocations", in E. B. Sheldon and W. E. Moore 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68.
- Stuart, Charles, "Welfare Cost per Dollar of Additional Tax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4.
- Slottje D. et al.,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Strumpel, Burkhard (Ed.),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Papers Presented at a Seminar of the OECD, Paris, May 15th ~17th, 1972.
- Sufian, Abu Jafar Mohammad,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rban Quality of Life in the World's Largest Metropolitan Areas", *Urban Studies*, Vol.30, No.8, 1993.

- Terleckyi, Nester 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stimates of Pos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4~83*,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75.
- ,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Estimates of Pos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4~83*, Dasgupta, Partha and Martin Weale,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orld Development*, Vol.20, No.1, 1992.
-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Environment Paper No.10*, 1995.
- Thurow, Lester C., "The Income Distribution as a Pure Public Goo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5, 1971.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Annual Report, 1991~1995.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 Press, 1995.
- U.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 Van Praag, B.M.S., "The Relativity of the Welfare Concept",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1993.
- Williamson, J. G. and P. H. Lindert, *American Inequality*, Academic Press, 1980.
- Wingo, Lowdon, "Objective, Subjective, and Collective Dimension of the Quality of Life", *Public Economics and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Lowdon Wingo and Alan Eva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 Yeon, Hacheong, *Soci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ations of Equity Versus Efficiency Issue in Policy-Mak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
- , *Social Development in Korea: An Overvie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5.